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 이기태 · 김두승 · 송화섭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현대일본학회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 이기태 · 김두승 · 송화섭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현대일본학회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인 쇄 2013년 12월
발 행 2013년 12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통일정책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3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표지·레이아웃 두일디자인 (02-2285-0936)
인 쇄 처 두일디자인

가 격 8,000원
ISBN 978-89-8479-745-1 93340

© 통일연구원, 201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3-26-01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총괄보고서)	통일연구원
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연구	현대일본학회
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김 동 수 부연구위원 박 영 호 소장/선임연구위원 이 기 현 부장/부연구위원 임 강 택 실장/선임연구위원 전 병 곤 소장/선임연구위원 조 한 범 선임연구위원 강 동 완 교수(동아대) 김 갑 식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김 태 환 교수(국립외교원) 김 현 택 교수(한국외대) 박 인 휘 교수(이화여대) 서 동 주 책임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 상 진 교수(광운대) 이 동 릉 교수(동덕여대) 정 기 응 책임연구위원(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소)
협력 연구 기관	현대일본학회	이 기 태 전문연구위원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김 두 승 연구위원(한국국방연구원) 송 화 섭 책임연구위원(한국국방연구원)

목차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 김두승 · 송화섭

I. 서론	1
1. 연구 목적	3
2. 연구 범위	6
3. 연구 방법	7
II. 한국의 對일본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9
1.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 입장과 정책	11
가.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 실태	12
나.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의 내용 및 특징	19
2.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22
가. 對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인식	22
나. 한국의 對일본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체계	36
다. 한국의 對일본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추진 실태	44
3. 전문가 인식조사	95
가. 전문가 인식조사의 특징	95
나.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분석	98
다. 전문가 인식의 특징	124
III. 결론: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에 주는 시사점	129
1. 한국의 對일본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평가	131
가.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 입장과 정책 평가	131
나.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평가	132
다. 전문가 인식조사의 특징	142
2. 對일본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의 시사점 및 과제	148
가.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 입장과 정책 시사점 및 과제	148
나.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시사점 및 과제	151

목차

참고문헌	161
최근 발간자료 안내	165

표목차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 김두승 · 송화섭

<표 II-1> 한국 통일에 대한 한국인과 일본인 여론조사 결과	22
<표 II-2> 일본 내각부의 외교에 관한 여론 조사	26
<표 II-3> 한일공동 여론조사	31
<표 II-4> 한일공동 여론조사	33
<표 II-5> 한일공동 여론조사	35
<표 II-6>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추진 주체	39
<표 II-7> 국민의 정부의 통일관련 일본어 간행물	45
<표 II-8> 한반도 전문가 회의 개최 횟수	48
<표 II-9> 참여정부의 통일관련 일본어 간행물	49
<표 II-10> “ROK-Angle-Japan”의 주제별 분포 현황	57
<표 II-11> 한미일 3자 안보협력회의 개최 현황	60
<표 II-12> 학술회의/포럼 등 개최 현황	62
<표 II-13> 2000년 이후 한일포럼 개최 현황 및 주요 의제	64
<표 II-14> 일본에서 흥행에 성공한 분단·통일 관련 영화	80
<표 II-15> ROK-Angle의 對일본 통일관련(북핵) 이슈 현황	88
<표 II-16> 한일학술회의 북핵문제 논의 현황	90
<표 II-17> 한일포럼 북핵문제 논의 현황	91
<표 III-1> 한국, 일본 국민이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국가	146
<표 III-2> 한국, 일본 국민의 양국 간 군사협력에 대한 입장	146

그림목차

<그림 II-1>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 조사 결과 (1978~2012)	17
<그림 II-2> 한반도 국제포럼 2013 (도쿄)	53
<그림 II-3> 소속 기관	97
<그림 II-4> 업무 경력	98
<그림 II-5>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 성과 평가	99
<그림 II-6>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	100
<그림 II-7> 한국 공공외교의 추진 체계	101
<그림 II-8>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	102
<그림 II-9>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	103
<그림 II-10>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	103
<그림 II-11> 한국 공공외교 프로그램별 비중	104
<그림 II-12> 한국 공공외교의 대상 지역	105
<그림 II-13>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평가	106
<그림 II-14>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를 접한 경로	106
<그림 II-15> 일본 국민들의 한반도 인식에 대한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기여도	107
<그림 II-16>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일본인의 한반도 인식에 기여한 분야	108
<그림 II-17> 한국 통일공공외교가 중시해야 할 추진 대상	109
<그림 II-18> 한국 통일공공외교가 상정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 형태	110
<그림 II-19>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장애요인	110
<그림 II-20>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중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	111

<그림 II-21> 일본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원 유도에 관한 통일공공외교의 기여도	112
<그림 II-22> 한국 통일공공외교가 중점을 두어야 할 목표	113
<그림 II-23> 북한 변화 유도를 위한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추진 중점	114
<그림 II-24> 한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체계의 특징	114
<그림 II-25>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핵심 추진 주체	115
<그림 II-26> 지난 15년간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성과에 대한 평가	116
<그림 II-27> 정부별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성과 평가	117
<그림 II-28>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 평가	118
<그림 II-29> 북한의 핵개발 의도	118
<그림 II-30>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추구하는 목표	119
<그림 II-31>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일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120
<그림 II-32>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일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낮은 이유	121
<그림 II-33>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일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높은 이유	121
<그림 II-34> 북핵 정책 수행 시, 일본 정부의 일본 국내여론 수렴도	122
<그림 II-35> 북핵 관련 한국 공공외교 추진 주체	123
<그림 II-36>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 추진체계 특징	124
<그림 III-1> 일본의 한반도 통일 지지 조건	143
<그림 III-2> 향후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144

그림목차



<그림 Ⅲ-3>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고 있는 분야	145
<그림 Ⅲ-4> 현행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 중점 분야	147
<그림 Ⅲ-5> 향후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148
<그림 Ⅲ-6> 일본 국민의 독도에 대한 인식 경로	158



I 서론

1. 연구 목적

한반도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남북통일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독특한 국제적 특성을 가진 문제이기도 하다. 이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한국이 남북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책기조, 나아가 주변국 국민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¹

그동안 한국의 통일외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는 주로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부차적인 일본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추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처,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일본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될 중요한 안보자산이다. 특히 한반도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3국의 안보군사협력관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비로소 해결 가능한 사안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역할(후방지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 나아가 주일미군의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안보기재 중 하나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한반도 유사

¹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 정부와 일본인 간에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양자 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그 차이의 극명함을 자료에 입각해 규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양자를 구분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시 미군의 증원전력은 일본 국내에 위치하고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²를 통해 한반도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은 미일동맹 체제 하에서 한반도 전장에 임하게 되는데, 이러한 한반도 유사 상황에 대해 주일미군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후방지원 역할 수행이 필수불가결하다.

이상을 고려하여 한국은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확고히 하여, 일본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 세력으로 유도해 나가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른바 ‘과거’ 문제로 인해 악화된 최근의 한일관계는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전후 한일관계는 ‘가깝고도 먼 나라’의 관계라고 곧 잘 형용되곤 한다. 이는 전후 한일관계의 부침을 대변하는 표현이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경제, 문화적 측면의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양국 간 안보군사협력 가능성이 활발하게 논의될 정도로 긴밀한 관계가 되었다. 그러나 한일관계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에는 여전히 ‘과거’ 문제로 인한 상호 불신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2년 5월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서 보듯 ‘과거’ 문제로 인해 한일 양국은 상호 간 안보군사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실패하였다. 그 후 한일 양국에 각각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시점에도 한일관계의 개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일 양국이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 실현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한국

² 현재 일본 국내에는 자마 기지, 요코스카 기지, 요코타 기지, 사세보 기지, 후텐마 기지, 가테나 기지, 화이트비치 지구의 7개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다.

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남북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될 안보자산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그동안 한국은 일본 정부 및 관료를 주요 대상으로 한 전통방식의 한반도 통일외교를 전개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의 이러한 지지를 보다 더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문제, 인권문제, 특히 일본 정부가 중시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문제와 같은 현안에 대해 전통적인 외교정책에 더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책을 적극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안보적 노력을 일본 정부 및 관료, 일반 일본인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이해시켜 나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남북통일에 대한 일본 정부를 비롯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확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냉전 시절 대외정책 추진의 주요 행위자였던 정부와 주요 수단이었던 정치적 영향력은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의 다양화 및 다변화, 외교매체의 혁신, 열린 소통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인 발달과 상용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소프트 파워 내지는 문화외교로 대표되는 공공외교가 국가 간 혹은 사회 간 관계를 정립하는 중요한 외교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최근 한국 정부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수단과 매체를 통해 공공외교를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 그동안 한국이 추진해온 일본 정부 및 관료를 주요 대상으로 한 전통방식의 한반도 통일외교에 더해,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한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에 공공외교를 접목시킨 ‘한국의 對일

본 통일공공외교'라는 새로운 관점에 입각해 그 추진체계와 추진실태에 대해 고찰·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의 추진실태를 사실적 측면과 한일 양국에 거주하는 일본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경험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의 특성을 파악하는 동시에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식별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연구 범위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의 정책기조와 추진내용, 나아가 한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일공공외교의 핵심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일 양국의 일반인들이 상대방 국민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 내지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찰 방법은 그 분석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하여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 특히 통일공공외교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오히려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에 대해, 그 추진체계와 추진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의 실태에 대한 고찰에 앞서,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 정책을 고찰하여 對일본 통일외교의 실태 및 내용, 그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둘째,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의 추진 실태에 대해 고찰·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한국 인식, 특히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고찰하는 한편, 일본 국민들이 한일협

력의 필요성 및 협력분야 등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셋째,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의 체계를 ‘목표, 주체, 자원 및 자산, 매체, 대상’의 5가지 관점에서 살펴본 후,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와 통일 관련(북핵문제) 공공외교의 추진실태에 대해 고찰·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를 보다 더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일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면밀히 고찰·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의 특성을 정리하고, 향후 한국 정부가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함에 있어 개선해야할 과제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가 수행하고 있는 통일공공외교는 ‘한국 정부 및 민간(주체)이 소프트파워를 자산(자원 및 자산)으로 상대국 국민, 그리고 글로벌 스페이스를 대상으로(대상) 한반도 통일의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자발적 이해와 공감, 그리고 지지를 얻기 위해(목표), 열린 소통과정을 통해서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 그리고 통일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알리고 설득하는(과정 및 매체) 비전통적인 외교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³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이상과 같은 정의 하에, 본 연구는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의 추진실태에 대해 고찰·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의 추진실태를 1)지식외교, 2)문화외교, 3)한국학/미디어/스포츠외교 등, 4)통일관련(북핵문제 협력 유도) 공공외교의 4개 영역으

³ 김태환, “한국 공공외교 수행체계와 ‘통일공공외교’의 분석틀,” 황병덕 외,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Ⅱ)』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50.

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이들 4개 영역 내에서 정부 차원(1.0트랙), 반민반관/준정부 차원(1.5트랙), 민간 차원(2.0트랙)으로 구분하여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의 추진실태에 대해 고찰·분석한다.

단,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분석 틀에 입각해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의 추진 실태에 대해 고찰·분석하되, 4개 영역 및 동 영역 내의 3개 고찰방법(1.0/1.5/2.0트랙)의 적용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한다. 특히 4개 영역 내의 3개 고찰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정부 차원의 추진실태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감하게 생략 또는 반민반관/준정부 차원의 추진실태로 대체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가 이들 3개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는 정부기관과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과 민간단체, 정부기관과 민간단체와의 연계 등 다양한 상호 관계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수행 방법에 입각해, 우선 본 연구는 문헌 정보를 통한 분석을 실시한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對일본 통일외교 및 통일공공외교의 역사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발표 자료와 이와 관련된 학술논문 및 연구서, 국내외 연구기관의 정책연구보고서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의 추진체계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외교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정부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립외교원,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반민반관/준정부기관,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면밀히 조사·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의 추진체계 및 그 실태에 대해 일본 전문가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II

한국의 對일본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1.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 입장과 정책

통일외교단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에 도움이 되고 동아시아 및 세계의 번영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활동”⁴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對일본 통일외교는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과 동북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일본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외교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통일외교는 통일공공외교와는 달리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통일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지지와 협력을 얻어내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주로 정부 대 정부 간의 외교활동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 대한 통일외교를 분석하고자 한다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통일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을 전개하였는가, 혹은 양국 간에 통일과 관련되어 어떤 내용이 언급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더라도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를 검토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한일관계는 일본의 과거사 망언, 영토문제 등으로 거의 주기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상황에 따라 한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신뢰나 호감도는 물론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신뢰나 호감도 역시 동시에 악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한국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는 통일외교가 과연 악화된 한일관계 속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일외교라는 큰 틀 속에서 통일외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대북정책,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일본의 지지와 협력 여부도 통일 기반 조성 및 밀접하게 연관되어

⁴ 통일부, 『201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3), p. 65.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도 포함시켜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를 검토하기로 한다.

가.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 실태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의 대일정책 속에서, 그리고 △한국의 북한 핵문제에 관한 정책과 연관시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일정책과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라 주기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어왔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11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의 망언이 건국 이래 30여 차례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에는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기어이 고쳐야겠다”⁵고 발언하여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김대중 대통령(1998~2003)은 이러한 유산을 안고 출범하였지만, 출범 첫 해에 한일 간의 협력을 위해 “한일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1998년 10월)⁶ 선언을 발표하면서 한일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이 선언의 제7항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지향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한 보다 건설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공동선언과 함께 발표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의 제2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부분에서는, △남북관계의 개선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위한 협력, △대북정책에 관한 한일정책협회의 강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억지를 위한 협력이 언급되었다. 이외에도 한일 공동 행동계획에는 △한일 안보정책협회의

⁵ “일 군국주의 경계 한목소리/강택민 방한/한중 정상 회견,” 『매일경제』, 1995년 11월 15일.

⁶ “21세기 새로운 韓-日파트너십 공동선언(전문),” 『동아일보』, 1998년 10월 9일.

정기 개최, △한일 국민교류의 촉진, △학술교류, △지역 간 교류, △문화교류의 내실화 등 한일관계 전반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조치도 취해졌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교류 확대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한다는 햇볕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1998년 8월)로 북한에 대한 제재 속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일본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흡수통합에 의한 남북통일의 의도가 없다”는 견해를 밝힌 데 대해, 가까운 장래에 통일은 힘들다는 현실론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높이 평가하였다.⁷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에는 일본의 고이즈미 정부도 공조하여 2012년 9월 북일정상회담이 개최되는 한편 북일평양선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10월 일본 국회 연설에서 “한반도 통일보다는 먼저 남북한 간의 평화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⁸고 언급하여 통일보다는 남북한 평화공존에 방점을 두는 통일관을 밝힌 사실이다.

한일공동성명과 행동계획을 보면 한일관계의 발전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잘 표현되어 있다. 특히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양국 간의 합의와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도 북한과의 대화에 나섰다. 점에서는 통일외교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02년 8월 이후 북한이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과 고이즈미 정부의 평양과의 대화는 시련을 맞게 되었다.

⁷ “金大中韓国大統領の太陽政策 和解へ道筋、推進に難題,” 『読売新聞』, 2001년 12월 25일.

⁸ “金大中·韓国大統領国会演説の要旨,” 『読売新聞』, 1998년 10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2003~2008)는 양호한 한일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에서 출범하였으며 전반부까지는 좋은 한일관계를 유지하였다. 2003년 6월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공동발표문 “한일정상공동성명: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를 향한 한일협력기반의 구축”⁹을 발표하였다. 동 발표문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안정, 국제적인 핵 비확산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공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물론 어떠한 핵개발 프로그램도 용인하지 않을 것임과 이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북한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한일 간에 공조를 강화한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일 간의 협력관계는 과거사 문제와 독도 문제로 동해안에서 양국의 함정이 대치하는 등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여, 2006년 4월에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제하의 한일관계 특별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후 한일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한편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일본은 “햇볕정책을 계승한 평화번영정책은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대규모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2006년 10월의 북한 핵실험 이후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진다”고 인식하였다.¹⁰

참여정부의 통일외교는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일본 정부의 일정한 지지를

⁹ “한일 정상 공동성명(2003.6.7(토), 동경),” (외교부 국가 및 지역 정보 중 주요문서, 2003.6.7) <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boardid=11659&seqno=360&c=TITLE&t=%EA%B3%B5%EB%8F%99%EC%84%B1%EB%AA%85&pagenum=2&tableName=TYPE_KORBOARD&pc=&dc=&wc=&du=&vu=&iu=&du=> (검색일: 2013.11.11).

¹⁰ “基礎からわかる「南北関係」=特集,” 『読売新聞』, 2007年 10月 2日.

확보할 수 있었으나, 2006년 4월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2008~2013) 시절에는 빈번한 한일 정상 간의 회담이 있었다.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4월에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2007년 10월 3일 6자회담에서 합의된 제2단계 조치의 조기 완료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일관계, 북미관계의 정상화 등을 언급한 6자회담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일, 나아가 한미일 3국 간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 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일본 수상은 “비핵, 개방, 3000 정책에 대해서 지지의 입장을 표명”하고, “북일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제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북일국 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하는 방침을 설명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해와 지지를 표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3단계 남북통일안을 제안하여 취임 후 처음으로 자신의 통일관을 피력하였다. 3단계 통일안은 ①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평화공동체’ ②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경제공동체’ ③완전한 통일을 의미하는 ‘민족공동체’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5월 북한 핵실험 등을 계기로 일본과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밀접한 공조를 취할 수 있었던 반면, 2012년 8월의 독도 방문과 천황 사죄 발언으로 인해 양국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측면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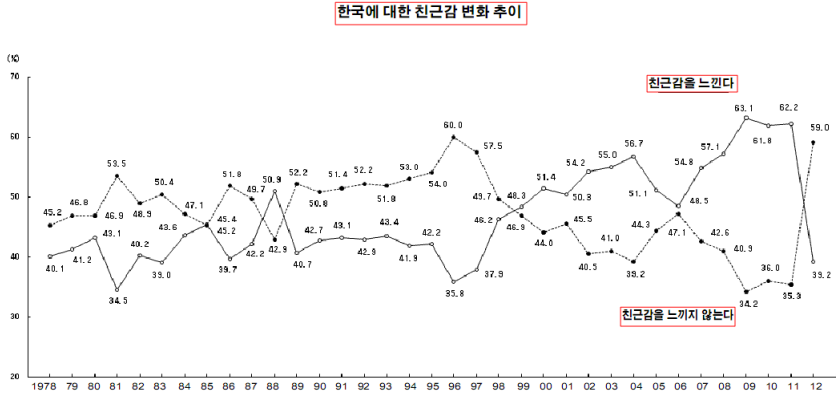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시절 한일정상회담 수준에서 언급된 통일관련 내용은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양국 간의 협력, △한국

의 대북정책 및 일본의 대북정책에 대한 상호 공감대 형성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 발표된 한일 정상 간의 공동성명에는 통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양국 정상 간의 공동성명이 한일관계 발전에 초점이 두어졌다는 원인도 있으나, 국민의 정부 이후 통일보다는 남북한 평화공존을 더 강조하는 통일정책을 한국 정부가 채택해 왔기 때문에 공동성명에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표현을 굳이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일본의 지지를 얻고 있었으나 한일관계의 주기적인 악화로 인해 한국에 대한 신뢰감, 호감도는 호전과 악화의 사이클을 반복한 것이 사실이다.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일본의 對한국 친근감은 35.8%(1996년)까지 저하되었으나,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시기에는 54.2%(2002년)까지 상승하였다. 그 후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에서도 56.7%(2004년)까지 호전되었으나 2006년의 노무현 대통령 특별담화 이후 48.5%(2006년)까지 악화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역대 최고인 63.1%까지 상승하였으나, 2012년 10월에는 39.2%까지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림 11-1)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 조사 결과(1978~2012)



※1978~1979년은 8월, 1980~1985년은 5월, 1986년 이후 10월에 조사

출처: 일본 내각부 여론조사 (<http://www8.cao.go.jp/survey/h24/h24-gaiko/zh/z14.html>)

이상과 같이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를 한국의 대일외교와 한국의 대북 정책 지지에 대한 지지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대북정책 지지 획득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일외교 측면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반도 통일 자체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는 외교는, 한국 정부가 통일보다는 평화공존, 평화공동체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직접 언급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중에 한국과 일본 간 많은 횟수의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지만 주로 논의된 내용은 앞에서 다루어진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내용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즉 현안과제인 북핵문제, 대북정책에 대한 한일 간의 공조 등이 주로 언급되었으며 한반도 통일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다.

한편 통일부 차원에서는 현직 통일부 장관이 일본 정부를 방문하여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통일문제보다는 6자회담과 관련된 주제들이 주로 논의되었다.

통일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으나, 국방부도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안정을 위한 협력이란 측면에서는 정기적으로 일본과의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

I
II
III

한일국방장관 회담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 공유 및 한일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한 주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외에 한일 차관급 회담 및 실무급 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한국의 對일본 외교의 현지 창구라고 볼 수 있는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¹¹에서는 주요 현안에 관한 입장이 정리되어 있으나,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 등 통일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며 북한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기본입장만이 제시되어 있다. 다만 보도 자료에서는 전체 2,867건 중에서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들이 27건 정도 수록되어 있다. 특히 통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보도 자료는 2009년 2월에 있었던 현인택 통일장관의 “통일을 이루려면 목표가 바로 서야”한다는 취임연설이 소개되어 있다. 동 연설에서 현인택 장관은 민족 통일을 위해, △한반도에서 평화를 창출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 공존공영의 남북관계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것, △통일정책을 구현하는데 원칙과 기본을 유지하되 유연한 자세로 임할 것, △지속 가능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 △북한의 비핵화는 전면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는 적극 협력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정책 추진의 6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정부문서에서 한반도 통일문제가 직접 언급된 것은 2010년 10월 양국 정부의 지원으로 구성되어 연구·발표된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보고서 ‘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 공생을 위한 복합네트워크의 구축’에서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동 보고서에는 한일 협력 부분에서 “한일 양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계획을 폐기하고 군사적 도발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린다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협력을 진행시킨다”라는 방침을 공유했다. 한국은 북일국교정상화를, 일본은 남북협력 관계

¹¹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www.jpn-tokyo.mofa.go.kr/korean/as/jpn-tokyo/main/index.jsp> (검색일: 2013.11.11).

의 확대 및 최종적으로 통일을 환영하고 각각의 과정을 통해 양국은 긴밀히 제휴하고 협력한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일본이 남북협력 관계의 확대 및 최종적으로 통일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나.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의 내용 및 특징

(1)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의 내용

한일 간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된 공동발표문을 중심으로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일본 정부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 간의 정상회담에서 오부치 수상은 “확고한 안보체제를 유지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는 언급과 함께, 1992년 2월에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4자회담의 순조로운 진전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둘째, 북한 핵 문제 등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강조되고 있다. 김대중-오부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이 안보리를 대표하여 표명한 우려 및 유감의 뜻을 공유하는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중지되지 않을 경우 한국, 일본 및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수상 간의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안정, 국제적인 핵 비확산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였다.

셋째, 고이즈미 수상의 평양 방문 이후 한일 간에는 이산가족문제와 함께,

I

II

III

일본인 납치문제가 동시에 언급되는 특징을 보인다. 2004년 12월 노무현-고이즈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수상이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해 어려운 입장에 있음을 이해한다는 점을 표명하였고, 2008년 4월 이명박-후쿠다 수상 간의 회담에서는 후쿠다 수상이 비핵·개방·3000 정책에 대해 지지의 입장을 표명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다 수상의 납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식에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2012년 5월 이명박-노다 수상 간의 한일정상회담에서는 노다 수상이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한 한국의 지지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면서, 이산가족 재회문제를 포함한 인도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협력한다는 의지가 표명되었다.

넷째, ‘한일신시대 공동연구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이나, 한국은 북일 국교정상화를 지지하고, 일본은 남북협력 관계 및 통일을 환영한다는 내용이다. 즉,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한일 양국이 지지하면서 나아가 남북한 통일도 일본이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외교가 가장 잘 표현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동 보고서에서 한일 양국은 중국이 양국과의 공통의 인식에 기초하여 북핵 포기,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실현,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의 통일, 장기적으로 안정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구축 등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을 요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한일 양국이 중국의 한반도 통일 지지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對일본 통일외교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의 내용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억지를 위한 협력, △대북정책에 관한 한일정책협의 강화, △남북관계의 개선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위한 협력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더해 △남북한 간의 관계 정상화 및 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일이 협력하여 중국이 남북통일에 대해 지지하도록

희망한다는 내용도 최근의 對일본 통일외교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의 특징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의 특징은 첫째, 한일 간의 정부 간 대화에서 통일을 직접 언급하는 빈도가 매우 낮으며,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정책 공조 및 인식 공유에 대한 언급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으나, 일본은 이미 공식문서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는 매우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2005년 2월 미국과의 미일안보협의위원회(2+2) 공동발표문¹²에서 미국과 공유된 전략목표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이미 미국과 함께 밝히고 있다. 또한 2011년 6월에 발표된 미일안보협의위원회(2+2) 공동발표문¹³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점을 공통의 전략목표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에서 통일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는 것은 한국의 대북정책이 평화공존을 통한 통일, 특히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우선하는 대북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¹² 일본 외무성, “Joint Statement, U.S. - 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Japan-U.S.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February 19, 2005). <www.mofa.go.jp/region/n-america/us/security/scc/pdfs/joint0502.pdf> (검색일: 2013.11.11).

¹³ 일본 외무성, “Toward a Deeper and Broader U.S.-Japan Alliance: Building on 50 Years of Partnership,” (June 21, 2011). <www.mofa.go.jp/region/n-america/us/security/pdfs/joint1106_01.pdf> (검색일: 2013.11.11).

〈표 II-1〉 한국 통일에 대한 한국인과 일본인 여론조사 결과

Q. 한국과 북한이 통일된다면, 동북아시아 지역은 안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일본
안정된다	51%	22%
불안정하다	31%	39%
특별히 영향이 없다	15%	29%
무응답	3%	14%

출처: “日中韓 共同世論調査 信?感 中韓と温度差,” 『読売新聞』, 2011年 11月 12日.

둘째,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평화통일을 지지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아직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의 2011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39%가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통일외교는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 공유 △대북정책 공조 등을 통해 통일외교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본의 일반인들이 한국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인 인상이 남아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가. 對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인식

전후 한일관계는 ‘가깝고도 먼 나라,’ ‘오래되고 새로운 관계,’ ‘일의대수(一衣帶水)의 관계’ 등으로 형용되곤 했다. 이러한 평가는, 그 자체가 역설적이던지 아니면 역설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는 한일관계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한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인식(동경과 한<恨>)이 그렇

듯이 ‘양면성(ambivalence)’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대체로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부담의식과 멸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⁴

(1) 일본 국민의 對한국 인식

(가) 일본인의 양면적인 對한국 인식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각종 관심과 태도가 상호 경합하고 있는 점이다. 우선 문화 상호주의적인 관점에서 한국인의 행동양식과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룹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한국 멸시 및 무시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그룹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 입각해 한국에 대한 관심과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달리 실무차원의 정보교환, 협력을 중시하는 그룹이 있으며, 나아가 개인적인 애정이나 우정의 축적을 강조하는 그룹이 존재한다.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비호감과 같은 각종 발언이나 인식표명은, 이와 같은 일본인 각자의 여러 가지의 관심과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서, 전후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양상을 띠면서 변화를 거듭해 왔다고 할 수 있다.¹⁵

일본인의 對한국 인식의 이러한 양면성은 일본인의 마음속에 내재돼 있는 한국,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선과 악, 명과 암이라는 가치 판단과 같은 태도와 연계되어 필요에 따라 거론되거나 무시되거나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본인의 마음속에는 건강하고 부지런하며 다소 피보호자적인 인상을 포함한 호감을 느끼게 하는 한국/한국인의 이미지와 함께, 암거래 시장의 한국인/군부, 보수적인 인상의 非호감의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공존하

¹⁴ 鄭大均, 『韓國のイメージ』(東京: 中公親書, 2010), 「はじめに」 참조.

¹⁵ 위의 책, pp. 226~229.

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두 개의 이미지는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선전/광고 등의 변화와 함께, 어느 한 쪽이 의식의 중심에 위치하거나 주변으로 내몰리는 형태로 공존해 왔으며,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구성하는 두 개의 흐름이 공존하는 상황에는 놀라울 정도로 균형이 존재하고 있음에 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인의 對일본 인식에도 적용되는 평가로서, 실제로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인식에도 양면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인의 반일 감정의 이면에는 일본인이 접할 경우 놀라움을 금치 못할 칭찬과 예찬의 태도가 존재한다.¹⁶ 단, 한국인과 일본인의 상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요소의 조합 또는 표출 방식에는 엄연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일본인의 對한국 인식의 양면성이 전형적인 ‘부담의식과 멸시’의 조합이라고 한다면, 한국인의 그것은 ‘동경과 한(恨)’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각각의 사회규범 때문에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비호감이 표출되기 쉽지 않은데 반해 한국의 경우 일본에 대한 호감이 표출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나) 상호교류의 심화와 한일관계의 부침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1980년 후반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여 1998년 김대중-오부치 회담 이후의 상호 문화개방, 나아가 2002년의 월드컵 공동 개최 등을 거치면서 상당히 호의적인 것으로 변했다. 예를 들면 일본 국내에서 한류 붐이 일면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일본 국내에 전파됨에 따라 한국의 문화나 패션 등을 접하는 일본인이 증가

¹⁶ 위의 책, pp. 256~257.

하면서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많은 부분 해소되었다.¹⁷

그러나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 이후의 한일관계는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15년’이라고 형용될 만큼 양자 간 신뢰관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는 못하였다. 참여정부 시절 영토문제에서 촉발된 對일본 ‘외교전쟁’ 불사론,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일본군 위안부문제, 독도문제를 둘러싼 양자 간 갈등 상황 등에서 보듯, 한일관계는 상호교류의 심화라는 새로운 상황이 도래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풍부하게 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양자 간의 각종 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그 차이를 직접 체감하는 관계로 변화하였다.¹⁸

이처럼 한일관계는 상호교류가 심화됨에 따라 갈등과 마찰의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¹⁹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상호교류의 심화라는 경험이 한일 양국 국민에게는 미지의 세계였으며, 새로운 상황에 걸맞은 새로운 행동양식을 도출해 내지 못한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전후 장기간에 걸쳐 국가라는 테두리 내에서 자의적으로 형성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인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도, 그리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일본인의 對한국 인식은 상호교류의 심화라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표 II-2>에 나타난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결과는 한일 간의 역사, 영토문제 등이 일본인의 對한국 인식에

¹⁷ 植田華織, 『韓流と日本人の韓国観:ブームがもたらした変化とは』, pp. 126-128, <http://www.kyotogakuen.ac.jp/~o_human/pdf/association/c2008_02.pdf> (검색일: 2013.11.11).

¹⁸ 기미야 다다시, “기로에 선 한일관계: 마찰을 넘어 진화를 향해,” 『일본공간』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2.12), pp. 87~88.

¹⁹ 위의 글, pp. 90~92. 기미야 교수는 한일 양국의 이러한 갈등상황을 ‘구조 변동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일관계의 구조변동 징후로는, 예를 들면 경제/외교적 측면의 한일관계의 대등화, 민주주의적 가치관의 공유라는 한일 양국의 균질화, 정부/경제계간 관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관계를 포함한 다층적인 관계에 더해, 정치경제를 넘어 문화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영역의 관계가 구축되고 있는 이른바 한일관계의 다양/다층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한일관계는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위안부문제 등 과거문제를 둘러싸고 상호 대립하면서 극도로 악화된 상태이다. <표 II-2>의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는 한일 간에 갈등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2011년 10월)과 이후(2012년 10월)에 실시한 것이다.

〈표 II-2〉 일본 내각부의 외교에 관한 여론 조사²⁰

질문: 당신은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니까? 그렇지 않으면 느끼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비율(%)
2011년 10월 조사	1) 친근감을 느낀다	20.3
	2) 굳이 말하자면 친근감을 느낀다	41.9
	3) 굳이 말하자면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19.8
	4)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15.5
	5) 잘 모르겠다	2.5
2012년 10월 조사	1) 친근감을 느낀다	9.7
	2) 굳이 말하자면 친근감을 느낀다	29.4
	3) 굳이 말하자면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28.1
	4)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30.8
	5) 잘 모르겠다	1.8

출처: 「内閣府: 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2011.10)」, <www8.cao.go.jp/suevey/h23/h23-gaiko/ 3.html>.
 「内閣府: 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2012.10)」, <www8.cao.go.jp/suevey/h24/ h24- gaiko/3.html>.

²⁰ 동 자료는 일본 내각부가 2011년 10월, 2012년 10월에 실시한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참고로, 2012년 10월 조사에서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친근감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39.2%(‘친근감을 느낀다’: 9.7% + ‘굳이 말하자면 친근감을 느낀다’: 29.4%)였으며,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9.0%(‘굳이 말하자면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28.1% +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30.8%)였다.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2012년 조사결과가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 (62.9%→39.2%)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진 반면,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35.3%→59.0%)라고 답한 비율은 높아졌다는 사실이다.²¹ 이 결과는 역사문제 등 한일 양국이 안고 있는 특수하고 민감한 사안이 일본인의 對한국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본 국민의 통일관련 對한국 인식

전후 일본의 對한반도 정책기조는 남북 분단 상황의 고착화, 즉 ‘현상유지정책’으로 평가되어 왔다.²² 이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부정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개념으로, 그 핵심은 통일한국이 일본의 가상 적국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남북이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점을 고려할 때 남북한이 상호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현상유지정책’은 바로 이러한 전략적/지정학적인 판단을 토대로 도출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일본의 한반도 통일 인식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긍정적/부정적인 평가의 핵심 요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의 논거를 정리하면, 첫째 남북한 대결 상황의 종결은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주장을 들 수 있다. 한반도 통일에 의해 북한의

²¹ 『内閣府: 調査結果の概要』, <www8.cao.go.jp/suevey/h24/h24-gaiko/2-1.html> (검색일: 2013.11.11).

²² 伊豆見元, “近くて遠い隣人,” 渡辺昭夫 編, 『戦後日本の対外政策』(東京: 有斐閣選書, 1985), pp. 179~181.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적 위협이 소멸되는 것은 일본의 국가 안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논리이다. 통일한국의 출현은 일본의 안보적 관점에서 볼 때 최악의 경우에도 현재의 북한위협 보다는 비교적 위협 수준이 낮은 인접국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호 공존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둘째,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과 경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즉 통일한국은 일본에 대해 북한 지역을 포함한 확장된 수출 시장을 제공할 것이며, 또한 동서독 통일의 경험에서 보듯 통일한국이 통일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균형 있는 국내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일본의 자금, 기술 등 각종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일본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한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의 본격적인 경쟁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통일한국의 경제적 위협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다.²³

한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시각과는 달리 부정적인 입장도 존재하는데, 그 핵심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다. 즉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의 병력과 무기체계의 통합을 의미하는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군사강국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안보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통일한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관리하는 상황은 일본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통일한국의 경제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의 기술과 자금이 북한의 자원, 노동력과 결합할 경우, 통일한국의 경제는 일본의 유력한 수출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셋째, 통일한국은 중국

²³ 이진원 외,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p. 53~54.

과의 정치·경제적인 관계 강화를 중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곧 통일한국의 일본 경시를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의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은 일본인의 對한국 인식이 한국에 대한 선악/명암 개념에 입각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국익(안보/경제)차원의 양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²⁴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지지라고 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추인하는 현상유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 남북통일 지지를 위한 전제 조건

일본 정부의 이러한 소극적인 한반도 통일 지지는, 앞서 언급한 ‘일본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듯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한국의 핵 非보유, 통일한국의 우호적인 대일정책 유지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이노구치 다카시(猪口孝) 동경대 명예교수는 “통일한국이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되는 것은 일본으로선 달갑지 않다. 핵무기 보유국인 한국과 핵무기 보유국이 아닌 일본 사이의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불균형은 일본의 핵무장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²⁵ 이처럼 일본은 통일한국의 핵보유 가능성에 대해 매우

²⁴ “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會(「2+2」) 會合(2005.2.19.)” 일본 정부는 2005년 2월 19일에 있었던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의 공동발표문에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였다. 동 「2+2」 발표문에서 일본 정부는 미일 양국의 공동전략목표의 하나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www.mofa.go.jp/mofai/area/usa/hosho/pdfs/joint0502.pdf>.

²⁵ 이노구치 다카시,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일본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편,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64~67.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후자와 관련해서 일본 평화안전보장연구소의 오치아이(落合浩太郎) 교수는 “한국에는 일본이 한반도 분단을 희망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틀린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²⁶ 오히려 일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 여부가 아닌 통일한국의 정체성(정치체제의 성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일본의 관심사는 통일한국이 일본(미국), 혹은 중국 어느 쪽에 세력균형의 중심을 둘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한국이 한미동맹 중시의 전통적인 대외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인가, 중국에 경사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 및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병행 추구하는 연미화중(連美和中) 노선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관심사는 통일한국이 일본(미국), 혹은 중국 어느 쪽에 세력균형의 중심을 둘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한국이 한미동맹 중시의 전통적인 대외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인가?, 중국에 경사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 및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병행 추구하는 연미화중(連美和中) 노선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²⁷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본에게 있어서 최상의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오는 통일한국이 미국, 일본과의 전통적인 동맹 및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비핵정책 등 기존의 안보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형태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일 간 상호교류가 상승되면서, 이와

²⁶ 落合浩太郎, 『北朝鮮の急変事態予測と各国の対応』, 第8回RIPS公開セミナー, 『変化する東アジアの戦略環境への対応』(東京:財団法人平和安全保障研究所, 2010.9.8), 박영준, “한반도 통일과 주한미군에 대한 일본의 입장”, 한국국방연구원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한반도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2012.6.7), p. 30에서 재인용.

²⁷ 박영준, “한반도 통일과 주한미군에 대한 일본의 입장”, pp. 30~31.

같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조건 이외에도 <표 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도문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실은 한국의 통일 관련 對일본 공공외교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표 II-3> 한일공동 여론조사²⁸

질문 1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5개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복수 선택 가능).	한국 (%)	일본 (%)
응답	1) 독도(다케시마)를 둘러싼 문제	72	68
	2)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30	37
	3) 종군위안부 문제	69	39
	4) 재일교포의 지방참정권	21	41
	5)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5	60
	6) 기타	5	-
	7) 불응답	2	6

²⁸ 동 여론조사 결과는 일본의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가 한일 양국의 일반 남녀를 대상으로 2013년 3월 22일부터 24일에 걸쳐 실시한 것이다(한국일보는 여론조사기관에 위탁 실시). 응답자는 일본 1,011명, 한국 1,000명이며, 조사는 RDD방식 전화 청취를 통해 실시한 것이다.

질문 2	북한 관련 문제에서 일본이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경우, 다음 6개 사안 중에서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한국	일본
응답	1) 핵개발의 중지	-	55
	2) 미사일 개발 및 발사 중지	-	27
	3)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	-	56
	4)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남북통일)	-	7
	5) 대북 경제 지원	-	4
	6) 6자회담 추진	-	32
	7) 기타	-	0

출처: “日韓共同世論調査,” <www.yomiuri.co.jp/feature/fe6100/koumoku/20130406.htm>

(3) 일본 국민의 한일 협력 인식

최근 한일관계는 <표 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도, 위안부문제 등으로 인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본의 對한국 인식 역시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에 더해 아베 수상의 역사인식을 고려할 때 자민당 정권 하의 한일관계는 역사문제로 인해 종종 갈등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 일본의 對한국 인식의 악화로 귀결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소위 말하는 한일 간 ‘과거’문제에도 불구하고, 아베 자민당 정권은 한국과 안보군사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표 II-4〉 한일공동 여론조사

질문		한국 (%)	일본 (%)	
질문	당신은 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1) 매우 좋다	1	1
		2) 굳이 말하자면 좋다	18	16
		3) 굳이 말하자면 좋지 않다	63	52
		4) 매우 나쁘다	15	19
5) 불응답		4	11	
질문	당신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	일본 (%)	
	응답	1)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	3
		2) 다소 신뢰할 수 있다	-	28
		3) 별로 신뢰할 수 없다	-	41
		4)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14
		5) 불응답		13

출처: “日韓共同世論調査,” <www.yomiuri.co.jp/feature/te6100/koumoku/20130406.htm>.

그 이유는, 우선 아베 정권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⁹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아베 정권은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되었으며, 그동안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북재제 조치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아베 정권이 한국과 안보군사협력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함에 있어서 미일동맹과 미사일 방어체제의 강화도 중요

²⁹ Bruce Klinger, “Japanese Conservative Victory: A Welcome Development For the U.S.,” (The Heritage Foundation, December 18, 2012), <<http://blog.heritage.org/2012/12/18/japanese-conservative-victory-a-welcome-development-for-the-u-s/>>.

하지만, 한미일 3국 간 협력 역시 경시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⁰

다음으로, 아베 정권이 미일동맹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한일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측면도 부정할 수는 없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 기조로서 이른바 아시아 회기(Pivot to asia)와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을 표방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베 정권이 표방하고 있는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방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프레젠스(presence) 유지와 對중국 견제로 요약되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채용된 전략적 결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 정권은 이러한 전략적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일본 정부의 한일협력 중시 정책에 대해, <표 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국내 여론도 상당히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의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³⁰ Tadashi, Kimiya, "Japanese and South Korean Leaders should Strengthen Public Diplomacy," *AJISS-Commentary*, No. 172 (March 21, 2013), 아베 정권의 이러한 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벅쇼 코로 주한일본대사는 2013년 4월 12일, 제46회 KIDA국방포럼 강연에서, 일본은 북핵 위협에 한일, 한미일 공조하의 실질적인 군사안보적 대응 조치강구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http://kida.re.kr/?sidx=141&styp=1&nuid=762>>. 한편,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은 2013년 2월 14일,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안보적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차원에서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敵基地攻撃能力早急に検討を……石破幹事長," 『読売新聞』, 2013년 2월 15일).

〈표 II-5〉 한일공동 여론조사

질문	한국과 일본은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6개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복수 선택 가능)	한국 (%)	일본 (%)
응답	1)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	52	81
	2) 중국의 군비증강에 대한 대응	30	64
	3) 군사정보 교환 등 안보군사문제	29	59
	4) 경제면의 연대	44	79
	5)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25	71
	6) 문화교류	37	84
	7) 기타	4	-

출처: “日韓共同世論調査,” <www.yomiuri.co.jp/feature/te6100/koumoku/20130406.htm>.

우선 한국인은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그다지 중요시하고 있지 않은데 반해, 일본인은 한국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 양국 간 안보군사협력, 경제협력, 문화교류 등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최근 독도, 위안부문제로 인해 한국과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많은 일본인이 북한문제, 안보군사협력문제, 경제문제 등 분야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을 중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다음으로 일본인들이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문제에 대해 한일협력 필요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즉, 한국인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 동향에 대처하는 차원의 한일협력 필요성을 그다지 중시하고 있지 않은데 반해, 일본인은 이를 매우 중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I

II

III

나. 한국의 對일본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체계

(1) 목표

한국의 對일본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주변 국가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한국의 對일본 한반도 통일외교는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국내에서는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일본 정부 차원이 아닌 일반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통일한국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통일한국이 강력한 국가로 부상함으로써 일본의 안보 및 경제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그 주요 이유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통일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통일한국이 일본의 전략적 이해에 불리하지 않다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는 한반도 통일이 일본의 국익(안보 및 경제)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 차원은 물론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이해시킨다는 목표 하에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 및 일본 국민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외교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통일기금의 조성에도 적극적인 일본 국민들의 관심 및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의 대량난민이 일본으로 유입될 경우, 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우호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일본의 지지 및 역할을 도출해 낸다는 목표 하에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인해 동북

아 평화질서는 항상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일본의 국민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를 비롯해 많은 일본인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이러한 인식과 입장을 고려하여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는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이해시킨다는 목표 하에 전개되어야 한다.

한편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는 이상과 같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한반도 통일이 한국, 일본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더해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온다는 점을 일본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13년 현재 GDP 규모 세계 3위의 경제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본 사회의 고령화와 재정적자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동력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이 앞으로 사회적, 경제적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으나, 그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시대를 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한반도 통일 없이는 허구에 불과하다.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해야 하고, 자본과 기술력을 가지고 북한의 건설과 동북아 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논거 하에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는 통일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전개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는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에 대해 한반도 통일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지지를 확보한다는 목표하에 전개되고 있다. 2003년 고이즈미의 북한 방문 결과 북한은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를 최초로 인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일 양국은

I

II

III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국 간 국교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은 통일한국의 등장이 북일 양국 간의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일본 정부 및 국민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특히 일본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반도의 통일이 결정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는 보편적 인권문제 차원에서 볼 때 당연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특히 이 문제의 해결은 통일한국과 일본 간의 불행한 역사를 바로잡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는 일본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한반도 통일이 실현되면 그동안 한국의 대중문화를 대표해 왔던 ‘한류’는 남북한 전통문화와 연계된 새로운 대중문화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전통문화와 대중문화의 강국으로서의 통일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화적 교류는 동북아 지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발신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³¹ 한국은 통일공공외교의 주요 영역인 문화외교를 통해 일본 국민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지를 확보해 나간다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아야 한다.

(2) 주체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주요 행위자는 정부차원에서는 외교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있으며, 반민반관/준정부 차원에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 통일연구원 등이 있다.

³¹ 박영호, “한국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전략,” 배정호 편,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123.

한편, 민간 차원에서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서울대 일본연구소, 한일 협력위원회, 한일 Y청소년협의회, 한일 평화증진포럼 등이 있다. 이들 對일본 공공외교 추진 주체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표 II-6>과 같다.

〈표 II-6〉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추진 주체

구분	주 체	
트랙 1 (정부)	정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한일의원연맹
트랙1.5 (국책연구소)	공공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한일포럼),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국립외교원, 한국학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해외문화홍보원
	미디어	국제방송(아리랑 TV, KBS World)
트랙2 (학계, 민간단체)	학계, 연구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서울대 일본연구소,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등
	민간교류단체	한일협력위원회, 한일 NGO평화포럼, 한일 시민사회포럼, 한일 Y청소년협의회, 한일 평화증진연대, 한일 언론인 포럼 등
	개인	재일한국인, 재외동포

구체적으로 첫째,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부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원전문제 및 문화외교를 포함한 對일본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교부는 2013년 5월 29일에 개최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3’을 후원하고 있는데, 동 포럼에는 한국,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호주 등 국가의 주요 정치가, 국제기관의 전문가, 기업인 등이 참가하였다. 일본에서는 하토야마 전 수상,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성 장관 등이 참석하였다. 또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2012년 3월에는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편, 전세계의 지식인을 초청하여 ‘현인그룹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 통일 이후 동북아 지역의 원전 문제에 관해

일본의 지식인과 지적교류를 실시하는 등 對일본 공공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외교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K-pop World Festival 2013’ 등의 한국 홍보행사를 지원하면서 한류 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 차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류 문화 소개, 체육 지원 및 한국 관광 소개 등의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도 ‘글로벌 패션 브랜드’ 사업 등을 통해 K-pop, 한류스타, 토탈패션 등과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한류 융합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공공외교는 정부 차원 이외에도 반민반관/준정부기관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 추진주체로는 다음과 같은 조직, 기관이 있다. 우선 지식외교의 관점에 입각해 對일본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주체로는 한국국방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통일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이 있다. 한편 문화외교의 관점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을 비롯해 해외문화홍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對일본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對일본 공공외교, 특히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하는 데는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즉 과거와 역사문제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반민반관/준정부 기관이 중심이 되어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인식 하에 현재 한국의 반민반관/준정부 기관은 일본 정부의 관료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 정치가, 국회의원, 학자,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통일정책을 알리고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對일본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셋째, 민간 차원에서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주요 주체는 크게 학계 및 연구소, 기업, 민간 교류단체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학계 차원에서는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동 프로젝트는

민간 차원에서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연구하기 위해 시작된 학술 교류사업으로서 주로 한일관계, 국제정치 그리고 국제경제 등의 분야에 관한 한일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³² 또한 한일 양국의 대학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일 밀레니엄포럼’이 있다. 동 포럼은 연세대, 고려대, 게이오대, 와세다대 등 4개 대학 총장이 직접 참여하여 한일 양국의 대학 간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연구학술분야의 지적교류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한일 양국의 미래비전을 모색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는 학술사업이다. 이외에도 한일 대학생 및 대학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한일 학술교류사업으로 ‘한일 대학생 경제포럼’과 ‘한일 차세대 학술포럼’ 등이 있다.

한편, 기업 차원에서는 ‘한일경제협회’와 ‘이희건 한일교류재단’이 對일본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자는 1981년 2월 12일에 한국의 경제4단체장과 포항종합제철 대표가 중심이 되어 한일 양국 간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무역증진, 산업협력 등을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이외에 경제,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對일본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단체로는 ‘한일 친선협회’와 ‘한일 협력위원회,’ ‘한일 친선회의,’ ‘한일 여성친선협회,’ ‘한일 연극교류협의회 등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부산·후쿠오카 포럼,’ ‘부산·후쿠오카 IT융합 포럼,’ ‘한일 국제교류 심포지엄(충청북도-야마나시현),’ ‘한일 지방자치 포럼’ 등이 중심이 되어 일본과의 각종 교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3) 자원 및 자산

한국은 일본과 국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비교우위 또는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이슈들을 설정하고, 무엇보다도 ‘지식’을 자산으로 하는 지식의

³² 『연합뉴스』, 2009년 1월 25일; 『연합뉴스』, 2011년 12월 11일.

교에 초점을 맞추어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교부 및 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교안보연구원, 통일연구원, 해외문화홍보원 등이 중심이 되어 일본의 정책결정자나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 포럼,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들 한일 간 회의체 및 지적교류 프로그램 이외에도 한일 대학생 교류와 같은 인적 교류, 한일 학자 간 공동 연구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외교 프로그램이 있다.

한편 지식 자산 이외에도 문화, 스포츠, 관광, 한국학 자산 등을 활용한 통일공공외교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이나 한반도 분단을 다룬 영화 등을 통해 일본 국민들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각종 스포츠 경기 시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하여 일본 국민들에게 남북한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일본 관광객들의 판문점 방문을 활성화하여 한반도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향후 이와 같은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의 자산을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문제와 연계시킴으로서 한반도 통일의 평화를 향한 한일 간의 협력 자산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4) 매체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는 각종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매체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 앞서 ‘자산’ 영역에서 언급한 대북정책과 지식자산은 가공과정을 통해서 일본에 걸맞은 세부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 모듈로 고안된 것으로서 이러한 모듈은 한일 정부 간 혹은 민간의 강연, 회의체, 연구, 인적 교류 등의 매체를 통해서 일본 정부 및 일반국민들에게 전달된다. 또는 재일동포가 주도적으로 일본 내 출판을 통해 일본 국민들에게 북한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수도 있다. 30년간 북한의 핵문제나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일본 월간지로 발행되고 있는 ‘통일평론’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이상과 같은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데에는 전통적인 매체 이외에도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국민들은 케이블 TV를 통해 한국 TV를 시청할 수 있는데, 북한 핵문제에 대한 KBS 보도에 대해 일본 TV에서 받아들이는 시각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국 국내의 그것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활발한 SNS의 보급은 한반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많은 일본인들은 정확한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 국내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수집에 더해 한국 내 일본인 및 한국인들과 실시간 SNS 접속을 적극 활용하였다.

(5) 대상

일본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외교정책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따라서 한반도 분단과 통일의 이해 당사자인 일본 정부 못지않게 일본 국민들에 대한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는 일본의 정책서클과 여론주도층, 차세대 그룹, 일반 대중, 그리고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미디어와 글로벌 스페이스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의 추진대상과 타깃 그룹이 결정되면, 이들 대상에 걸맞은 이슈, 그리고 이러한 이슈를 전달하는 매체를 선택하여 공공외교를 전개하게 된다. 통일공공외교와 관련된 이슈로는 ‘한국의 비핵평화, 경제발전, 민주주의, 갈등 및 위기관리와 신뢰구축, 인권문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일본의 다양한 대상 타깃과 이슈 결합을 통해 통일공공외교의 대상을 설정하고 있다.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국의 비핵평화, 경제발전, 민주주의, 갈등 및 위기관리와 신뢰구축 등은 일본의 정책서클과 여론주도층 및 차세대 그룹과 연결되어 있으며, 일본인 납치문제와 같은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반 대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편, 파급력이 큰 미디어와 글로벌 스페이스는 모든 이슈와 아울러서 일본 국민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다.

다. 한국의 對일본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추진 실태

(1) 지식외교 추진 실태

(가) 정부 차원

1)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에서 통일공공외교는 주로 국제사회에 대한 통일 홍보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정부의 입장과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신속·정확하게 전파하는 데 주력했다.³³ 따라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간행물에 의한 홍보, 국제방송을 통한 홍보 등 미디어에 의한 홍보에 집중하였고, 더불어 해외동포를 중심으로 한 통일 홍보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국민의 정부 시절에 가장 많은 홍보책자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발간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2001년³⁴에 국가별로 특화된 홍보책자가 일본어로 발간되어 홍보책자의 전문성이 강화되었다.

이처럼 국민의 정부의 통일공공외교는 국민의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³³ 통일부, 『1998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1998), 제7장 2절의 3 참조.

³⁴ 통일부, 『2002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2), 제6장 2절의 3 참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개국 버전이 발간되었다.

대북 햇볕정책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이해를 촉구하는 점에 중점이 두어졌다.

〈표 II-7〉 국민의 정부의 통일관련 일본어 간행물

연도	제목	비고
1998년	한국신정부의 대북정책 (韓国新政府の対北韓政策)	영어, 중국어, 일본어
1999년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대북한정책 (平和と和解・協力のための対北韓政策)	영어, 일어
2000년	하나가 되어 (一つになって)	영어, 중국어, 일본어
2001년	한국의 대북한포용정책과 일본 (韓国の対北韓包容政策と日本)	일본어(영어, 중국어)
2002년	햇볕정책 -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 (太陽政策 - 平和と協力のために)	영어, 중국어, 일본어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햇볕정책 (平和と協力を目指す太陽政策)	영어, 중국어, 일본어
2003년	평화와 협력의 실천 (平和と協力の 實踐)	영어, 중국어, 일본어

2) 참여정부

참여정부는 2002년 말 북핵문제 발생 이후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반도 통일문제가 남북한 당사자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인식하고,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국제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³⁵ 따라서 참여정부에서 발간된 통일백서에서는 국제협력 강화 및 해외홍보 추진 실태를 중심으로 통일공공외교가 서술

³⁵ 통일부, 『2004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4), p. 307.

되어 있다.

국민의 정부와의 차이점은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홍보 이외에 국제협력 강화라는 측면에도 중점을 두고 전개되었다.

한편 구체적으로 수행된 사업은 다음과 같다. 고위급 정책협의라고 불리는 사업은 통일부 장관 등이 직접 관련 국가를 방문하여 정부 및 의회 관계자, 현지전문가 또는 동포를 만나 우리의 정책을 설명하고 한반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통일부 장관 등이 직접 해외를 방문하여 국제협력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일본에 대해서는 2003년 11월 20일 통일부 차관이 방일하여 외무성 사무차관, 내각관방성 부장관 등을 면담하고 일본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해 협의하였다.³⁶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북한의 핵실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와 아베정권 출범에 따른 일본의 중장기적인 대북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제3차 한일정책대화가 양국 외교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동 정책대화에서는 북핵 실험 이후 동북아 안보 전망과 한일 공조 문제를 논의하고,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와 공감대를 넓혔다.³⁷

국제적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정책협의회의 형태로 전개된 이러한 외교 활동은 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일본에 대한 방문 실적은 비교적 저조하였다.

또한 통일부가 직접 한·미·일 대북정책조정회의(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 TCOG)에 참가(5회)하여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³⁶ 위의 책, p. 308.

³⁷ 통일부, 『2007 통일백서』(서울: 통일부, 2007), p. 276. 통일부 관계자가 직접 일본의 외무성 관계자들과 만났다는 점에서 통일공공외교라기보다는 통일외교에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으나, 방일 시에 관련 전문가와 같이 회동하였다는 점에서 통일부가 직접 나선 통일공공외교로 볼 수 있다.

공조체제 구축과 정책협·조율에 기여하였다. 또한 2003년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북경에서 열린 6자회담에 참석하여 △북핵 불용납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을 통한 안보위기의 재발 방지 등 한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유관국가 간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통일부가 직접 외교 현장에 참여하여 통일외교를 전개하기도 하였다.³⁸

참여정부의 통일공공외교의 성과는 통일주재관을 적극 활용하여 “한반도 문제 전문가 회의”를 도입·운영하였다는 것이다.

독일 통일 직후인 1990년 12월 5일 독일주재 통일연구관을 파견한 후, 1996년 8월부터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적 통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일본·중국·독일 4개국에 통일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다. 통일주재관은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 외교 업무와 통일외교 업무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총력외교를 지원하는 역할과,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주재국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2005년에 통일주재관은 주재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와 세미나 참가를 통해 대북정책 홍보에 주력하였다. 행정부, 의회, 언론,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의 여론주도층 인사들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홍보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 확산을 도모하였다.

특히 주재국 내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다양한 정책 고객에 대한 대북정책 홍보 및 의견 수렴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일 주재관이 주관하는 ‘한반도문제 전문가회의’를 도입·운영하게 되었다. ‘한반도문제 전문가회의’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현지에서 대북정책 관련 여론을 주도하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 네트워크로서 구성·운영되며, 분기 1회씩 정

³⁸ 통일부, 『2004 통일백서』, pp. 308~309.

기적인 토론회 개최를 통해 남북관계 주요 문제에 대한 정보교류, 정세평가 및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활용되었다. 이들 전문가 네트워크는 주재국 정부 관계자 및 외교·안보 분야 학자 및 연구원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주재국에 대한 효과적인 대북정책 홍보를 위한 정책 고객의 수요 파악 및 홍보 전략 수립과 관련한 자문단의 역할도 수행하였다.³⁹

일본의 경우, 여러 대학 교수 등을 중심으로 한 10명의 한반도 전문가로 연구모임이 운영되었으며, 2006년에는 북일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과 동북아 정세전망, 북한의 핵실험 이후 동북아 정세 등을 주제로 토론하였다.⁴⁰ 2007년에는 동경대, 시즈오카 현립대, 릿쿄대 등 대학 중심으로 운영되어, 북일관계와 한반도 정세, 납치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대북정책 변화 전망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⁴¹ 2008년 동경대, 시즈오카 현립대, 릿쿄대 등을 중심으로 개최되었다.⁴²

〈표 II-8〉 한반도 전문가 회의 개최 횟수

연도	국가별 개최 횟수	비고
2006년	미국 6회, 일본 4회, 중국 1회	
2007년	미국 2회, 일본 3회, 중국 5회	

참여정부의 또 다른 성과는 2005년 ‘통일캐러밴’이라는 이름하에 주변4국 및 EU주요국의 정·관·학·언론계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국제여론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19일~22일, 도쿄·니가타·나고

³⁹ 통일부, 『2006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6), pp. 236~237.

⁴⁰ 통일부, 『2007 통일백서』, p. 275.

⁴¹ 통일부, 『2008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8), p. 298.

⁴² 통일부, 『200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9), p. 194.

야에서 통일캐리반을 실시하여 대북정책 순회설명회, 국제학술회의, 고위·실무 정책협의, 전문가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홍보사업을 패키지로 하여 추진하였다.⁴³

또한 2007년에는 ‘국제통일전략대화’를 개최하였다. 국제통일전략대화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 북핵문제 추이, 주변국 대북정책 변화 동향 등을 감안하면서, 시기와 지역에 걸맞은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각국 정부 관료, 전문가가 참여하여 1~2일간 집중적인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본의 경우 공안조사청 등을 방문하여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더불어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참여정부는 닷케이포럼(2005년 5월, 일본 도쿄) 등 해외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또한 통일부 장·차관 및 주요 실무관계자들이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등)를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황에 대해 국제사회에 홍보하였다.

한편 참여정부도 통일관련 간행물을 만들어 대일공공외교에 활용하였으나, 국민의 정부에 비해서는 그 숫자가 현저히 감소되었다.

〈표 II-9〉 참여정부의 통일관련 일본어 간행물

연도	제목	비고
2003년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盧武鉉政府の平和繁榮政策)	영어, 중국어, 일본어
2004년	평화와 번영의 길	영어

⁴³ 통일부, 『2006 통일백서』, p. 239.

참여정부의 통일공공외교는 북핵 문제의 악화로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으면서 대북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에 많은 관심을 쏟았으나,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홍보하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는 국민의 정부와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악화되는 속에서 ‘평화변영정책’에 기반을 둔 대북정책을 지속하면서,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3)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제협력과 해외홍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통일공공외교를 추진하였으나, 큰 차이점은 통일외교라는 슬로건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2013년 통일백서』에서 통일외교는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에 도움이 되고, 동아시아 및 세계의 번영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활동”이며, 통일외교는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한반도를 상정하여, 한반도와 주변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반외교와 차별화”된다고 하여,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국제협력과 통일외교를 통해 한반도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주변국가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역량을 다져 나간다고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한반도 국제포럼”, “고위급 정책협의”, “실무급 국제통일전략대화”, 방한 주요 인사와 통일부 장·차관과의 면담 등 다각적인 통일공공외교를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코리아 글로벌포럼(Korea Global Forum)’을 새로

개최하였다. 코리아 글로벌포럼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1.5트랙(반관반민)의 국제적 다자협의체이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및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 수렴을 위해 한국 정부 주도로 창설된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연례회의체이다.

코리아 글로벌포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중·일·러·유럽·아시아 등 총 10여 개국에서 정부 인사 1명과 민간 전문가 1명 등 총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승주 전 외교부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자유로운 토론과 브레인스토밍 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코리아 글로벌포럼 창설회의는 2010년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국제적·지역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한·미·일·중·러·영·프·독·호주·인도·싱가폴 등 11개국에서 전·현직 정부 인사(국장급)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21명이 참여하였다.

2011년 제2회 코리아글로벌포럼은 ‘동북아 안보역학과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제2회 포럼에는 10개국에서 전·현직 관료 및 민간 전문가 21명이 참석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코리아 글로벌포럼과 함께, ‘한반도 비전포럼(Korean Vision Forum)’도 출범시켰다. 한반도 비전포럼은 한반도 관련 주요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통일문제 관련 국제회의체로서, 이 포럼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한반도 비전포럼은 독일통일 20주년이 되는 2010년에 ‘한반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1년에

I

II

III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한반도 비전포럼은 한반도 통일비전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제시하여 통일지지 여론을 확산시키고, 통일미래 세대인 대학생과 일반시민 등의 참여를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책임감을 제고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회의체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2012년 한반도 비전포럼과 코리아 글로벌포럼을 통합하여, ‘한반도 국제포럼’을 탄생시켰다. 한반도 국제포럼은 국제사회에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우리 주도로 한반도 통일문제 논의를 이끌어 가기 위한 것이다. 2012년에는 ‘평화와 통일-한반도 문제의 담론화’를 주제로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제1일차에는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공개강연과 전문가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제2일차에는 기존의 코리아글로벌포럼의 1.5트랙 다자협의체 형태를 유지하여 10여 개국 정부 및 민간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모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공개세미나는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세계적 시각,’ ‘통일외교 국제적 네트워크의 제도화’를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전문가 세미나는 ‘김정은 체제의 정치·경제,’ ‘동북아의 리더십 변화와 한반도,’ ‘한반도 통일준비’ 등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한편 한반도 국제포럼은 2012년부터 주요국가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 한반도 통일논의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중국과 미국에서 국외행사로 진행되었으며, 2013년 7월 9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그림 II-2〉 한반도 국제포럼 2013 (도쿄)



실무급 국제통일전략대화는 참여정부 때부터 실시되어 오던 것으로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해외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실시되는데 2009년에는 일본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 히로시마시립대 평화연구소와 개최하였으며, 동시에 홋카이도, 후쿠오카, 히로시마, 도쿄, 교토 등을 방문하여 현지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⁴⁴ 이후 국제통일전략대화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의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중장기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추진되었다.⁴⁵ 2012년 일본지역 전략대회는 7월에 도쿄와 교토에서 개최되었다. 외무성 납치문제대책본부, 아시아대양주국,公安조사청 등 정부관계자와 면담하고, 한반도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⁴⁴ 통일부, 『2010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0), p. 228.

⁴⁵ 통일부, 『2013 통일백서』, p. 67.

또한 현지 대사관 주재 통일연구관을 활용한,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요국의 대북 정책 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였다.⁴⁶

2010년 통일부 관계자들이 한반도 문제 관련 주요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방문하여 해당 정부 관계자들과 대북정책 추진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이 기회를 활용하여 현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기반을 강화하였다. 일본에서는 도쿄 및 교토 지역을 방문하여 전문가회의 및 동포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 회의는 대북정책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는 차원에서 주로 이용되었다.⁴⁷

2011년에는 중국, 일본, 호주 등을 방문하여 실무급 정책협의를 갖고 한반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일본에서는 히로시마 평화연구소를 방문하여 현지 전문가들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국내에서는 국내를 방문한 인사들과의 인터넷서널 포럼을 통해 해당국에 대한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하였다. 2009년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교수, 미야모토 사토루 일본 세이가쿠인대 교수 등이 인터넷서널 포럼에 참가하였다.

또한 한국을 방문한 주요 인사들과 장·차관이 면담하여 통일외교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2009년에는 야치 쇼타로 일본 정부 대표,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민주당 중의원, 2010년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참의원 의원,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대신, 2011년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등이 장·차관과 면담하였다.

⁴⁶ 통일부, 『2010 통일백서』, p. 228.

⁴⁷ 위의 책, p. 228.

또한 주요국 대사 간담회, 라운드테이블, 주한공관에 대한 정책설명회 등을 전개하였다. 2011년 10월, 주한 공관 실무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통일안보현장 방문과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나) 1.5트랙 차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5트랙 차원의 對일본 공공외교 추진 주체 중에서, 한반도 통일에 관한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주체로 분류할 수 있는 정부 산하기관, 국책연구기관으로는 한국국방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통일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이 있다. 이 하에서는 이들 4개 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의 추진실태를 고찰한다.

1)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은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차원에서 ‘한일연구교류회의’와 ‘해외 주요인사 대상 국방정책 홍보사업(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PCRM)’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는 한국국방연구원이 일본 방위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NIDS)와 격년으로 상호 방문하여 북한문제를 포함한 한일안보협력, 한일 양국의 안보방위정책에 관한 교류협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후자의 PCRM은 한국의 안보국방정책을 비롯해 한미동맹, 북한문제 등에 관한 각종 안보이슈를 청와대, 국방부, 안보국방 전문가들이 분석하여 미국, 일본, 중국의 정치가, 국회의원, 안보국방 관련 전문가에게 송출(‘ROK-Angle’)하는 학술사업이다.⁴⁸

⁴⁸ 이하의 내용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PCRM 사업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내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 둔다.

우선 PCRМ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이후 미국, 일본의 주요인사(국회의원/보좌관, 주요 싱크탱크 한반도 전문가 등) 및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에 대해 한국의 국방정책을 e-메일의 형태로 송신하고 있으며, 다음 두 가지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다.⁴⁹ 첫째는 주변국의 주요 정책결정권자 및 여론형성층을 대상으로 한국의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이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며, 둘째는 국내외 국방전문가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해 한국의 안보와 국익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PCRМ 사업은 2009년 3월에 PCRМ-US(미국 대상) 제1호('ROK-Angle')를 발송한 이래 2013년 8월 말 시점까지 총 86편을 발송하고 있다.⁵⁰ 이 중에서 일본을 대상(PCRМ-Japan)으로 한 ROK-Angle은 2010년 7월 19일의 제1호('한미 저작권 전환 연기 배경과 그 성공을 위한 한국의 역할')를 시작으로 2013년 8월까지 총 39편을 발송하고 있다.⁵¹

<표 II-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ROK-Angle-Japan은 주로 한국의 안보국방정책, 한미동맹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 이에 반해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경제/민족의 3개 공동체'의 단 1건에 그치고 있는데, 이 역시 한반도 통일문제를 직접 다루고

⁴⁹ 동 사업은 2009년 12월 31일에 국회에서 한국국방연구원 중기사업으로 선정, 통과되었다. 동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 미국의 정치가, 국회의원, 안보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 4월 11일에는 PCRМ-Japan 사업을 팀을 출범시켜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의 안보와 국방에 관한 정책홍보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2011년 8월에는 PCRМ-China도 발송하기 시작하였다.

⁵⁰ 동 『ROK Angle』의 작성자는 국방부장관, 청와대외교안보수석, 국방차관, 국방정책실장, 국방개혁실장, 외교통상부 고위공무원,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⁵¹ 章光一, “韓米間 ‘戰作權の返還’ 延期の背景とその成功のための韓国側の役割,” (한국 국방연구원 ROK-Angle 第1号, 2010.7.19), <<http://www.kida.re.kr/?sidx=366&stypе=1>>; “ROK-Angle Japan”의 각호 주제 및 내용에 대해서는 <www.kida.re.kr/?sidx=366&stypе=1>을 참조.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이 있는 간접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10〉 “ROK-Angle-Japan”의 주제별 분포 현황

분 류	발송 주제	비고
한국의 안보국방정책	①2012년도 국방예산안 분석, ②동북아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제주해군기지, ③한국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 추진방향 등	11건
한미동맹	①한미 전략권 전환 연기 배경과 그 성공을 위한 한국의 역할, ②제4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의 성과와 의의 등	8건
북한문제	①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실험과 국제협력의 필요성, ②천안함 침몰 사건과 한일협력, ③김정은 정권 1년 평가와 안정성 전망	8건
한반도 통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경제/민족의 3개 공동체	1건
한반도/ 동북아 정세 등	①동아시아의 새로운 세력분포와 그 함의, ②북미 ‘뉴욕회담’ 이후 6자회담의 단계적 추진방향 등	11건

다음으로, 한국국방연구원(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IDA)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10월부터 일본 방위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NIDS)와 매년 상호 방문하여 연구교류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동 회의는, 1)동북아지역 안보정세 인식 및 평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상호 공감대 확대, 2)KIDA-NIDS 간 ‘Track II’ 레벨(비정부 간 대화)의 상호 연구교류를 통해 양국의 안보국방정책에 대한 이해 심화와 상호 신뢰구축에 기여, 3)상호 연구교류를 통한 안보국방 문제에 관한 연구능력을 제고한다는 목표 하에 개최되고 있다. 2013년 8월 현재, 총 14회의 연구교류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일연구교류회의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개최되며, 이로 인해 회의 참가자는 주로 KIDA-NIDS의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KIDA에서 개최될 경우 회의 참가자는 KIDA의 연구자 외에 국방부, 합참, 정보본

I

II

III

부, 주한일본대사관의 외무성 관료 및 국방무관 등이며, NIDS에서 개최될 때에는 방위연구소의 관계자 외에 육해공자위대의 현역 자위관, 주일한국 대사관 무관 등이 참가하고 있다.

한편 한일연구교류회의에서 논의되는 각 연도별 의제는 당해 연도의 주요 안보현안 중에서 양자가 상호 의견교환 및 논의하고자 하는 사안을 협의하여 선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2년도 회의 시의 논의주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과 대응방향이었으며, 2013년도는 미국의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책 전망과 한일협력 방향,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한일 양국의 대응방향이였다.

이처럼 각 연도별 한일연구교류회의의 의제는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에 발생, 변화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일연구교류회의에서 한반도 통일문제가 핵심의제로 선정되어 논의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한일연구교류회의가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이 깊은 사안들, 예를 들면 북한의 체제위기,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 상호 간 의견교환 및 토의를 실시하고 있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은 ‘한일학술회의,’ ‘한미일 3자 안보협력회의,’ ‘한중일 3자 협력포럼,’ 일본관서경제동우회와의 간담회 등 연구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⁵² 이들 프로그램 중에서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와 직간접

⁵² 외교안보연구원은 2008년부터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한중일 3자 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동 포럼에는 3국 연구기관의 연구자 외에 외교부 담당자, 학자 및 전문가가 참가하며, 주로 한중일 3국 협력, 지역안보정세, FTA 등 경제협력, 북한문제에 관한 한중일 협력 등의 이슈에 관해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외교안보연구원은 일본 ‘관서경제동우회’와의 간담회를 2000년 이후 실시하고 있다. 일본 관서경제동우회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서일본 최대의 경제단체로서 한국 방문 후, ‘대한민국

적인 관계가 있는 한일학술회의 ‘한미일 3자 안보협력회의의 추진형태 및 주요 회의 내용’ 등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³

외교안보연구원은 1986년부터 일본국제문제연구소와 매년 정기적으로 한일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동 학술회의는 2012년 11월 현재까지 총 27회에 걸쳐 개최되고 있으며,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자,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연구자 외에 한일양국의 외교부 관계자, 대학교수 등이 참가하고 있다. 한일학술회의는 주로 북한의 핵문제, 한일관계, 지역협력 등의 문제에 관한 한일 연구자 간 의견교환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⁵⁴ 이로 인해 한반도 통일문제가 핵심의제로 채택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양자 간 논의를 실시하고 있다.⁵⁵

한편 외교안보연구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매년(1회 이상) 미국 평화연구소(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USIP), 일본의 외교정책연구소(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Studies: IIPS)와 공동으로 ‘한미일 3자 안보협력회의(Trilateral Dialogue in Northeast Asia)’를 개최하고 있다.⁵⁶ 동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자, 정치가,

방문단 보고서’를 발행하여 일본 내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경제단체이다. 관서경제인 약 20여명으로 구성된 동 방문단은 매년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외교안보연구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동 간담회에서는 주로 한반도 안보정세, 한일 간 정치경제문제, 북한문제, 한일관계 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⁵³ 이하 내용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세미나학술회의)에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www.knda.go.kr/study/seminar/index.jsp?ifans=001&menu=m_30_30>.

⁵⁴ 한일학술회의는 1986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에는 2002에 개최된 제17차 회의 이후의 기록만 게재되어 있다. 또한 동 홈페이지에는 제17차 회의 이후의 회의개최 자료 역시 극히 일부만 공개되어 있다. 본 내용은 외교안보연구소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한일학술회의 개최 기록을 토대로 추진실태를 정리한 것이다.

⁵⁵ 예를 들면 2008년 12월 9일에 개최된 제23차 회의에서 양측은 ‘한일관계 및 동북아 정세와 전망’이라는 대주제하에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⁵⁶ ‘한미일 3자 안보협력회의’의 주요내용은 2008년, 2010년(개최는 2011년 1월), 2011년, 2013년 회의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2009년, 2010년, 2012년도 회의 내용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회의 개최 여부 및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자 등이 참가하며, 미국 측에서는 평화연구소 연구자 외에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전문연구원, 대학교수, 국무부, 국방부 등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일본 측에서는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자 외에 외무성, 방위성 등의 관계자가 참가하고 있다. <표 II-11>는 동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내용을 간단히 도식화한 것이다.

<표 II-11> 한미일 3자 안보협력회의 개최 현황

	회의 주제 및 주요 논의내용
제2차 회의 (2008.11.20~21)	주제: 한반도/지역/세계 차원의 3국 안보협력 가능성 및 대상, 추진방안 - 미 오바마 행정부의 對동아시아·對한반도 정책 - 비전통적 안보위협, 세계 금융 및 경제위기, 테러대책, 해상수송로 안전, 자연재해/재난구조 등 글로벌 이슈에 관한 3국 협력
제5차 회의 (2011.1.17~18)	주제: 국제 및 지역 거버넌스 촉진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협력 방안 - 개발·에너지·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관한 한미일 협력 -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미중관계, 그리고 한미일 협력 - 한미일 3국 간 자유, 민주주의 등 공공가치 증진 방안 - 북한의 위협 및 급변사태(contingency) 가능성에 대한 한미일 협력
제6차 회의 (2011.12.14~15)	주제: 한반도/지역/세계 차원에서의 3국의 협력 - 대북 억지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 - 핵안보를 위한 3자 협력 - 예산 제약 환경하에서의 동맹네트워크 구축 방안 -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3국 간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8차 회의 (2013.7.16~17)	주제: 동북아 정세와 한미일 협력 -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

참고로 한일학술회의, 한미일 3자 안보협력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의제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은, 전자보다는 후자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점이다. 이에 더해 한미일 3자 안보협력회의에서도 회의 체 출범 초기(2007~2008년 경) 보다는 2011년 경(제5차 회의)부터 한반도 통일문제가 한미일 3국 간에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표 II-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미일 3자 안보협력회의는 제5차 회의 및

제6차 회의에서 ‘북한의 위협 및 급변사태(contingency) 가능성에 대한 한미일 협력문제’를 핵심의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3)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은 기본적으로 비정기적인 형태로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 간의 직접적인 연구교류협력 보다는 예를 들면 북핵문제와 주변 4강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여 일본 정부의 고위정책담당자, 연구자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본과의 연구교류협력을 실시하거나 학술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다.⁵⁷

구체적으로 통일연구원은 <표 II-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6·15남북공동 선언 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2005),’ ‘한일정책포럼(2008),’ ‘제4차 통일외교포럼(2010.9.30),’ ‘한국정치학회-통일연구원 공동 국제학술회의(2012),’ ‘동북아 4국과 민간전략대화 및 국제적 공동연구 관련 워크숍(2012)’ 등의 형태로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연구교류협력 프로그램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 학자, 전문가가 참가하고 있으며, 양국 간 학술회의 및 포럼, 강연회 등에서 논의되는 주요 이슈는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의 바람직한 통일방안에 대한 일본의 입장,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안보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의 통일편익과 분단 비용 등에 관한 것으로 한반도 통일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⁵⁷ 이하의 내용은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KINU 발간물(기타)에 공개된 학술회의 및 연구교류 중에서 일본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www.kinu.or.kr/report/report_04_01.jsp>.

〈표 II-12〉 학술회의/포럼 등 개최 현황

회의명	주제 및 주요내용	일본 측 참석자
6·15남북공동 선언 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005.6.9)	주제: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평가와 전망 -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평가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주변4국의 입장	- 확인불가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2006.6.9)	주제: 한반도 평화포럼에 관한 일본의 입장	- 다나카 히토시(전 외무성 총괄심의관)
2007 국제학술회의 (2007.6.7)	주제: 6·15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 이즈미 하지메(시즈오카 현립대학 교수)
한일정책포럼(2008.1.22)	주제: 한국의 신정부의 대북정책과 한일협력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일관계 - 북한의 핵폐기 문제에 대한 일본의 견해	- 에토 세이시로(중의원 의원), 오코노기 마사오(게이오대 교수), 와다 하루키(동경대 교수) 등 일본 학자, 언론인 20여명 참석
한중일러 국제회의 (2008.6.24)	주제: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	- 미무라 미쓰히로(일본 동북아경제연구소)
북한문제 학술회의 (2009.2.18)	주제: 북핵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 - 북핵문제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 미쓰코시 히데아키(주한일본대사관 공사)
제4차 통일의교포럼 (2010.9.30)	주제: 바람직한 통일방안에 대한 일본의 입장 (주한일본대사 강연) - 한반도에 대한 미중의 입장 - 바람직한 통일모색을 위한 연착륙(평화통일) / 경착륙(혼란 후 통일) 분석	- 아치 쇼타로(주한일본대사), 미쓰코시 히데아키(일본대사관 공사), 마키노 요시히로(아사히신문) 등 10여명 참석
통일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011.4.8)	주제: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 무토 마사시(주한일본대사)
한국정치학회-통일연구원 공동 국제학술회의 (2012.7.20)	주제: Korean Unification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 나카토 사치오(리츠메이칸 대학 교수)
‘동북아 4국과 민간전략 대화 및 국제적 공동연구’ 관련 워크숍 (2012.9.14)	주제: 주변 4대강국에서 본 통일편익과 분단 비용 - 안보적인 관점에서 본 한반도의 통일편익과 분단비용 - 아시아태평양 지역적인 관점에서 본 한반도의 통일편익과 분단비용	- 사타케 토모히코(방위연구소), 사하시 료(가나가와 대학 교수)

4)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F)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주요국의 각계 지도자와 민간 차원의 고위급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양자 간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일본국제교류재단과 1993년부터 매년 ‘한일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⁵⁸ 한일포럼은 21세기를 맞이하여 한일 양국이 단순한 관계를 넘어 미래지향적인 관계정립을 모색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 관한 솔직한 대화의 장(場)을 마련한다는 목적 하에 출범한 것이다. 동 포럼에는 주로 학술계, 문화계, 언론계, 재계, 정계, 관계 등의 고위층 인사가 참가하고 있다.

한일포럼은 기본적으로 5개의 세션으로 구분하여 개최되며, 각 세션의 기본 의제는 개최 시점의 한일 양국의 국내외 상황 및 동북아 지역 정세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동 포럼에서 한일 양측은 대체로 1) 한일양국의 국내정세(정치, 경제 등), 2) 동북아 지역 안보정세 및 한일안보협력, 3) 한일경제협력, 4) 한일 사회문화협력, 5) 한일 미래비전, 한일관계 증진 방안 등의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표 II-13>은 2000년 이후(제7차~20차) 한일포럼에서 논의된 주요의제 중에서, 특히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슈를 식별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동 포럼에서는 주로 한반도 평화체제, 북한의 체제문제, 급변사태 등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⁵⁸ 여기에서 이용하고 있는 ‘한일포럼’ 자료(제1차~제20차)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협조를 받아 입수한 것임을 밝혀둔다.

〈표 II-13〉 2000년 이후 한일포럼 개최 현황 및 주요 의제

구분	주요 의제 및 논의내용
제8차회의 (2000.9.16~19)	제3회의: 한반도 최근 정세 및 지역협력 - ①남북한 화해협력과 주변 4강의 역할, ②남북정상회담 후의 동북아 지역협력, ③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일 협력 , ④북일교섭과 한국의 대북포용정책
제17차회의 (2009.12.6~12.8)	제2회의: 북한 미사일/핵문제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과 협력 - ①북한 후계자 문제와 한중일의 역할, ②한미/미일관계 및 아태 안보의 현상과 전망, ③미국 오바마 정권의 세계 전략의 지역적 영향 제4회의: 새로운 한일관계의 과제(비전통적인 안보분야의 협력) - ①아시아 기후변동/환경오염 현상과 지구적 과제의 확대, ②지구적 차원에서의 한일협력 가능성과 협력 증진
제18차회의 (2010)	제2회의: 동아시아의 지역적 안전보장의 새로운 과제와 한일협력 - ① 북한 후계자문제 및 급변사태 시 한중일의 역할 , ②중국의 부상 및 아시아 지역 안보문제의 현상과 전망, ③동아시아 지역안보협력의 틀에 대한 모색

한편 2013년 8월 22일~24일에는 제21차 한일포럼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측에서는 유명환 한일포럼 회장(세종대 이사장/前 외교통상부장관)과 국회의원, 경제계, 언론계, 학계 인사 34명이, 일본 측에서는 모기유자부로 일한포럼 회장(키코망 사장), 후쿠다 야스오 前 수상 등 각계 인사 35명이 참석하였다. 제21차 한일포럼에서는 ‘동북아 안보정세 변화와 한미일 관계,’ ‘한일 신정권 출범과 정책과제,’ ‘역사 마찰 속의 한일관계’ 등을 의제로 한일 양측의 발표와 토론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⁵⁹

⁵⁹ “제21차 한일포럼 개최,” 한국국제교류재단, 8월 22일 개최식에서 후쿠다 前수상과 공로명 한일포럼 고문(동아시아재단 이사장/前 외무부장관)은 각각 기초강연을 통해 최근 갈등상태에 있는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후쿠다 前수상은 최근 양국 정상이 대화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돌려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후쿠다 前수상은 양국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공통 과제로 (1)저성장 고령화시대 지속적인 성장, (2)세계 슈퍼 파워가 되려는 중국에 대한 전략, (3)북핵 문제 등 3가지를 들며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후쿠다 前수상은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역사사지의 자세와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며, 양국의 민족주의가 때로 나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할 때 정치적 리더십이 이에 편승하거나 부채질

(다) 민간 차원

한반도 통일문제와 북한에 관해 민간 차원에서 추진된 것은 국내 학계 및 민간단체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특수한 역사관계를 생각해보면, 한반도 통일문제와 북한문제의 역사적 근원에 대해서도 탐구하려는 노력이 많았다.

먼저 대학의 연구소와 학술단체들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는 1996년부터 10년 동안 역사, 정치 등 7개 분야의 한일 과거사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한일 공동연구포럼’을 일본의 일한교류기금의 지원 하에 3년씩 단계별로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다. 이 공동포럼에 참가하는 양국 학자만도 80여 명이며, 학자들은 팀별로 10~12명씩 나뉘어 한일 공동팀장의 책임아래 각자가 맡은 과제를 연구한다. 역사1(전근대사), 역사2(근현대사), 정치, 경제, 문화 정치경제, 북한의 7개 팀에 속한 학자들은 연구 도중에 필요하면 양국을 오가며 연구하였다.

현재 한국에는 일본 연구를 중점으로 하는 대학 연구소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등 수많은 일본 관련 연구소에서는 한일 관계 연구와 더불어 북한 문제, 한반도 통일과 일본의 ‘편익’ 등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일본의 학계와 교환하고, 한반도 통일에 따른 일본의 ‘편익’을 일본 학계에 소개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과의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민간단체들도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일 협력위원회는 한일 간 우의를 다지기

하지 않고, 진화시키려는 강한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유명한 한일 포럼 회장과 모기 유지부로 일한포럼 회장을 비롯한 총 69명의 양국 참가자들은 24일 폐막 시 의장성명을 통해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의 의의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http://www.kf.or.kr/index.html?menuno=476&type=view&archv_no=784&path=0/1/7/125/134&tab=1&eqindex=0&lang=0>.

위한 양국 정치인과 기업인 등의 모임이다.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라 민간 차원의 대화창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69년 설립된 민간단체로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관해 협력과 친선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특히 1994년의 경우, 한일 협력위원회는 9월 23일 신라호텔에서 제32회 합동총회를 열고 동북아시아 정세변화에 따른 양국 간의 공동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총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한일양국은 이제 시대적 변환기를 맞아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확고히 하는 새로운 관계의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를 올바르게 아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무라야마(村山) 일본총리는 메시지에서 일본 내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우호협력관계가 일본외교정책의 중요한 기둥임은 변함이 없다며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병용 민족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남북 간 공존과 통일전선전술이라는 이중적 대남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 같은 이중정책을 지속하는 한 단기간 내 실질적인 남북관계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한일 NGOs 평화포럼’은 한국의 평화통일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한국의 NGOs들과 일본의 특별시민평화포럼위원회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2008년의 경우, 평화통일시민연대는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2008년 동북아 정세 변화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 NGOs의 과제’를 주제로 제2회 한일 NGOs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2008년 북미 핵협상 타결, 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군사력 증강, 한국의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영유권주장, 중국의 동북공정 등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직면하여, 동북아시아 평화를 지향하는 한일 민간 시민단체들(NGOs) 간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동아시아 평

화에 대한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한일 NGOs 간에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포럼에는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 연세대 노정선 교수, 일본의 이토 나리히코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2010년에 평화통일시민연대는 일본 시민평화포럼위원회와 8월 26일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2010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일 NGOs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4회 한일 NGOs 평화포럼을 열고 ‘한일 NGOs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하며, 북한은 핵무기를 처분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천안함 사태의 객관적 조사를 위해 중국, 미국, 북한, 남한이 참여하는 국제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일본 정부에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를 중단하는 한편 과거 식민통치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통일시민연대 이장희 대표는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평화로운 동아시아의 건설을 개별국가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며 시민단체와 지식인, 언론 등 동아시아 비정부 주체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한국외대 교수)와 이토 나리히코(쥬오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쿠츠자와 다이조(이라크 평화 TV국 인 재팬 운영위원), 키세 케이코(헌법9조-세계로 미래로 연학회(9조련)) 등 일본 토론자 6명과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옥식(평화네트워크 대표) 등 한국토론자 6명이 토론을 벌였다.⁶⁰

또한 한일 시민사회포럼은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열리고 있다. 1995년 시민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아태시민사회포럼(APCSF)에 참가했던 한일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돼 발족됐고 2002년 제1회 포럼(서울), 2003년 제2회 포럼(도쿄)이 개최되었다. 한일 시민운동

⁶⁰ 『한국일보』, 2008년 7월 24일; 『노컷뉴스』, 2010년 8월 24일; 『연합뉴스』, 2010년 8월 26일.

가들이 참여하는 한일시민사회포럼은 지구촌나눔운동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이 주최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체 형성’을 주제로 매년 양국을 오가며 진행되고 있다. 제3회 한일 시민사회포럼은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주최로 2005년 8월 20일과 21일 서울 종로 신문로 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에서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시민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포럼은 ‘다름을 작게 하고 같음을 크게 하자’는 슬로건 아래 100여 명의 한일시민단체 실무자 및 학계전문가가 모여 시민교육·지역에서의 시민정부 만들기·개인의 자유와 평등·세계화와 시민사회 등을 논의했다.⁶¹

(2) 문화외교 추진 실태

(가) 정부 차원

對일본 문화외교는 한일 간의 문화외교국장 회의를 통해 그 밑그림이 그려져서 주일한국문화원 등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일 양국 간 문화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일 문화외교 국장회의는 1983년에 처음 개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일 간의 문화외교국장 회의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2002년 제9차 한일 문화교류 국장급 회의에서는 2002년 한일 국민교류의 해 및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등 한일문화교류 전반에 대한 평가, 월드컵 공동개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교류사업, 문화·예술·문화재·학술·관광 및 지역 교류 등 양국 간 문화교류 전반에 걸쳐 논의하였다. 9차 회의에서는 양국의 문화유적지들을 복원하여 역사교육과 관광촉진에 활용할 것을 한국이 제의하였다. 2007년 제13차 한일 문화외교국장 회의에서는 청소년 교류활성화를 위한 워킹홀리데이 제도, 한중일 문화서틀사업 등이

⁶¹ 『연합뉴스』, 2005년 8월 20일.

논의되었다.⁶² 2010년 3월에는 제15차 한일 문화외교국장 회의가 개최되어, 한일 문화협력 강화를 위한 양국 정부차원의 전략 및 지원방안, 특히 한일문화교류회의 등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2010년 한일축제 한마당 행사, 문화콘텐츠 산업 교류, 유네스코에서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⁶³

대일문화외교의 대표적 기관인 한일문화교류회의⁶⁴는 1998년 10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정신과 1999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문화교류 전반에 대하여 양국이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1999년 6월 양국 문화계를 대표하는 각 11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한일문화교류회의는 매년 개최되고 있으나 주로 문화교류에 한정해서 협력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한일문화교류회의는 장기적으로는 한일 양국 간의 전반적인 문화·예술 교류 촉진 문제를 폭넓게 협의함과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문화교류 증진에 적극적 역할을 하는 자리로서 양국 국민 간의 문화교류를 폭넓게 증진시켜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북아 내의 협력자로서 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⁶⁵ 그 외 2005년 한일 우정의 해에 시작된 한일축제 한마당⁶⁶이 있다. 한일축제 한마당은 서울과 도쿄에서 개최되는데, ‘한일축제한마당 in

⁶²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boardid=235&seqno=306783&tableName=TYPE_DATABOARD&type=6> (검색일: 2013.11.11).

⁶³ 위의 홈페이지.

⁶⁴ 한일문화교류회의, <www.kjcec.or.kr/kjcec/announcement.htm> (검색일: 2013.11.11).

⁶⁵ 한일문화교류회의, <www.kjcec.or.kr/kjcec/introduction.html> (검색일: 2013.11.11). 한일문화교류회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교류’를 ‘문화외교’로 인식한다면 이 회의의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리고 현재 한국의 경우 민간 레벨의 본 회의를 컨트롤하는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되어 있는데, 대일 문화외교를 추진함에 있어 외교통상부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신종호, “한국의 문화외교 강화를 위한 추진 전략 및 지역별 차별화 방안” (외교통상부 연구용역보고서, 2009.12), p. 126.

⁶⁶ 한일축제한마당, <www.omatsuri.kr/korean/about/int1.asp> (검색일: 2013.11.11).

Tokyo'는 3회 개최되었다.

한일문화교류회의가 발간한 『한일문화교류 실태조사서』⁶⁷에 따르면, 음악, 미술, 영화, 출판, 전통문화, 대중음악, 연구, 애니메이션 등의 분야에서 한일 간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행사 가운데 통일, 동북아 평화와 관련된 행사는 한 건도 없었다.⁶⁸

주일한국문화원⁶⁹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공연, 미술, 영화, 강연회, 스포츠 교류, 문학, 한국어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통일과 관련된 행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⁷⁰

일본에 대해서는 문화교류에서 발전하여 문화외교 수준에서 대일 공공외교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 레벨에서는 통일, 북한, 동북아 평화 등에 대한 주제는 별로 다루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한국학외교 차원에서 도쿄 한국문화원에 세종학당이 개설되어 있다. 주일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은 지금까지의 ‘한국문화원 한국어강좌’를 독립시켜 한국문화원 부설기관으로 2009년 4월에 사단법인으로 독립하였다. 세종학당으로 독립한 이후 단순한 한국어 강좌를 탈피하여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기회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⁷¹

스포츠 외교 차원에서는 2002년에 제17회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2002. 5. 31~6.30)와 제14회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개최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한국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성과 등을 담은 홍보자료 ‘평화와 협력을 위한

⁶⁷ 한일문화교류회의, 『한일문화교류 실태조사서』 <www.kjcec.or.kr/exchange/kjcec2009.pdf> (검색일: 2013.11.11).

⁶⁸ 참고로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영화 관련 행사에서 오태영 作 “통일익스프레스”가 1회 공연된 적이 있으며, 재일동포들이 “One Korea Festival”을 개최하였다는 실적이 기록되어 있다. 위의 글, pp. 70, 88.

⁶⁹ 주일한국문화원, <www.koreanculture.jp/korean/cinemamain.php> (검색일: 2013.11.11).

⁷⁰ 2013년 11월 11일 “통일”을 주제로 검색한 결과, 한국에서 실시되는 제39회 한민족 통일문제 제전이 있다는 소개가 통일과 관련된 행사로는 유일한 것이다.

⁷¹ 주일한국문화홍보원, <www.koreanculture.jp/korean/lib_intro.php> (검색일: 2013.11.11).

햇볕정책’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발간하여 한국을 방문한 해외주요인사 및 선수단, 관광객들에게 배포하였다.⁷² 이는 스포츠 행사를 활용하여 통일 공공외교를 펼친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1991년 일본 지바현에서 개최된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에 남북한 단일팀이 참가하여 일본 매스컴의 시선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통일공공외교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단일팀이 참가했던 것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코리아’(2012년 제작)란 영화가 2013년 재일동포들의 노력으로 일본에 상영됨으로써, 일본 국민들에게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⁷³

(나) 1.5트랙 차원

우선 문화외교 차원에서 대일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반민반관 또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는 외교통상부 산하의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있다.

첫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외의 유명 박물관에 한국실을 설치하고 공연, 전시, Korea Festival을 개최하여 세계인에게 한국문화예술을 알리는 동시에 KF문화센터를 통해 한국과 세계의 쌍방향 문화교류를 추진한다는 목표 하에 해외박물관 지원, 문화예술교류협력, KF문화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⁷⁴

이러한 취지하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일본에 대해서도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매년 ‘한일 축제 한마당’을 개최하고 있다. 한일 축제 한마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⁷² 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0), p. 317.

⁷³ “ワンコリア女子団 世界卓球V 祖国統一願う実話 映画に,” 『読売新聞』, 2013년 6월 16일.

⁷⁴ 한국국제교류재단, <www.kf.or.kr/?menuno=136> 참조.

40주년을 기념한 ‘한일 우정의 해’를 계기로 시작된 행사로서, 2009년부터는 일본 동경에서도 개최되고 있다.⁷⁵ 예를 들면 2011년에 개최된 ‘한일 축제 한마당’에서는 ‘공존·공영의 21세기: 매듭, 사람을 하나로, 문화를 하나로, 미래를 하나로’라는 슬로건 하에 한국 퓨전 타악공연 및 일본 전통 타악공연, K-pop 커버댄스, 한류스타 소장품 옥션, 한식 소개무대, 한-일 전통 민요 공연, 한국 가요콘테스트 본선, 한일교류 학생 합창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실시되었다.⁷⁶ 또한 2013년 9월 21~22일에는 제5회 ‘한일 축제 한마당 2013 in Tokyo: 21세기의 여행을 함께’가 히비야 공원에서 개최되었다. 동 축제 기간 동안에는 K-POP 공연을 비롯해 K-POP 콘테스트 일본 전국대회, 한일 양국의 전통예술 공연, 한일 떡 만들기 시합, 한일 서커스 공연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었다.⁷⁷

한편, 이 외에도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일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주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12년 2월 10~26일에는 동경사진미술관에서 한국작가 2명을 비롯한 전세계 미디어아트 작가를 초청하여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10월 19~20일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일본 동아시아 현대음악제 앙상블 에클라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11월 4일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주일 오사카 총영사관과 공동으로 ‘사천왕사 왔소’ 제하의 문화예술공연을 주최하였다.

둘째, 해외문화홍보원은 2008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해외문화홍보원으로 개편된 이후 재외 한국문화원 업무 및 국제문화교류 업무를 총괄해 오고 있다.⁷⁸ 일본에 대해서 해외문화홍보원은 동경과 오사카에 한

⁷⁵ 한일축제한마당, <www.omatsuri.kr/korean/index.asp> 참조.

⁷⁶ 한국국제교류재단, 『2011 연차보고서』 (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2012년 3월), pp. 24~25.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동 행사의 전야제에 1,800여 명, 본 행사에 60,0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⁷⁷ 『日韓交流おまつり2013 in Tokyo 開催(2013.9)』, <www.nikkan-omatsuri.jp/japanese/reference-room/news/>.

⁷⁸ 해외문화홍보원, <www.kocis.go.kr/overseas.do> 참조.

국문화원을 설치하여 한국의 문화, 전통음악, 문학, 미술, 한일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⁷⁹ 예를 들면, 동경 한국문화원은 2010년 5월 25일 ‘새로운 100년을 향한 한일협력 방안’ 제하의 포럼을 개최하였는데, 동 포럼에는 일본 민주당 내의 ‘전략적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의원 모임’의 회장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당시 일본 국토교통성 장관 등이 참가하였다.⁸⁰

또한 2011년 1월 21일에는 ‘혼을 뒤흔드는 목소리: 비파, 신나이, 판소리’ 음악공연을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2월 11일에는 ‘국립오페라단 창작오페라 <아랑> 쇼케이스’ 행사를 개최하였다. <아랑> 쇼케이스 행사에는 마미야 다다토시(일본국제관광진흥기구 이사장), 이시즈카 데이치(국립극장 이사), 우메다 히로유키(레이타쿠 대학 명예교수, 한국문화훈장 수상) 등 주재국 문화 예술 및 학계 인사를 비롯하여 많은 주재국민들과 재일한국인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한편 2013년 8월 6일에는 ‘2013 한일 청소년 친선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국문화원은 오사카 어린이회의 초중대학생 43명과 한국국제 청소년 교육재단 초중고교생 20여 명을 초청하여, 8월이 일본의 추석인 ‘오봉(お盆)’ 기간인 점을 고려해 한국의 추석 소개 영상을 상영하고 차례상, 전통악기 및 놀이 등 다양한 한국의 전통문화 행사를 기획, 실시하였다.

참고로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주일 한국문화원은 對일본 공공외교

⁷⁹ 구체적으로 일본 한국문화원은 K-POP, 드라마, 영화 등에서 시작된 한류가 점차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전통예술(판소리, 전통 마당놀이 등), 고전문학,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무용, 한국어강좌, 중고생한국어무료강좌, 어린이문화서당, 전통악기강좌 등 한국의 다양한 문화예술에 관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⁸⁰ 해외문화홍보원, <www.kocis.go.kr/activities.do?langCode=lang001®code=REG0000&catecode=&searchText=&searchType=&startDate=&endDate=&page=15> (검색일: 2013.11.11).

차원에서 한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2013년 10월 15일 對일본 문화외교를 추진함에 있어 특기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주일 한국대사관 이전에 따라, 이날 일본 동경에 ‘코리아센터’가 새로 개설되었는데, 동 센터에는 그동안 對일본 공공외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주일본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동경지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사무소, 국외소재문화재단 일본사무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쿄 aT center(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Center), 동경한국교육원 등 6기관이 입주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일 한국문화원도 한국의 문화, 관광, 콘텐츠, 교육, 음식 등 다양한 한국관련 테마를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 하에서 對일본 문화외교를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동경에 일본사무소를 개설하여 한국 콘텐츠 기업의 일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일본사무소를 매개로 하여 K-POP, 한국 드라마, 음악, 방송, 게임, 만화, 등 한국 문화콘텐츠의 일본진출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콘텐츠 비즈니스 활동 및 네트워킹 교류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본사무소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 예술 콘텐츠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정기적인 포럼 개최, 콘텐츠산업 및 비즈니스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면서 한국의 문화예술 콘텐츠의 일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⁸¹

(다) 민간 차원

최근 10년간 계속된 일본 내에서의 한류 열풍과 함께 문화 자원을 활용한 민간 차원에서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일본

⁸¹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network/usa/japan/introduce/member.html> 참조.

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핵무기, 전쟁에 반대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차원에서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문화외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 문화외교 활동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 평화콘서트 및 원폭피해자 사진전시회를 들 수 있다. 이 행사는 2012년에 열렸는데, 단월드 청년회 그린D는 2012년 4월 5일 태평양 전쟁 말기, 일제에 의해 성적 희생을 강요당했던 생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여 계신 나눔의 집에서 개최한 한일 평화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태극무와 댄스로 공연을 펼쳤다. 이 행사는 전쟁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한국과 일본의 원폭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전쟁 반대,’ ‘평화수호’를 외치며 전쟁의 잔혹성과 피해를 알려, 평화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살아 있는 역사관 ‘나눔의 집’은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강요한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2010년을 핵무기 폐기와 평화, 한국과 일본의 우정과 연대 그리고 헌법 9조를 지켜내는 해로 만들자는 의의를 행사에 담았다. 행사는 오전 9시 30분 ‘위안부’ 할머니와 한일 원폭피해자 증언으로 시작되어 참가자들의 한일 ‘간담회(한일 자유토론)’ 이후, 오후에는 ‘한일평화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일반 시민들의 문화공연 교류가 이어졌다. 본 행사를 위해 일본 참가자 100명(히로시마, 나가사키, 오사카, 아이치, 시즈오카 등 헌법9조 모임, 연금자 모임, 신부인회)과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전국일제피해자 연합회,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한영외교, 전국 중·고등학교 연합회, 나눔의 집 국제팀, 산도깨비 풍물패, 서울호서전문학교 관광경영과 동아리, 한나라당 환경분과 등이 후원 및 참가했다.⁸²

둘째, ‘한일 생명평화 콘서트’가 있다. 이 축제는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2012년 12월 6일부

⁸² 『연합뉴스』, 2010년 4월 5일.

터 9일까지 대전·서울·안성에서 개최한 것이다. 아힘나 평화학교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주관한 이 콘서트는 2011년 3월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일본 후쿠시마지역 아이들을 초청하는 힐링캠프의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음악회였다. 한일 문화예술가들이 공연에 참여했다.

셋째, 한일 연극 페스티벌이다. 이 행사는 한국연극연출가협회와 일본연출자협회가 공동 기획한 것이다. ‘제1회 한일 연극페스티벌’은 2009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도쿄 이케부쿠로의 아울스팟 문화교류센터(OWL SPOT)에서 개최되었다. 양국 연극 단체가 공동 기획해 제작한 첫 번째 사업이다. 한편, 1992년 ‘한일연극인회의’가 출범한 뒤 1999년부터 매년 ‘국제연극교류세미나’를 통해 교류해 온 이들 단체는 2002년부터 ‘한일 연극교류센터’를 제안해 지난 6년간 한일 양국의 희곡을 함께 읽고 각각 15편의 작품을 번역해 소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2012년의 경우,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이 1월 27~30일 일본 도쿄 히가시이케부쿠로(東池袋) 아울스팟 극장에서 개최된 한일 연극 페스티벌을 통해 무대에 올랐다. ‘웰컴 투 동막골(2005)’은 영화감독 장진의 원작으로, 한국전쟁 당시를 배경으로 한 가공의 마을 동막골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웃음이 가득한 낙원과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남북한, 미군이 마음으로 교류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본 공연에서는 일본인 배우가 역을 맡고, 극단 사지키 도지의 주석인 히가시 겐지(東憲司)가 연출을 맡아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담한 기법으로 한국의 신비한 판타지에 도전했다. 한편, ‘웰컴 투 동막골’은 2012년 2월 8일 오사카시(大阪市) 돈(Dawn) 센터, 11일 후쿠오카시(福岡市) 다이하카타(大博多) 홀에서도 공연되었다. 이러한 연극 공연을 통해 한국전쟁 및 분단된 한국의 이미지를 부정적인 것만이 아닌 동아시아의 시민들이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넷째 ‘한일 평화증진연대’의 활동이 있다. ‘한일 평화증진연대’는 한국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는데, 2006년 4월 6일 경남도청에 등록을 한 후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장되었다. 전국의 대학생들과 시민, 그리고 일본 측 대학생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조직이다. 대창양로원 봉사활동,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경주 나사렛마을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며, 일본 측 일한 평화증진연대와 연대하여 일본 내에서 조총련-민단 일체화 활동을 통한 통일운동과 화합운동을 해 나가고 있다. 매년 하계, 동계 방학을 이용하여 대학생 지도자 초청 통일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광복60주년 평화와 통일은 참사랑으로'라는 주제로 2월 6일부터 10일간 개최된 한일대학생 리더십 워크숍을 주최하기도 하였다.⁸³

다섯째, '한일 청소년 공동 자원봉사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한국청소년연합(GreenNet)과 일본국제볼런티어학생협회(International Volunteer University Student Association: IVUSA)가 함께 주관하는 행사이다. 일본과 한국 대학생(대학원생도 포함)을 대상으로 한국 학생의 일본 초빙, 일본 학생의 한국 파견 프로그램을 각 한 주간 동안 실행한다. 한국에서의 행사가 끝나면 학생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자원봉사 일본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일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은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 및 스태프가 동고동락하며 자원봉사활동 및 양국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한 국제교류회를 겸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양국 대학생 간의 실질적 교류의 장이 되어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제11회 한일 대학생 GREEN & PEACE 한국캠프는 2007년 8월 4일부터 11일까지 7박 8일간 계속되었다. 한국 행사가 끝난 8월 20일부터는 한국 학생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자원봉사 일본 행사를 벌였다. 일본학생들은 이를 위해 4일 오후에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 대학생 60명과 일본 대학생 60명 및 스태프 등 모두 130여명이 7박 8일간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과 서울

⁸³ 한일평화증진연대, (2008.1.31), <<http://blog.daum.net/ybp0409/2057412>> (검색일: 2013.11.11).

에서 자원봉사활동 및 양국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한 국제교류회를 겸하는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이들은 4일부터 8일 오전까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에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하는 개막식과 평화동산 만들기에 이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 진입로 풀베기작업, 마을공동시설 보수공사 및 대청소작업, 마을주민 일손 돕기, 마을어린이 희망 만들기 활동을 벌였다. 8일 오후에는 군부대 위문에 이어 한일 양국 대학생팀으로 나누어 통일촌초등학교에서 친선체육대회를 열어 친선을 도모했다. 9일 오전에는 통일촌 견학, 도라OP 견학, 도라산 역 견학을 마치고 서울로 이동한 후, 오후에는 한국언론재단에서 “동아시아 환경·평화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했다. 10일에는 경복궁, 서대문형무소,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인사동 등을 답사하고, 저녁에는 폐막식 겸 환송회를 열어 양국 학생들이 준비한 전통문화 공연을 통해 문화교류 행사도 가졌다.

여섯째, 한일 Y청소년 협의회(청소년국제평화순례)의 활동이 있다. 동협의회는 한국YWCA연합회가 주최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제13차 한일 Y청소년 협의회는 2011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4박 5일간 한국의 올림픽 파크텔에서 개최되었다. ‘평화세상을 위한 한일YWCA 청년들의 행진-새터민·조선학교 청소년들과 더불어 살기’를 주제로 열린 이 행사에는 한국 청소년(대학생)35명, 일본 청소년 15명, 지도자 대표 등 총 50명이 참석하였다. 한일 양국의 공통 이슈에 대한 연구와 워크숍을 통해 각 국가의 활동과 정책을 이해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로운 삶을 위한 북한 이해와 특별히 새터민 청소년, 일본의 조선학교 청소년들과 동시대에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청년평화운동가로서의 역할을 논의하며, 일상 속에서의 실천 및 내재적인 평화가치를 실천할 청년평화운동가로서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제14차 한일 Y청소년 협의회는 2012년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규슈지역 미나마타

시에서 ‘탈핵과 동북아 평화에 대한 청년운동가로서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한국YWCA 대표(청소년, 대학생, 청년, 탈북청년) 20명, 일본YWCA 대표 20명 등 총40명이 참가했다. 한일 양국과 탈북 청(소)년과의 교류와 이해 증진, 한일 양국 간 청(소)년과 지도자 역량과 리더십 강화, 핵발전의 사회적 영향과 동북아 평화에 대한 고찰과 청년 운동가로서의 역할 모색과 논의 등을 제14차 모임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일곱째 재일동포가 주최하는 One Korea Festival이 있다. 오사카 등 주로 간사이 지방에서 시작된 One Korea Festival은 20년 넘게 계속되어 일본 사회에 통일의 당위성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One Korea Festival은 오사카의 재일교포 3세인 정갑수가 1985년에 시작한 것으로 ‘38선이 없는 일본에서 우선 하나가 되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으로 2010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이르렀으며, 오사카뿐만 아니라 도쿄에서도 이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 축제에서는 한국 무용, 민요, 태권도 공연 등이 진행되고, 갈비 등 한국 음식이 소개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⁸⁴

이 외에도 對일본 문화외교 차원에서 볼 때, 고베에서는 1997년부터 통일 마당 고베가 개최되고 있는데, 이 행사는 한국 문화의 소개에 더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축제라는 점이 특징이다.⁸⁵ 또한 2000년도 초반 한류 붐을 계기로 한국 영화가 일본에 많이 수출되었는데, 일본에서 관객 동원에 성공한 영화들 중에 다음과 같은 영화들은 그 영화의 내용에서 볼 때, 일본 관객들에게 분단의 비극,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⁸⁴ “南北統一目指イベント,” 『読売新聞』, 2010年 9月 17日.

⁸⁵ “朝鮮半島統一願う,” 『読売新聞』, 2011年 5月 19日.

〈표 II-14〉 일본에서 흥행에 성공한 분단통일 관련 영화

관객동원 순위	영화제목	상연연도	수익 및 동원관객
4	쉬리	2000년	18억엔 (130만명)
5	태극기 휘날리며	2004년	15억엔
6	JSA	2001년	11.6억엔
11	실미도	2004년	6억엔 (50만명)

출처: “韓国映画興行成績ランキング,” <www.ja.wikipedia.org/wiki/%E9%9F%93%E5%9B%BD%E6%98%A0%E7%94%BB#_E9_9F_93_E5_9B_BD> (검색일: 2013.11.11.).

또한 외국인에게만 개방되어 있는 판문점 관광도 일정 부분 한국의 안보 현실을 홍보하고 한국의 통일 필요성을 일본 국민에게 심어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판문점을 방문했던 일본 대학생은 판문점 관광의 경험으로부터 “남북통일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세계 평화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신문 투고도 하고 있다.⁸⁶

(3) 기타 추진 실태: 한국학·미디어·스포츠 외교

(가) 1.5트랙 차원

우선 한국학 외교의 관점에서 볼 때 1.5트랙 차원의 對일본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다. 이 재단은 1994년부터 교육과 연구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을 알린다는 목표 하에 한국학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⁸⁷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동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말까지 12개국 72개 대학에 108개의 한국학 교수직을 설치했으며, 28개국 41개 대학에 객원교수를 파견하였다. 특히 2011년부터는 해외에서의 한국학 강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KF Global e-school’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

⁸⁶ “談論風発「日韓関係」,” 『読売新聞』, 2013年 1月 20日.

⁸⁷ 한국국제교류재단, <www.kf.or.kr/?menuno=135> (검색: 2013.11.11) 참조.

은 한국의 언어, 문학, 역사, 정치, 경제, 국제관계 등 한국에 관한 강좌를 화상강의로 제공하는 것이다. 2011년에는 해외 12개국 19개 대학에 35개의 한국학 강의를 새로 개설하여 739명의 해외 학생이 수강하였으며, 2012년에는 23개국 57개 대학에 121개 한국학 강의를 e-school를 통해 제공하였다.⁸⁸

이처럼 한국학 진흥 사업은 한국어/한국학 강좌운영 지원을 비롯해 한국어/한국학 학술활동 지원, 펠로십, 외국 교육자 한국학 워크숍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고 있다.⁸⁹

이들 프로그램 중에서 對일본 공공외교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우선 ‘한국어/한국학 교수직 설치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동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와세다 대학에 객원교수를 파견하여 한국학 강좌를 운영한 실적이 있다.⁹⁰ 한편 2012년도의 對일본 한국학 진흥 사업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⁹¹

첫째, KF Global e-school 사업 분야에서는 동경대, 리츠메이칸대, 게이오대 등 5개 대학에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 등을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였다. 둘째, 한국학 학술활동 지원 사업은 동경대, 게이오대, 큐슈대의 3개 대학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한국어 말하기 대회 사업 분야에서는 주일 히로시마 영사관과 공동으로 ‘일본 히로시마 말하기 대회’를

⁸⁸ 김기정·최종건 외, 『한국 공공외교 수행체계 연구』 (외교통상부 연구용역과제 보고서, 2012년 12월), pp. 65~66, <http://www.mofa.go.kr/mofat/htm/issue/servicereport_3.pdf> (검색: 2013.11.11).

⁸⁹ 한국국제교류재단, 『2012 연차보고서』 (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2013), pp. 3~20. 구체적으로 한국어/한국학 강좌운영 지원 프로그램에는 한국어/한국학 교수직 설치, KF Global e-school이 있으며, 한국학 학술지원 프로그램에는 실용한국학, 교육자료개발지원,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어 교육자 연수 등이 있다. 장학제도에는 한국어펠로십, 한국전공 대학원생 장학지원, 박사후과정 펠로십, 방한연구 펠로십이, 외국교육자 한국학 워크숍 프로그램에는 국내 개최 외국 교육자 한국학 워크숍, 해외 개최 외국 교육자 한국학 워크숍이 있다.

⁹⁰ 한국국제교류재단, 『2011 연차보고서』 (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2012), pp. 8~9.

⁹¹ 한국국제교류재단, 『2012 연차보고서』, pp. 3~20.

개최하였다. 셋째, 장학사업 분야에서는 게이오대, 교토대, 동경대, 와세다대 등 5개 대학에 대해 학술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외국교육자 한국학 워크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 교육자 한국학 워크숍’을 일본문부과학성과 공동으로 서울대 일본연구소에서 개최하였다.

다음으로 스포츠 외교 차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과 한국관광공사가 對일본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對일본 태권도 문화의 전파·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를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의 하나로 선정하여,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정신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전파한다는 목표 하에 태권도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태권도와 연계된 관광상품을 개발해 왔다. 이를 위해 2011년에는 태권도 문화 전파를 위한 사범(12개국), 시범단(30개국), 평화봉사단(50개국), 대학생 인턴사범(미국 120명), 외국 공립학교 수업 지원(4개국)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다.⁹²

이러한 취지하에 일본에 대해서도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의 전통무술이자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통해 일본의 對한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0년 6월 17일 동경 한국문화원은 요쓰야 청사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문화원 한마당홀에서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공동으로 경기도립무용단 태권무무(跆拳道舞) ‘달하’공연을 개최하였다. 태권무무 ‘달하’는 2008년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초연된 후 2009년 10월 국립극장에서 열린 ‘세계 국립극장 페스티벌’ 무대에 출품된 창작무용으로 무용과 태권무술을 조화시킨 새로운 형태의 공연예술이다. 동 공연에는 사카타 도이치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을 비롯해 고다 다카후미 문화청 차장, 한일친선협회중앙회 오치 미치오 이사장, 동경 시티 발레단 아다치 에츠코 이사장 등 일본의 문화, 예술계 주요인사 3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행사 기간

⁹² 김기정·최종건 외, 『한국 공공외교 수행체계 연구』, pp. 54~55.

이들 동안총 600여명이 참가하였다.⁹³

일본 한국문화원은 이들 행사를 통해 한국 스포츠의 인지도를 높이고 나아가 한류 스포츠 붐을 조성해 나간다는 목표 하에 문화원 태권도 강좌 개설, 태권도 체험교실 개최(지방 순회), 한일 양국의 올림픽 태권도 메달리스트의 강연 개최 등의 행사를 주최하는 동시에, 태권도를 한국음악 및 무용 강좌, 민속놀이, 요리교실, 한식, K-POP, 한글, 설 전통놀이 등과 연계하는 형태로 對일본 스포츠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의 관광 진흥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써, 해외 관광객의 한국 유치를 위해 한국의 대외적인 이미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⁹⁴

이러한 목표 하에 한국관광공사는 對일본 공공외교 차원에서 동경(일본 지역센터),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에 지사를 설치하여 일본의 여성, 가족, 청소년, 실버층 등을 주요 유치대상으로 쇼핑, 미용 등 개별 관광객 유치, 한류 및 스포츠이벤트 활용한 방문객 유치, 청소년 교육여행 등 단체관광객 유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 광고, 언론인 대상 홍보 및 기사화 촉진 등을 통한 한국 관광홍보 활동, 2) 현지 관광업계 대상 판촉활동, 한국 관광상품 개발 및 모객 촉진 등 해외관광객 유치활동 전개, 3) 컨벤션 유치 및 국제협력활동, 4) 현지 업계와의 상품개발 및 판촉 지원, 현지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한 지자체 및 국내 관광업계의 해외판촉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한국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⁹⁵

이러한 한국 관광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관광공사는 1992년부터 매

⁹³ 한국국제교류재단, <www.kf.or.kr/?menuno=135> (검색: 2013.11.11) 참조.

⁹⁴ 김기정·최종건 외, 『한국 공공외교 수행체계 연구』, p. 68.

⁹⁵ 한국관광공사, <www.kto.visitkorea.or.kr/kor/biz/main/foreignMarketing.kto> (검색일: 2013.11.11) 참조.

년 ‘경주 벚꽃 마라톤대회’를 경주시,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동 마라톤 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한일친선을 목적으로 시작된 행사로서, 매년 한일 양국에서 만 명 이상이 참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 참가자의 경우 한국관광공사와 요미우리신문의 적극적인 참가 유치활동으로 매년 많은 일본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9년에 640여명, 2012년에는 약 1,400여명이 참가하였다.⁹⁶

(나) 민간 차원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에서 지식, 문화외교 이외의 외교를 살펴보면, 미디어 외교, 종교 활동, 기업 외교 등이 존재한다. 먼저 미디어 외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일 언론인 심포지엄’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과 일본의 신문노동조합연합의 공동 주최로 1995년 5월 2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31층 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주제는 ‘해방 50주년 기념 한일 언론인 심포지엄’이었다. 본 심포지엄은 한일 언론인들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양국 사이의 발전에서 언론의 역할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열렸으며, 일본 측 참가단 140여명을 포함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양대 이영희 명예교수가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한일 양국 특파원 보고는 조양욱 前국민일보 동경특파원과 키요다 하루히토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이 맡았다. 오후에 속개된 ‘한일 관계와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양국 언론인들이 동북아 평화와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양국 언론인들은 25일 오전 대표자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공동성명에는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 언론인들의 솔직한 반성을 바탕

⁹⁶ “제18회 경주벚꽃마라톤 워킹대회 개최,” 『노컷뉴스』, 2009년 3월 31일; “慶州マラソン1万5200人,” 『読売新聞』, 2012년 4월 8일; “吉富さんハーフ女子V,” 『読売新聞』, 2012년 4월 8일.

으로 한 동북아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한 공동협력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매경-게이오대 포럼’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를 맞아 매일경제와 일본 사학명문인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1월 12일 매일경제신문과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KEIO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KIEAS)와 공동으로 개최된 포럼이다.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게이오대 미타 캠퍼스에서 열린 포럼에는 1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몰려 한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양국 전문가의 고견을 청취했다. 일본 사립 명문대학인 게이오대가 외국 언론사와 공동 포럼을 개최한 것은 ‘매경-게이오대 포럼’이 처음이었다. 이 포럼에는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를 비롯해 주일 대사관 측 관계자도 다수 참석하였으며 매일경제신문 제휴사인 니혼게이지이신문도 후원에 나서는 등 각계각층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권철현 주일대사와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이 축사를 하였으며, ‘새로운 한일 관계 100년을 위해’를 주제로 삼고 중국과 북한 문제, 동남아·중동 이슈 등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테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일 한국대사관과 니혼게이지이신문사, 신한은행이 후원하며 게이오대 교수진 이외에도 이케다 모토히로 니혼게이지이신문 논설위원, 윤민호 미주개발은행 아시아사무소 연구총괄관, 강기홍 주일 한국대사관 문화원장 등 국제기구와 일본 미디어 등에서 활동 중인 명망 있는 인사들이 참석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또한, 양국 간 새로운 동반자 시대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외교·문화 분야의 다양한 액션플랜(Action Plan)들이 제시되었다.⁹⁷

한편, 종교단체에 의한 통일공공외교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일 도시농어촌선교협의회(Urban Rural Movement: 이하 URM)는 한일교회협회에서 양국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사랑의 관계에서 과거의 역사를

⁹⁷ 『매일경제』, 2009년 12월 30일; 『매일경제』, 2010년 1월 12일.

이해하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공동화로서 주어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전제된 상호이해와 협력을 하고자 노력키로 하자고 협의한 데서 시작된다. 2005년의 협의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도시농촌선교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Urban Rural Movement: KNCC-URM)와 일본NCC-URM(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Japan, Urban Rural Movement: NCC-URM)이 함께 개최했으며, 2013년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일본기독교협의회 도시농촌선교위원회가 함께 개최했다. 특히 2010년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제9차 한일 NCC URM 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 새로운 연대-한일강제병합 100년’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양국 교회 50여 명의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가 저질렀던 식민지 범죄에 대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동아시아 평화와 공생을 위해 일본 헌법 9조 개정을 반대하고,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체제 구축을 이룰 수 있도록 한일 교회가 세계 교회와 연대해 평화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 외에도 한국의 다양한 민간단체가 통일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일 간 해저터널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통일공공외교도 추진되고 있다.

‘한일 터널 추진 익산시 대회’는 2011년 1월 26일 한일터널추진 익산시대회실행위원회 주최, 익산신문사, 평화대사협의회익산시지부, 세계초종교국가연합 전라북도도지부, 일본의 세계평화연합후쿠오카현연합회, 일본의 아시아평화문화교류협회, 남북통일을기원하는일본인회 후원으로 전북 익산시 갤러리아웨딩 4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한일 터널’은 일본 큐슈에서 이키섬·대마도를 거쳐 한국에 당도하는 235km의 통로를 해저터널과 교량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본 대회의 결의문에는 인류의 소원인 ‘인류 한가족’ 평화이상세계의 실현을 위해 민족, 국가의 벽을 넘는 ‘국제하이웨이’를 실현하여야 하며, 한일 간에 희망찬 미래를 위해 한일 공동으로

‘한일 터널’을 하루 빨리 실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한국·일본 사이에 ‘평화터널’을 실현하고 한반도를 종단하는 아시아하이웨이와 연결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며, 전라북도가 하루빨리 ‘한일 터널추진도민회의’를 설립하고 한일터널 실현을 향한 대국민운동을 전개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같은 목적의 ‘한일터널건설 추진 부산광역시대회’는 2012년 7월 4일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빌딩 10층 대강당에서 일본 이와시타 에이지 도쿠시마현 의원과 미마 히데오 도쿠시마시 의원 등 일본대표단 21명과 한국 측 평화대사 및 한일터널연구회 회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⁹⁸ 또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선명 총재는 1981년 11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제안했다. 국제평화고속도로 프로젝트는 세계를 고속도로망으로 연결함으로써 국경을 철폐하고 인류를 하나로 묶자는 거대한 구상을 담고 있다. 문 총재는 이날 국제평화고속도로와 함께 한일해저터널의 건설을 제안했다. 특히 한일터널은 한일 간에 도로 교통망을 건설한다는 차원을 뛰어넘어 남북통일과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개편이라는 거대한 비전 아래 제안됐다.

이와 같이 한국의 미디어, 종교단체 등은 일본의 민간단체들과 공동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평화 실현, 북한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4) 통일관련 공공외교 추진 실태: 북핵문제 협력 유도

(가) 1.5트랙 차원

본 절에서는 1.5트랙 차원의 對일본 통일관련 공공외교(북핵)에 대해 통일연구원을 제외한 3개 기관(한국국방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한국국제

⁹⁸ 『세계일보』, 2012년 7월 6일.

교류재단)의 추진실태에 한정하여 고찰한다. 통일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연구교류협력 프로그램이 북핵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타 연구기관에 비해 ‘한반도 통일’ 문제에 초점을 맞춘 국제학술행사, 세미나, 강연회 등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일연구원에 관한 실태조사는 생략한다.

첫째, 한국국방연구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 통일 및 통일관련(북핵) 對일본 공공외교 차원에서 PCRМ과 한일연구교류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표 II-15>는 한국국방연구원의 PCRМ-Japan 사업팀이 일본 정부의 관료, 정치가, 연구자 등에게 발송하고 있는 ROK-Angle 중에서 對일본 통일관련(북핵) 공공외교로 분류 가능한 이슈를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표 II-15〉 ROK-Angle의 對일본 통일관련(북핵) 이슈 현황

구 분	발송 주제	비고	
한국의 안보국방정책	①2012년도 국방예산안 분석, ②동북아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제주해군기지, ③한국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 추진방향 등	11건	
한미동맹	①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 배경과 그 성공을 위한 한국의 역할, ②제4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의 성과와 의의 등	8건	
북한문제	북핵/미사일	①북한의 비핵화와 포기할 수 없는 책무, ②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실험과 국제협력의 필요성, ③북한의 핵전략 노선의 변화와 핵능력의 강화	3건
	북한위협	①천안함 침몰 사건과 한일협력, ②북한의 서해무력도발: 배경/전략적 의도/결과, ③북한의 위협평가와 한국군의 대응 방향	3건
	북한체제 등	①김정은 정권 1년 평가와 안정성 전망, ②북한의 군수산업 능력 평가와 향후 전망	2건
한반도 통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경제/민족의 3개 공동체	1건	
한반도/ 동북아 정세 등	①동아시아의 새로운 세력분포와 그 함의, ②북미 ‘뉴욕회담’ 이후 6자회담의 단계적 추진방향 등	11건	

<표 II-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PCRM-Japan은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관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등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 이슈를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PCRM-Japan 사업팀이 그동안 발송한 ROK-Angle 총 39건 중에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위협과 북한 체제 등에 관한 이슈는 총 8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체 발송 건수의 약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한국의 국방정책, 한미동맹 관련 이슈와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일연구교류회의도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동 회의에서는 주로 북한의 핵문제와 한미·미일동맹, 북핵문제와 6자회담, 북한의 핵문제와 한일 양국의 대북정책 등에 관해 양측 연구소의 연구자 간 의견 교환 및 논의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더해 동 회의에서 한일 양국이 북한의 김정일 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북한문제 전반에 대해 거의 매년 논의하고 있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둘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교안보연구원은 대일공공외교 차원에서 ‘한일학술회의,’ ‘한미일 3자 안보협력회의,’ ‘한중일 3자 협력포럼’ 등의 연구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對일본 통일관련(북핵) 공공외교의 성격을 띠는 프로그램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회의와 한일학술회의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북한의 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의제를 채택하여 논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북한의 핵문제 보다는 북한의 체제 변동문제(급변사태 등)에 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 II-16〉 한일학술회의 북핵문제 논의 현황

구분	회의 주제 및 주요 논의내용
제17차 회의 (2002.11.18~20)	주제: 한일관계 현황과 전망 - ①최근 남북관계 및 내부변화, ② 핵개발문제 , 한반도 정세 변화와 동북아 안보환경 전망
제19차 회의 (2004.10.8~9)	주제: 북핵문제 , 한일관계, 지역협력 - ①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 모색 , ② 북핵문제와 한미일 공조 방안 , 한일 FTA 실현 가능성 분석 평가
제20차 회의 (2005.5.22~23)	주제: 수교 40주년의 한일관계: 협력의 과제들 - ①한일관계 현황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전망, ② 북핵문제와 6자회담 전망 , ③한일 FTA와 동아시아 협력, ④한일 간 역사문제와 한일 파트너십
제21차 회의 (2006.6.17)	주제: 동북아 안보와 한일관계 - ①한일 양국의 국내정세와 양국관계, ②한미동맹과 미일동맹 비교, ③ 한반도 비핵화문제 , ④한일 양국의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 방안
제23차 회의 (2008.12.9~10)	주제: 한일관계 및 동북아 정세와 전망 - ①한일 양국의 국내정세와 한일관계 전망, ②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일 양국의 대응방향(북핵문제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③6자회담의 현황과 전망, ④동북아 평화협력 증진을 위한 정치/경제적 협력 방안
제26차 회의 (2011.6.15)	주제: 동아시아 안보환경 평가와 전망 -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중국, 북한문제 , 한일협력
제27차 회의 (2012.6.14)	주제: 주요국 지도부 교체기의 한일협력 - ①미국의 신군방전략과 미중관계, ② 북한의 내부정세 및 대외정책, ③한일 간 역사/영토문제, ④한중일 FTA 및 일본의 TPP 정책 전망

한편 후자는 <표 II-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핵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실제로 한일학술회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추진방향(제19차 및 제20차 회의), 한미일 공조 방안(제19차 회의), 북핵문제와 한반도 비핵화문제(제21차 회의)의 상호 연계 방안 등 북핵문제를 거의 매년 핵심의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셋째,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한일포럼은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 나아가 양국의 경제·사회문화 분야까지를

총망라한 의제를 다루는 회의체이다. <표 II-17>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한일포럼(제8차~제20차 회의)’의 주요의제 중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주요의제로 다루고 있는 회의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한일포럼은 동 회의 기간 중에서 총 6회에 걸쳐 북한의 핵문제를 주요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동 포럼이 한일 양국 간 각종 현안을 총망라하는 대화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처럼 북한의 핵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점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다.⁹⁹

<표 II-17> 한일포럼 북핵문제 논의 현황

구분	주요 의제 및 논의내용
제8차 회의 (2000.9.16~19)	제3회의: 한반도 최근 정세 및 지역협력 - ①남북한 화해협력과 주변 4강의 역할, ②남북정상회담 후의 동북아 지역협력, ③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일 협력, ④북일교섭과 한국의 대북포용정책
제9차 회의 (2001.8.31~9.3)	제3회의: 동북아 지역 안보정세 - ①한반도 정세, ②부시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일본, 중국, 러시아의 역할
제10차 회의 (2002.9.6~9.9)	제4회의: 중국의 대두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 - ①중국의 군사적/정치적 영향 증대와 아태지역 안전보장 전망, ②중국의 대두와 한중일의 안보협력과제, ③중국상(像)의 검증과 아태 지역의 장래
제11차 회의 (2003.8.31~9.3)	제3회의: 북한 핵개발 문제에 대한 한일의 대응과 양국 협력 관계 전망 - ①북한의 핵보유 의도 및 능력 평가, ②북한 핵개발 문제와 한일협력: 한일 공조문제의 원칙과 행동 강령, ③6자회담과 한일관계: 일본의 시각
제12차 회의 (2004.9.13~9.15)	제2회의: 동북아 안보상황의 진단과 한일 안보협력관계 전망 - ①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비대칭성과 한일 안보협력과의 관계, ②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일 간 인식 차이, ③한국의 우라늄 농축 문제

⁹⁹ 단,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 중 고찰 분석을 생략한 부분(제1차~제7차 회의)에서는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구분	주요 의제 및 논의내용
제13차 회의 (2005.8.29~8.31)	제3회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축과 한일협력: 정치적 도전과 전망 - ①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공조관계의 이완, ②북핵문제 이후 한미일 공조문제, ③중국의 부상과 대중 포용전략, ④과거사, 독도 및 중군 위안부 문제와 한일관계
제14차 회의 (2006.8.29~8.31)	제2회의: 동아시아 안전보장의 과제와 한일협력관계 - ①북한 미사일 발사의 배경과 해결방식, ②중국위협론: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유도를 위한 한미일 연계, ③한미일 3국의 연계 가능성
제15차 회의 (2007.8.28~8.30)	제3회의: 동아시아의 안전보장과 평화 협력 - ①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 ②2·13합의와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③아시아 안전보장체제의 가능성, ④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대응
제16차 회의 (2008.8.28~8.30)	제2회의: 동아시아의 변동과 외교/안전보장 분야의 한일협력 - ①독도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②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과 한국의 대북정책, ③중국의 국력신장과 동아시아 안보질서
제17차 회의 (2009.12.6~12.8)	제2회의: 북한 미사일/핵문제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과 협력 - ①북한 후계자 문제와 한중일의 역할, ②한미/미일관계 및 아태 안보의 현상과 전망, ③미국 오바마 정권의 세계 전략의 지역적 영향
제18차 회의 (2010)	제2회의: 동아시아의 지역적 안전보장의 새로운 과제와 한일협력 - ①북한 후계자문제 및 급변사태 시 한중일의 역할, ②중국의 부상 및 아시아 지역 안보문제의 현상과 전망, ③동아시아 지역안보협력의 틀에 대한 모색
제19차 회의 (2011.8.24~26)	제2회의: 국제적/지역적 안전보장의 증진과 한일양국의 협력 - ①동북아 질서와 한일협력, ②북한정세와 우리의 대응방향: 북한 핵무장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③북한을 둘러싼 안전보장 과제와 한일협력
제20차 회의 (2012.12.21~22)	제1회의: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 지도자 교체와 한일/중일관계의 과제 - ①미중관계 전망과 동북아 지역 안보환경, ②중국의 부상문제와 한일협력, ③북한의 핵문제와 김정은 체제

(나) 민간 차원

일본의 민간 차원의 주체들이 북핵문제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일본은 전 세계 유일의 원폭 국가이며, 최근 2011년 3월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민간 차원에서 활발한 활동 및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한국의 통일 관련 공공외교 중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對일본 통일공공외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對일본 통일 관련 공공외교, 즉 북핵문제 협력 유도 차원에서 민간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일 시민사회반핵포럼’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동 포럼은 한일시민사회포럼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것으로 2010년 11월 9일, 10일 한국의 사회진보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과 일본의 원수폭금지 일본국민회의, 원자력자료정보실, 반핵아시아포럼 일본사무국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서강대학교 예수회센터와 울산에서 개최되었다. 포럼은 토론회와 신고리 원전과 경주 방폐장 관련 지역 간담회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10 한일 시민사회포럼 조직위원회가 주최하였다. 포럼의 주제는 ‘핵발전소 수출과 동아시아 핵 확산위기, 한국-일본 시민사회의 과제’였다. 특히 배성인 한신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동아시아 핵확산 방지를 위한 한일 시민사회 과제’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미국의 핵전략, 그리고 한국의 반확산 정책,’ ‘일본의 핵재처리의 역사와 시민사회의 과제’ 등과 관련된 발제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일 양측의 참가자들은 일본의 재처리 추진 역사와 현황을 통해서 본 핵발전소의 또 다른 면인 플루토늄의 재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핵확산 정책에 대한 한일 시민사회단체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특히 2012년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비핵화와 평화는 핵무기 원료물질의 확보나 호전적인 군사동맹이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포기과 적극적인 군축만이 해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앞서 ‘지식외교’의 관점에서 언급한 ‘한일 NGOs 평화포럼’

I

II

III

역시 북한의 핵무기 폐기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2010년 평화통일시민연대는 일본 시민평화포럼위원회와 8월 26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2010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일 NGOs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4회 한일 NGOs 평화포럼’을 개최하고 ‘한일 NGOs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두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하며, 북한은 핵무기를 처분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천안함 사태의 객관적 조사를 위해 중국, 미국, 북한, 남한이 참여하는 국제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를 중단하는 한편 과거 식민통치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한일 예비역장성 간 국방안보협력’ 활동이 있는데, 동 교류 역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간 전략적 공조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고명승 성우회 회장과 일본 방문단 일행은 2012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일본 안전보장간화회(安全保障懇話會)를 방문하였다. 이 방문은 성우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전략교류의 일환으로 2011년 11월 양 기관이 매년 상호 방문하여 한일 국방안보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성우회 방문단은 11월 21일 대한민국 민단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22일 한일 국제전략 세미나 참석, 모리모토 사토시 방위대신과 이와시키 시게루 통합막료감부 의장과의 환담, 그리고 통막학교 방문과 통막학교에 유학 중인 한국군 장교 격려 등의 일정을 소화하였다.¹⁰⁰

¹⁰⁰ 『국방일보』, 2012년 11월 20일.

3. 전문가 인식조사

가. 전문가 인식조사의 특징

(1) 문항 작성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특징

본 연구는 한국의 對일본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의 실태에 관해 한국 및 일본의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문헌연구 중심의 분석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일 양국의 일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일반적인 공공외교 및 한반도 관련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전문가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는 앞서 분석한 한국의 對일본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분석을 보완하는 의미로 실시되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문가들의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경험과 인식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인식조사는 한국의 공공외교 일반과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한반도 통일 관련 공공외교(북핵 문제)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 및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한반도 통일 관련 공공외교에 관한 문항은 현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은 총 3개 부분, 3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의 내용은 한국의 공공외교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의 추진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다음 3개 부분의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한국의 공공외교 일반에 관한 문항으로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에 일관성을 기하고자 공공외교의 정의를 제시한 뒤, 한국의 공공외교의 추진 성과 평가, 주요 목표, 추진 체계, 주요 행위자, 주요 수단, 프로그램별 비중, 대상 지역, 주요 자산에 대한 설문 등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I

II

III

제2부는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에 관한 문항으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평가와 함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설문 등 총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부는 한반도 통일 관련 공공외교 중, 특히 ‘북핵문제’를 핵심주제로 설정하여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에 대한 설문 등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은 전문가 인식조사에 참가한 일본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소속 기관 및 관련분야 경력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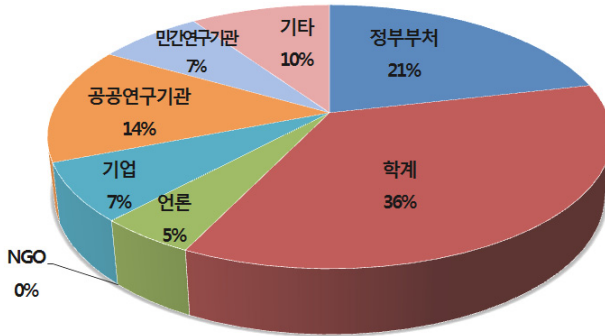
(2) 전문가 선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특징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를 위해서는 일반인의 인식 조사도 중요하지만, 일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본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과 공공외교에 관한 실태에 대해 일반인보다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일본과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전문가 42명을 선정하였으며, 참가자 선정은 한반도 통일 문제 및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한국과 일본의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일본 관련 연구에 관계하는 학계, 연구기관 인사와 일본 문제를 취급하는 언론계 인사, 한국과 일본에 주재하는 기업인, 일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인사들로 한국인 20명, 일본인 22명으로 하였다. 단, 본 연구는 국적에 따른 전문가들의 의견 차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았다. 본 조사의 목적은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일본 전문가의 인식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취합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또한 조사 대상인원이 42명으로 비교적 소수이기 때문에 국적별로 대상인원을 구분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 간에 인식차가 확연히 드러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조사는 한반도 통일 및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에 대한 전문성을 기준으로 관료, 언론인, 기업인, 정책연구기관의 연구원, 대학교수 및 대학의 연구원, NGO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일본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체 응답자들에게 소속 기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학계 소속인 응답자가 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밖에 정부부처 21%, 공공 연구기관 14%, 기타 10%, 민간연구기관과 기업이 각각 7%의 비율을 보였다. 언론 소속 응답자는 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II-3〉 소속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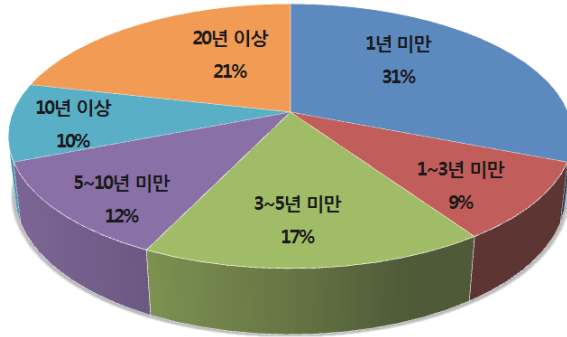


또한 한일 양국의 일본 전문가들이 한반도 관련 공공외교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1년 미만’이 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20년 이상이 21%로 나타났으며, 3~5년이 17%, 5~10년이 12%, 10년 이상이 10%, 1~3년이 9%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한반도 관련 공공외교 업무에 비교적 경험이 적다고 판단되는 1년 미만 종사자가 3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3년 이상 종사하

I
II
III

고 있는 응답자가 60%을 차지하고 있어 응답 내용의 유의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4〉 업무 경력



나.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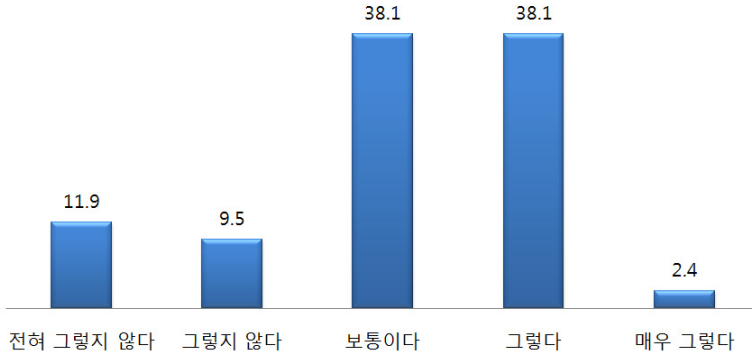
(1) 한국의 공공외교 일반

(가) 한국의 공공외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긍정적

전문가 인식조사의 응답자들에게 한국의 공공외교에 대해 ‘외교적 자산을 활용하여 상대방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시켜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국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여, 자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일컫는다’라고 정의를 제시한 후, 한국이 그 정의에 해당하는 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보통이다’와 ‘그렇다’가 각각 3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 11.9%, ‘그렇지 않다’가 9.5%, ‘매우 그렇다’가 2.4%를 차지하였다. 조사 결과,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의 공공외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5〉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 성과 평가

(단위: %)



(나) 한국 공공외교: 목표는 국가위상 제고, 추진주체는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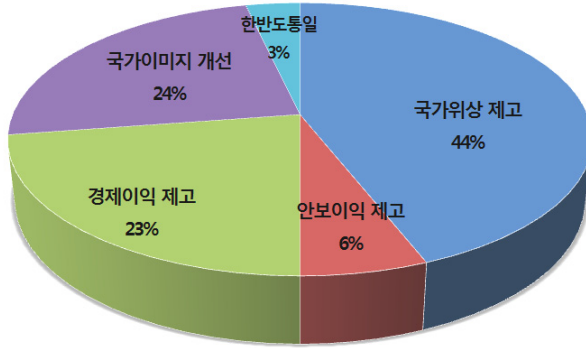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對일본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에 대해서는 ‘국가 위상 제고’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고, ‘국가 이미지 개선’이 24%, ‘경제이익 제고’가 23%, ‘안보이익 제고’가 6%, ‘한반도 통일’이 3%로 그 뒤를 이었다. 조사 결과는 한국의 공공외교가 한반도 통일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일본 전문가들의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다른 국가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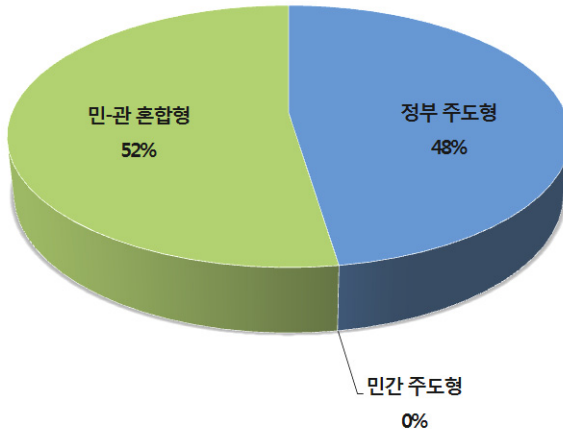
III

〈그림 II-6〉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



또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추진 체계를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정부 주도형,’ 민간이 중심이지만 정부가 일정부분 재정 지원을 하는 ‘민간 주도형,’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민·관 혼합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과반수의 응답자가 ‘민·관 혼합형(52%)’이라고 응답하였고, ‘정부 주도형’이 48%의 비율을 보였다. 응답자 중에서 민간 주도형이라는 응답이 전혀 없었다. ‘민간 주도형’이라는 응답이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민간 주도의 공공외교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공공외교가 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11-7〉 한국 공공외교의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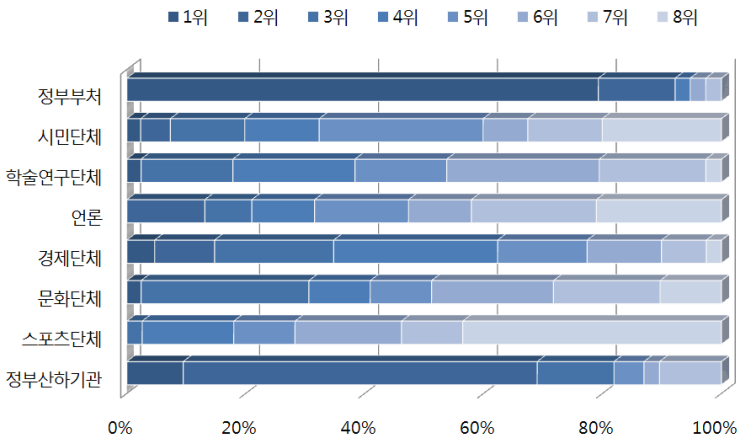
(다) 한국 공공외교: 주요 행위자는 정부부처, 수단/자원은 문화예술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주요 행위자에 대한 예시를 정부부처, 시민단체, 학술연구단체, 언론, 경제단체, 문화단체, 스포츠단체와 정부 산하기관을 선택지로 제시한 후,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에 대한 순위를 기입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정부부처가 가장 높은 비율로 1위에 올랐다. 그 뒤를 이어 정부 산하기관이 2위, 3위가 경제단체로 나타났다. 반면 스포츠단체는 7위에 그침으로써 스포츠단체를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설문대상자들이 한국 공공외교의 추진 체계가 민·관 혼합형과 정부 주도형이라는 사실과 함께 정부부처 혹은 정부 산하기관을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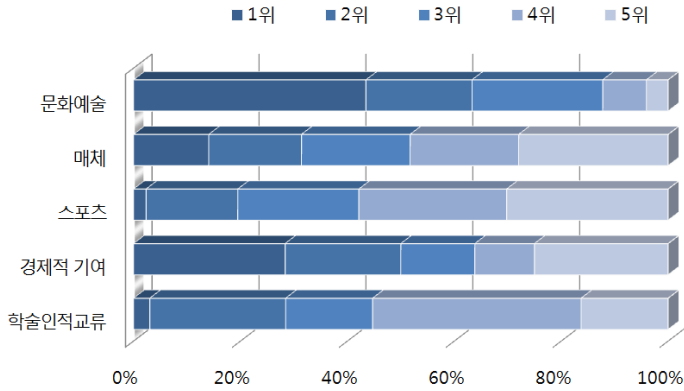
한편 한국이 추진하는 공공외교의 수단이 무엇인가를 문화예술, 매체, 스포츠, 경제적 기여(ODA), 학술·인적 교류의 예시를 제시하여 순위대로 나열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위는 문화예술이었으며 2위는 경제적 기여, 3위가 매체, 4위는 학술·인적 교류, 5위는 스포츠라는 응답을 얻었다. 또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이 무엇인가를 문화예술자산, 지식자산, 인적자산, 스포츠자산, 경제자산의 예시를 제시하여 순위대로 나열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문화예술자산이 1위, 경제자산이 2위, 인적자산이 3위, 스포츠 자산이 4위, 지식자산이 5위로 나타났다.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과 자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많은 일본 전문가들이 문화예술과 경제적 기여를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이 결과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가별로 거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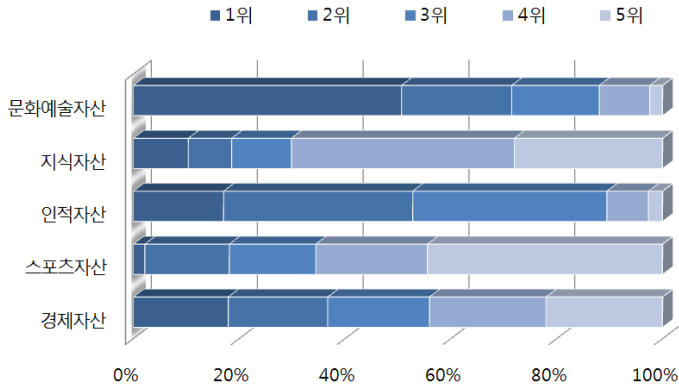
〈그림 II-8〉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



〈그림 II-9〉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



〈그림 II-10〉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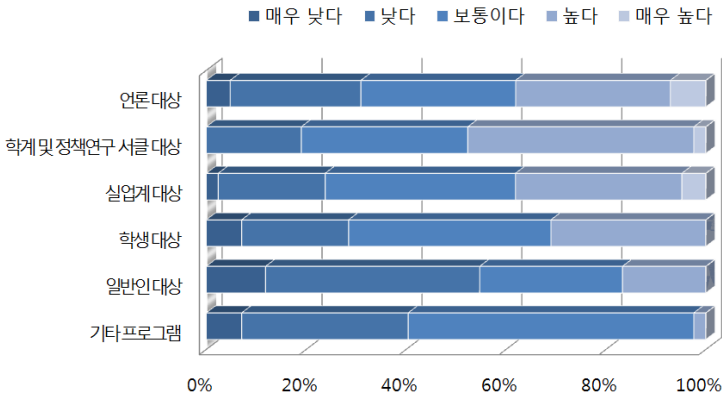
(라) 한국 공공외교: 동북아·북미 중심 프로그램과 학계·정책 연구중시

한국의 공공외교 프로그램 각각의 비중에 대한 질문에서 ‘높다’ 이상의 응답만을 보았을 경우, 학계 및 정책연구 서클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론 대상과 실업계 대상, 학생 대상,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기타 프로그램은 가장 낮은 비중으로 평가되었다. 언론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매우 높다’

I
II
III

는 응답이 다른 프로그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높다’와 ‘매우 높다’에 대한 응답보다는 ‘낮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한국 공공외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국적에 따라 공공외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즉 한국 전문가들보다 일본 전문가들이 모든 공공외교 프로그램에 대해 ‘높다’의 응답 비중이 많다는 점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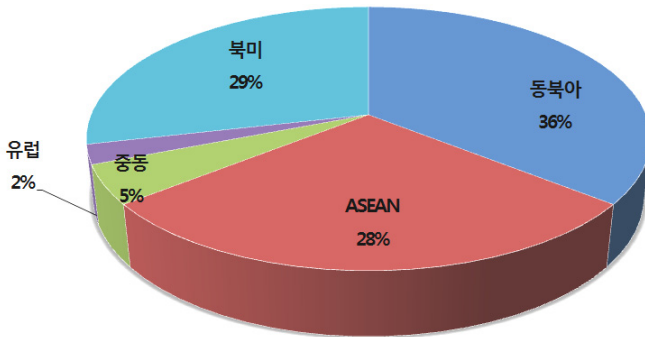
〈그림 II-11〉 한국 공공외교 프로그램별 비중



한편 한국이 추진 중인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지역을 묻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동북아(38%)라고 응답하였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응답은 ‘북미(29%)’였다. 이와 근소한 차이를 보인 3순위는 ‘ASEAN(28%)’이었으며, 그 외에는 중동이 5%, 유럽이 2%의 비율을 보였다. 동북아시아와 북미, ASEAN에 한국의 공공외교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미국, 중국, 러시아팀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일본팀의 조사결과는 중국팀의 조사결과와 비슷하게 ASEAN 중시 경향을 보이는 것과 함께 미국팀과 비슷하게 북미를 중요한 대상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 특징이다.

한편 한국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동북아와 함께 ASEAN을 중요 대상으로 인식한 반면, 일본 전문가들은 동북아보다도 북미 지역을 한국 공공외교의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12〉 한국 공공외교의 대상 지역



(2) 한국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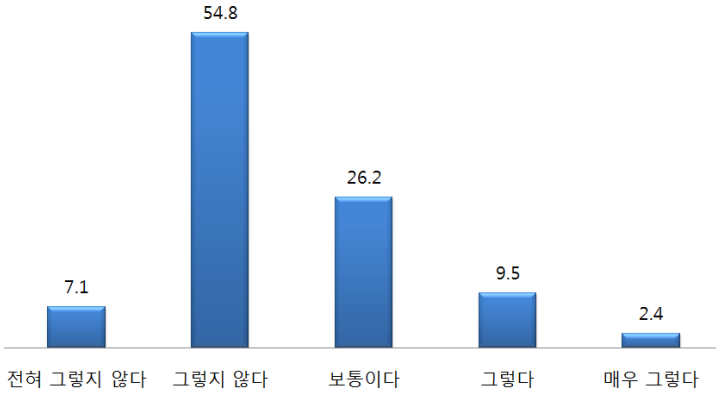
(가)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

응답자들에게 ‘통일공공외교’에 대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상대국 국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부 또는 비정부 행위자들의 의도적 노력, 즉 한국의 통일 정책 및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행해지는 외교활동 등을 포함한다’라는 정의를 제시한 후, 한국이 그 정의에 해당되는 통일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그렇지 않다’가 54.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보통이다’가 26.2%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 밖에 ‘그렇다’가 9.5%, ‘전혀 그렇지 않다’가 7.1%, ‘매우 그렇다’가 2.4%의 응답률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국가들보다 일본이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렸다는 점이 주목된다.

I
II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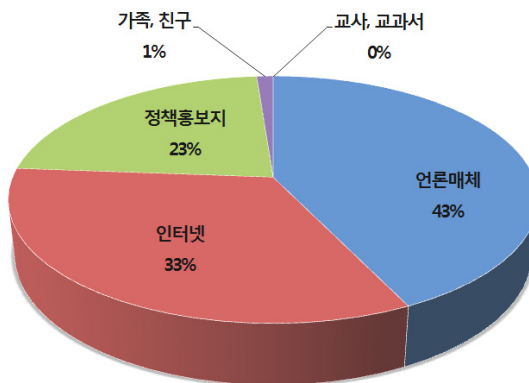
〈그림 II-13〉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평가

(단위: %)



한편 응답자들에게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를 접한 경로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언론매체’라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인터넷’이 33%의 응답률을 보였다. ‘정책홍보지’가 23%의 응답률로 3위에 올랐고, ‘가족·친구’라는 응답이 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즉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사적인 경로 및 교사나 교과서와 같은 교육현장에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를 접한 경험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4〉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를 접한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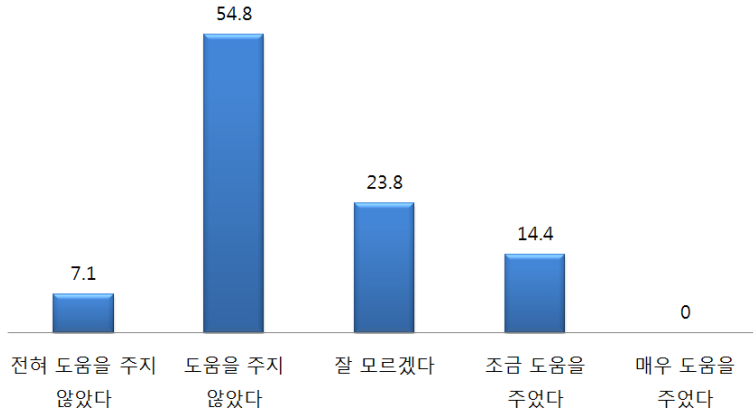


(나) 일본인의 한반도 상황인식에 대한 통일공공외교의 기여도: 부정적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통일공공외교가 일본 국민들의 한반도 상황에 관한 인식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5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잘 모르겠다’가 23.8%, ‘조금 도움을 주었다’가 14.4%,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가 7.1%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일본(61.9%)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림 II-15〉 일본 국민들의 한반도 인식에 대한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기여도

(단위: %)



상기 질문과 관련하여 ‘한국의 공공외교가 일본 국민의 한반도 인식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반응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반도의 안보상황,’ ‘북한 핵 위협,’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 ‘동북아 지역 안정의 중요성,’ ‘북한 체제의 성격’ 등을 주요 영역으로 제시한 후, 이들 선택지 중에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어떤 분야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순위대로 나열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1위를 차지하였고, 2위는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 3위는 ‘북한 체제의 성격,’ 4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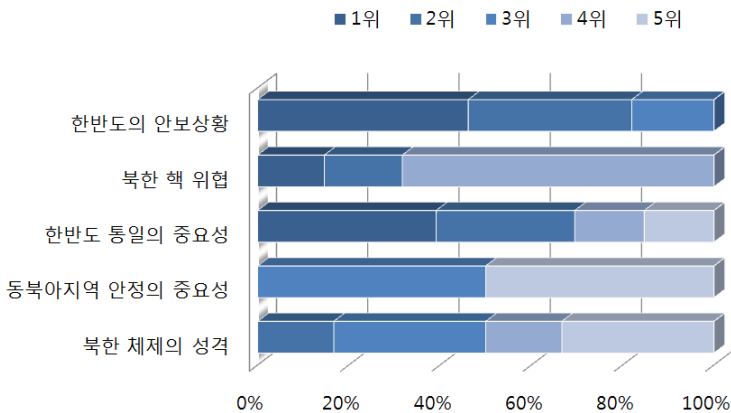
I

II

III

‘북한 핵 위협’이 차지하였다. 한편, ‘동북아 지역 안정의 중요성’은 가장 낮은 5위를 기록하였다. 다른 국가들이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한 ‘북한 핵 위협’에 대해 일본은 낮게 평가하였으며, 반대로 다른 국가들이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한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일본은 두 번째로 높게 평가하였다.

〈그림 II-16〉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일본인의 한반도 인식에 기여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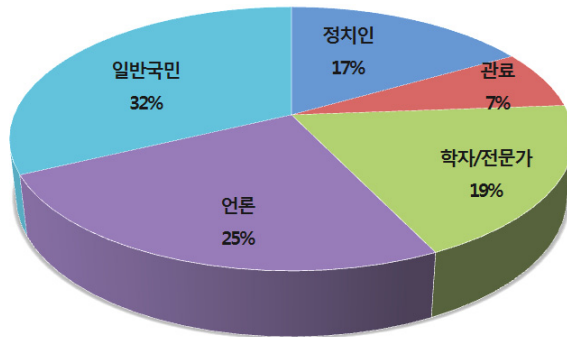


(다) ‘일본국민’을 주요 대상으로 한 통일공공외교의 전개 필요성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정치인, 관료, 학자(전문가), 언론, 일반국민이라는 다섯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 후, 한국이 추진하는 통일공공외교의 주된 대상은 누구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중요도에 따라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일반 국민’이 3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언론’이 25%, ‘학자(전문가)’가 19%, ‘정치인’이 17%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관료’는 가장 낮은 7%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특히 가장 중요한 집단으로 평가된 대상은 미국은 정치인, 일본은 일반국민, 중국은 학자(전문가), 러시아는 언론으로,

모든 국가에서 추진 대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가별로 해당 그룹들의 사회 내에서의 역할과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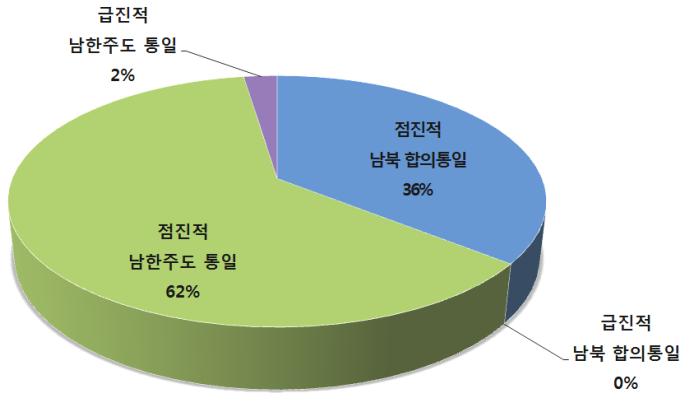
〈그림 II-17〉 한국 통일공공외교가 중시해야 할 추진 대상



(라) 한국 통일공공외교가 상정하고 있는 통일형태: 점진적 남북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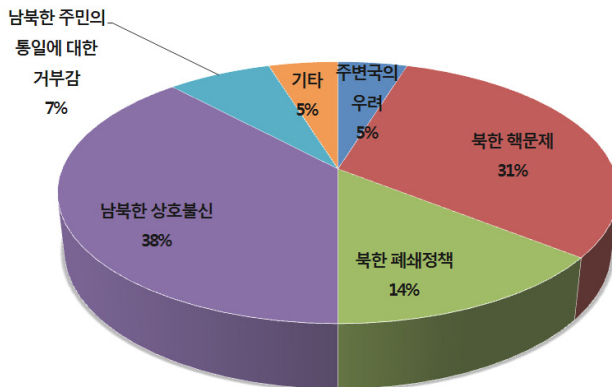
한국이 추진하는 한반도 통일공공외교가 어떠한 형태의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점진적 남북 합의통일,’ ‘급진적 남북 합의통일,’ ‘점진적 남한 주도 통일,’ ‘급진적 남한 주도 통일’의 선택지를 제시한 후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점진적 남한 주도 통일’이라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점진적 남북 합의통일’이 36%의 응답률을 차지했다. ‘급진적 남한 주도 통일’은 2%로 나타났다.

〈그림 II-18〉 한국 통일공공외교가 상정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 형태



한편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추진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남북한 상호불신(38%)’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뒤를 이어 2위의 응답률을 보인 것이 ‘북한 핵문제(31%)’였으며, 나머지는 ‘북한 폐쇄정책(14%),’ ‘남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거부감(7%)’가 그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기타’와 ‘주변국의 우려’가 각각 5%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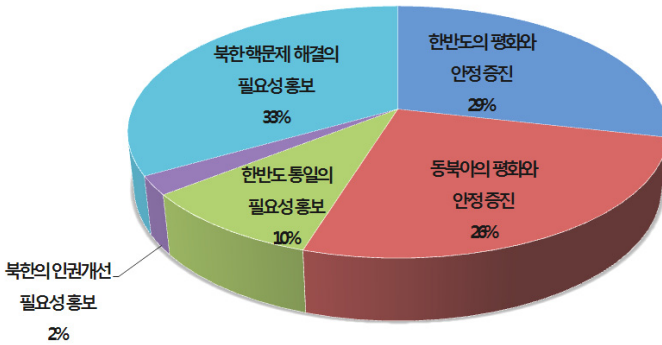
〈그림 II-19〉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장애요인



(마)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 북핵문제 해결 홍보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중 어떤 분야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필요성 홍보’라고 답한 응답자가 33%로 가장 많았고, 2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29%)’이 차지하였다. 3위에 오른 응답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증진(26%)’이었으며,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 홍보(10%)’와 ‘북한의 인권개선 필요성 홍보(2%)’가 차례대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림 II-20)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중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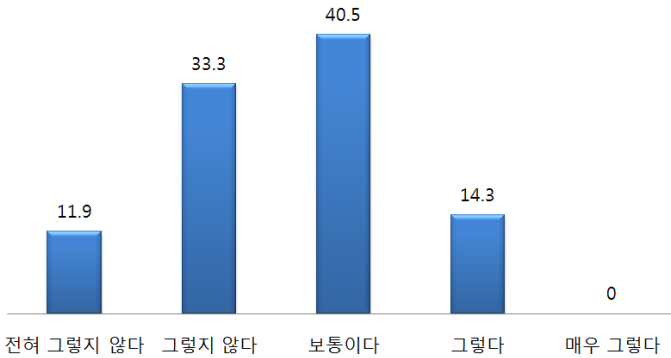


(바) 일본인의 통일지원 유도에 관한 통일공공외교의 기여도: 긍정적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가 일본 국민들이 한반도 통일에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하는데 효과적이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보통이다’가 40.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렇지 않다’가 33.3%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 ‘그렇다’가 14.3%, ‘전혀 그렇지 않다’가 11.9%의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응답자들 중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에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부정적으로 응답(45.2%)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의 조사결과

와 비교해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일본 국민들의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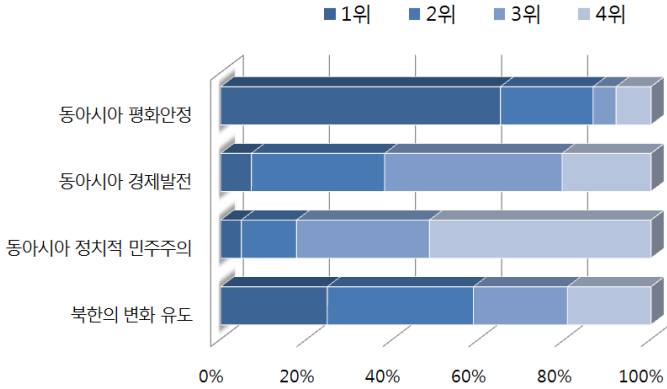
〈그림 II-21〉 일본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원 유도에 관한 통일공공외교의 기여도
(단위: %)



(사)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중점을 두어야 할 목표: 동아시아 평화/안정

응답자에게 ‘동아시아 평화안정,’ ‘동아시아 경제발전,’ ‘동아시아 정치적 민주주의,’ ‘북한의 변화 유도’라는 네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이 중에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중점을 두어야 할 목표를 1위부터 4위까지 중요도에 따라 순위대로 나열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평화안정’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북한의 변화 유도’가 2위, ‘동아시아 경제발전’이 3위로 그 뒤를 이었으며, ‘동아시아 정치적 민주주의’는 4위로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모든 국가들이 ‘동아시아 평화안정’과 ‘북한의 변화 유도’를 비롯해서 1위부터 4위까지 같은 순위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주력해야 하는 정책적 지향점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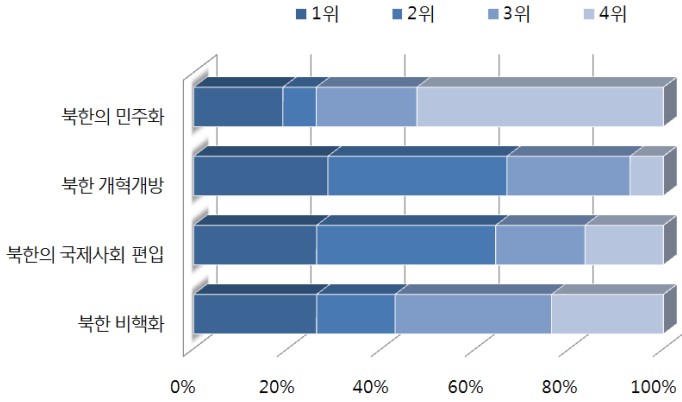
〈그림 II-22〉 한국 통일공공외교가 중점을 두어야 할 목표



(아) 북한의 변화를 위한 한국 공공외교의 추진 중점: 북한의 개혁/개방

‘북한의 민주화,’ ‘북한 개혁개방,’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북한 비핵화’라는 네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 후,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하도록 한 결과, ‘북한 개혁개방’이 1위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뒤를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과 ‘북한 비핵화’가 이었으며, ‘북한의 민주화’는 가장 낮은 4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 개혁개방’과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등 정책부문별 중요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민주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나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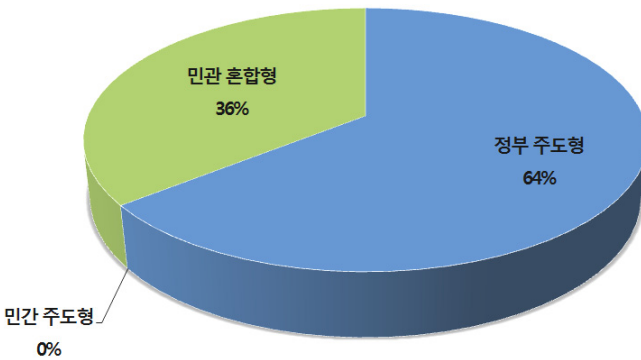
〈그림 II-23〉 북한 변화 유도를 위한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추진 중점



(자) 한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체계는 정부중심, 추진주체는 정부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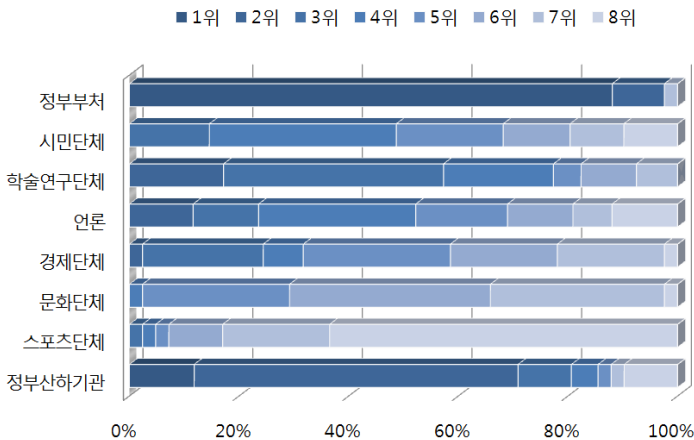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통일공공외교의 추진체계가 가진 특징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정부 주도형’이라는 응답이 64%로 나타났으며, ‘민·관 혼합형’이라는 응답은 비교적 낮은 36%로 나타났다. 한편 ‘민간 주도형’이라는 응답이 없다는 점에서 민간 차원의 통일공공외교 노력이 증대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림 II-24〉 한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체계의 특징



한편 정부부처, 시민단체, 학술연구단체, 언론, 경제단체, 문화단체, 스포츠단체, 정부산하기관을 제시한 후,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통일공공외교의 핵심 주체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하게 한 결과 정부부처가 1위를 차지했으며, 정부산하기관이 2위, 학술연구단체가 3위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시민단체, 언론, 경제단체, 문화단체가 이었으며, 스포츠단체가 8위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즉 ‘정부부처’가 핵심적인 추진 주체라는 응답이 절대적인 비중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정부산하기관’이 두 번째로 중요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림 II-25〉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핵심 추진 주체



(차) 과거 15년간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평가: 대체로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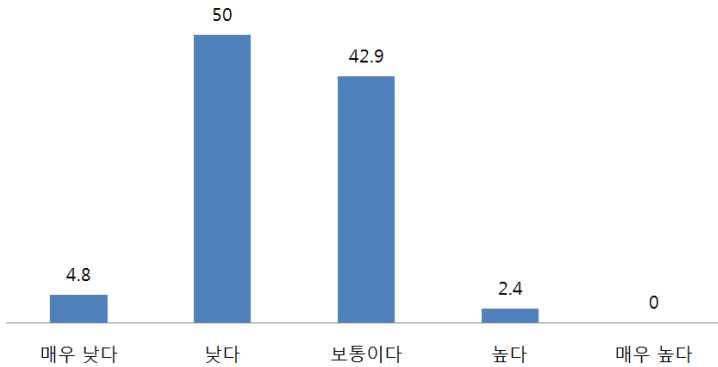
응답자에게 ‘매우 낮다(1)’부터 ‘매우 높다(5)’까지 다섯 개의 척도점수를 제시한 후, 지난 15년간 한국이 추진해왔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해당 점수에 표시하도록 한 결과, ‘낮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50%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라고 반응한 응답자가 42.9%로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매우 낮다(4.8%),’ ‘높다(2.4%)’

I
II
III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보면, 일본(54.8%)과 미국(53.3%)이 가장 강력하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이어서 중국(31.6%)과 러시아(27%) 순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26〉 지난 15년간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성과에 대한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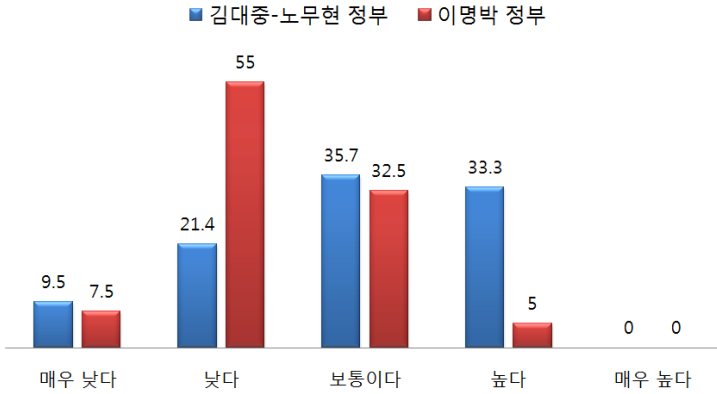


(가) 정부별 통일공공외교 성과: 진보정부 긍정 VS 보수정부 부정적

통일공공외교의 성과를 대북정책의 노선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로 구분하고, 그 평가를 1부터 5까지의 척도점으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그 결과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높다’라는 반응이 33.3%, ‘보통이다’라는 반응이 35.7%, ‘낮다’가 21.4%, ‘매우 낮다’가 9.5%로 나타났다. 한편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낮다’가 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보통이다(32.5%),’ ‘매우 낮다(7.5%),’ ‘높다(5%)’가 차례대로 그 뒤를 이었다. 일본 전문가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긍정(33.3%)과 부정(30.9%)의 평가가 거의 동등한 반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55%)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II-27〉 정부별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성과 평가

(단위: %)



(3) 한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 대체로 긍정적 평가

응답자에게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 대해, ‘직접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외교정책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정세 및 북한 핵문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통일에 관련된 주변국 국민들의 인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외교를 일컫는다’라는 정의를 제시한 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일련의 노력들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효과적이지 않다’가 29.3%로 2위를 기록하였으며, ‘매우 효과적이지 않다(9.8%)’와 ‘효과적이다(4.9%)’가 그 뒤를 이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 모든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일본 전문가들이 ‘보통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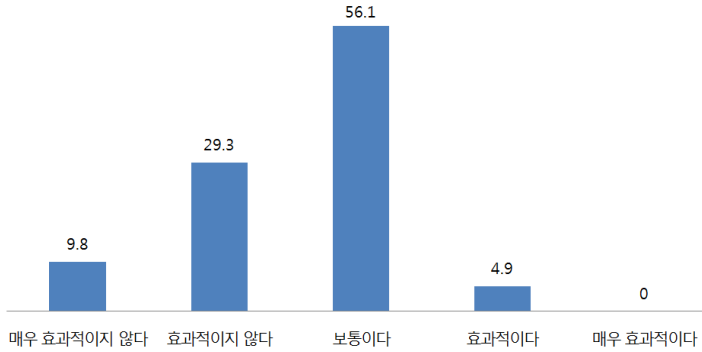
I

II

III

〈그림 II-28〉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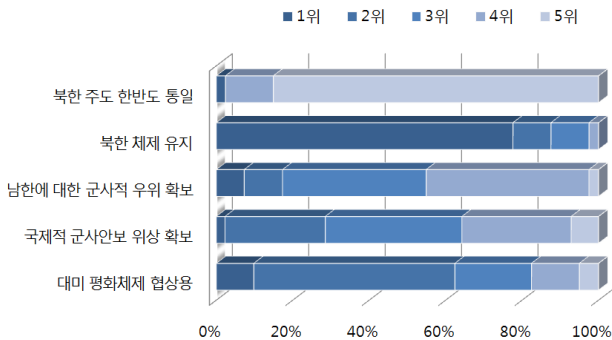
(단위: %)



(나) 북한의 핵개발 의도 평가: 주요 목적은 ‘체제유지’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 ‘북한 체제 유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 확보,’ ‘국제적 군사안보 위상 확보,’ ‘대미 평화체제 협상용’이라는 5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북한의 핵개발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중요도에 따라서 선택지에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그 결과, ‘북한 체제 유지’가 1위를 차지하였고, 대미 평화체제 협상용이 2위, 국제적 군사안보 위상 확보가 3위,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 확보가 4위로 나타났다.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이라는 응답은 가장 낮은 5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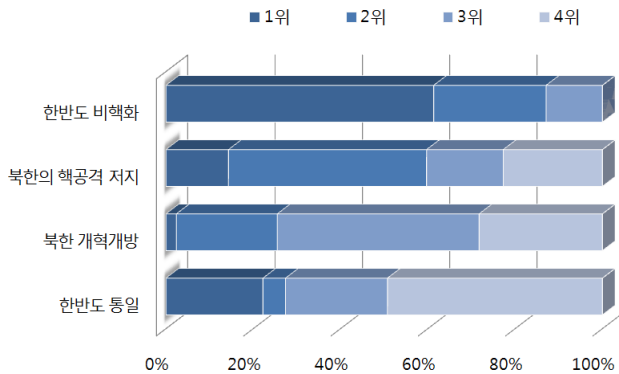
〈그림 II-29〉 북한의 핵개발 의도



(다)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의 주요목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공격 저지,’ ‘북한 개혁개방,’ ‘한반도 통일’이라는 4가지 선택지를 제시한 후, 한국이 추진 중인 북핵 관련 공공외교의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선택지의 순위를 매기도록 한 결과, ‘한반도 비핵화’가 1위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한반도 통일’이 2위, ‘북한의 핵공격 저지’가 3위로 나타났으며, ‘북한 개혁개방’이라는 응답은 가장 낮은 4위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국가들에서 후순위에 불과한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서는 2위로 나타난 사실이 주목되며, 이는 일본 전문가들이 ‘한반도 통일’문제와 자국의 국익(안보/경제)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30)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추구하는 목표



(라) 북핵 관련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일본인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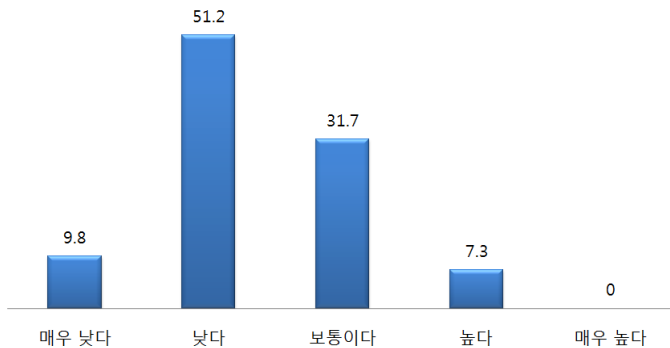
응답자들에게 ‘매우 낮다(1)’부터 ‘매우 높다(5)’까지의 척도점수를 제시한 후,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한국의 공공외교가 일본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낮다’고 응답한 사람이 51.2%로 가장 많았으며, 31.7%의 응답자가 ‘보통이다’라고 응답



하였다. 그 뒤를 이어 ‘매우 낮다’가 9.8%, ‘높다’가 7.3%를 기록하였다. 북한 핵관련 한국의 공공외교가 응답자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다’ 또는 ‘낮다’고 응답한 부정적인 평가는 러시아가 62.2%, 일본이 61%, 미국이 42%, 중국이 31.5%로 모든 조사대상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일본과 러시아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미국과 중국의 경우와 분명하게 비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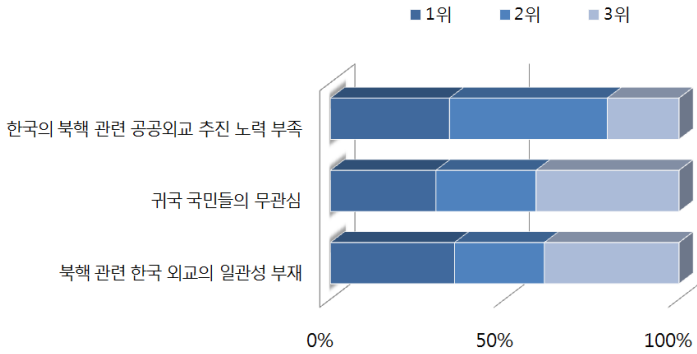
〈그림 II-31〉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일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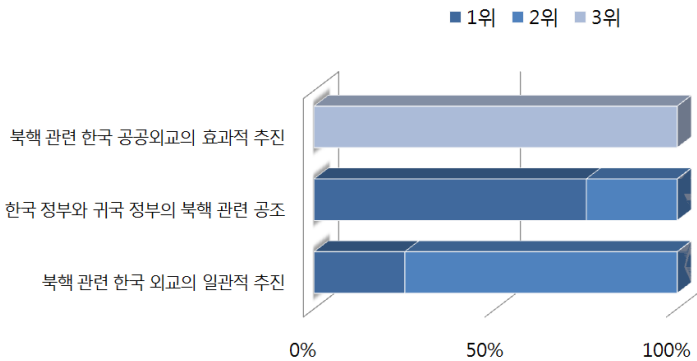
상기 질문과 관련하여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일본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낮다’고 반응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 추진 노력 부족,’ ‘일본 국민들의 무관심,’ ‘북핵 관련 한국 외교의 일관성 부재’라는 3가지 선택지를 제시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도록 한 결과,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 추진 노력 부족’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북핵 관련 한국 외교의 일관성 부재’가 그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3위는 ‘귀국 국민들의 무관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 특히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 ‘한국의 노력 부족’을 북핵 관련 한국의 공공외교가 일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낮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II-32〉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일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낮은 이유



한편,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일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고 반응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북핵 관련 한국 공공외교의 효과적 추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북핵 관련 공조,’ ‘북핵 관련 한국 외교의 일관적 추진’이라는 3가지 선택지를 제시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선택지의 순위를 기입하도록 한 결과,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북핵 관련 공조’가 1위를 차지하였다. 2위는 ‘북핵 관련 한국 외교의 일관적 추진,’ 3위는 ‘북핵 관련 한국 공공외교의 효과적 추진’이었다.

〈그림 II-33〉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일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높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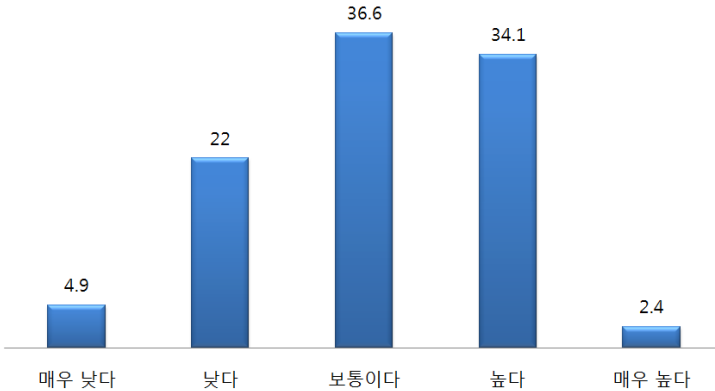
I
II
III

(마)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에의 일본 국내여론 반영도 평가: 긍정적

응답자들에게 ‘매우 낮다(1)’부터 ‘매우 높다(5)’까지의 척도점수를 제시한 후, 일본 정부가 북핵 관련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일본 국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청취·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보통이다’가 36.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높다’가 34.1%로 그 뒤를 이었다. ‘낮다’는 응답이 22%로 3위를 기록했으며, ‘매우 낮다’가 4.9%, ‘매우 높다’는 2.4%로 나타났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긍정: 36.5%, 부정: 26.9%)을 제외한 미국, 중국 등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응답자들은 자국 정부가 북핵 정책을 수립·수행하면서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에,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일본 국내여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림 II-34〉 북핵 정책 수행 시, 일본 정부의 일본 국내여론 수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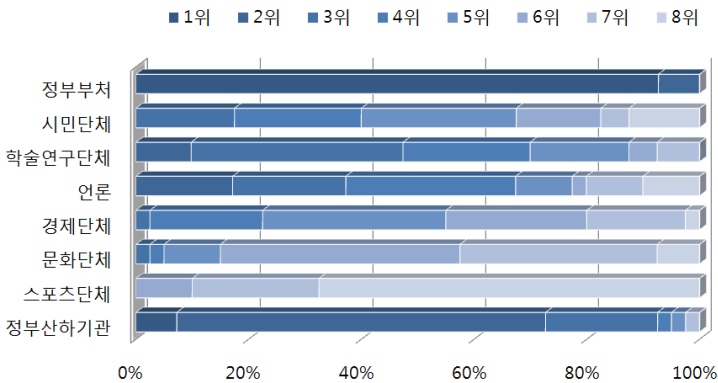
(단위: %)



(바) 북핵관련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체계는 정부중심, 주체는 정부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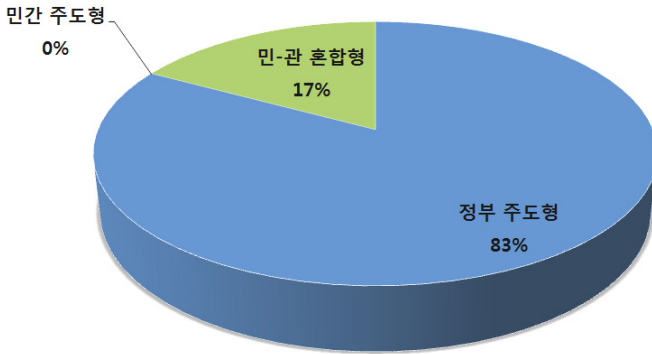
정부부처, 시민단체, 학술연구단체, 언론, 경제단체, 문화단체, 스포츠단체, 정부산하기관을 선택지로 제시한 후,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한국 공공외교 추진의 핵심적인 담당기관 및 주체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도록 한 결과, 정부부처가 1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2위는 정부산하기관, 3위는 학술연구단체, 4위는 언론이었다. 시민단체는 5위를, 경제단체는 6위를 기록했다. 한편, 문화단체가 7위, 스포츠단체는 8위를 기록하였다.

(그림 II-35) 북핵 관련 한국 공공외교 추진 주체



한국이 추진 중인 북한 핵문제 관련 공공외교 추진체계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정부 주도형’이 83%의 응답률을 보였고, ‘민·관 혼합형’이라는 응답이 17%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역시 ‘민간 주도형’이라는 응답은 발견되지 않고 있어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에서도 민간부분의 역할이 제고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36〉 한국의 복핵 관련 공공외교 추진체계 특징



다. 전문가 인식의 특징

(1) 정부 주도형 공공외교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의 추진체계를 정부주도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의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주요 행위자로 정부부처와 정부 산하기관을 가장 높게 꼽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공외교가 정부보다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는 경향과 배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공공외교가 정부중심의 전통적인 외교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의 추진 주체가 스포츠 단체나 문화단체와 같은 민간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정부중심의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의 핵심적인 자산과 수단이 문화예술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민간단체가 정부의 지원 혹은 협력 없이 독자적인 추진주체로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 문화예술 자원을 주요 자산과 수단으로 하는 공공외교

공공외교란 간단히 말하자면 상대국의 호감을 얻기 위한 정부, 민간 차원의 각종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한국이 가장 자신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자산과 수단은 문화예술 자원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 인식조사에 참여한 한일 양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주요한 공공외교 수단 및 자산을 문화예술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이 상대국의 호감을 얻기 위한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 인식조사에서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의 공공외교 수단 및 자산에 대해 ‘경제적 기여 및 경제자산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한국의 공공외교가 문화예술 자원과 경제적 자원이 상호 연계되는 형태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일본인의 한반도 통일 인식 제고에 한계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와 일본 국민들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 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인식 제고에 그다지 기여도가 높지 않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 내에서 일반 국민 및 언론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같은 안보상황을 자국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같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상황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전문가들이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대해 ‘동아시아 평화 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I

II

III

향후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4) 정부별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엇갈린 평가

지난 15년간 한국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성과에 대해 절반 이상(54.8%)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통일공공외교 성과를 비교한 결과,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통일공공외교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5%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결과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공공외교가 햇볕정책과 같은 정책의 성공 및 실패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라도 정부 및 민간 교류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던 사실을 일본 전문가들이 높이 평가한 반면, 이명박 정부의 통일공공외교가 북한에 대한 강경입장과 민간 교류의 중단 사태, 그리고 남북관계의 악화라는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5)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對일본 공공외교의 필요성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일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약하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 그 중요한 이유로서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 추진 노력 부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북핵 관련 공조’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더해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북핵 정책 수행 시에 다른 국가들보다도 일본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반영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핵 관련 한국의 공공외교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우선 한국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對일본 공공외교가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며, 또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북핵 관련 공조를 위한 對일본 공공외교의 추진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와 한반도 통일의 양립 가능성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가 한반도 통일을 ‘1~3년’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은 향후 한국이 對일본 공공외교를 추진함에 있어 희망적인 기대를 낳게 한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의 현행 對일본 공공외교와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서 일본 전문가들은 모두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를 선택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한반도 통일이 한반도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필수적이며, 특히 현재 일본의 실제적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 요인을 염두에 둔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앞서 한국의 공공외교가 문화예술을 주요 자산 및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는 분야에서는 여전히 ‘안보군사 분야’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기고, ‘문화교류 분야’가 9%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았을 때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는 민간 교류뿐만 아니라 정부 교류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III

결론: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에 주는 시사점

1. 한국의 對일본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평가

가.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 입장과 정책 평가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 대한 신뢰성, 호감의 유지, △대북정책에 대한 공조 유지, △통일에 대한 지지 확보 등의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한국에 대한 신뢰, 호감 유지의 측면에서는 한일관계의 주기적인 악화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비교적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양호하게 유지되었지만 참여정부 후반, 그리고 이명박 정부 종반에는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사 문제 등 한일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는 통일외교의 측면에서 평가할 때는 한일 간의 갈등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관리하면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 역시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가 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향후 통일공공외교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한일 간의 신뢰관계 구축의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북정책에 대한 공조 유지의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한에 대해 화해협력정책을 지속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다지 일본과 정책 공조를 이루지 못하였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및 천안함 폭침 사건 등으로 한일 간의 대북정책공조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한일 간 군사협력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저도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필요성에 한일 양국이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한일관계 속에서 확인할 기회는 적었

으나, 2005년 미일 간의 2+2 공동발표문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식지지 입장이 확인된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한일 간의 공동선언 및 공동발표문에서 통일에 대한 지지가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한국의 통일정책이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우선시 한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지지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2 공동발표문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모두를 중시하고 있다.

넷째, 북핵문제 등 대북정책에 대한 공조와 한국의 통일 당위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 지지를 이끌어낸 것은 성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일본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이미지는 아직 약 40% 정도가 불안해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한국의 통일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통일한국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도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 대한 신뢰 부족이 통일한국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연결되어 통일한국이 동북아지역에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평가

(1)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체계 평가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에 나타난 특징은 수행 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의 전략적인 목표 설정, 추진 주체, 자원 간의 상호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목표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는 4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다. 둘째

는, 동북아 지역의 비핵화 및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이다. 셋째로,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한반도 통일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과 일본 문화교류의 확대이다. 한국의 對실 일본 통일공공외교의 목표 중에서 일본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인 납치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한반도 통일이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추진 주체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는 정부 차원, 1.5트랙, 민간 차원의 주체들에 의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추진 주체들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활동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반면에 정부 차원에서는 대북 관계, 중국 및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더해, 각 정부의 이념성향에 따른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일관성 있는 對일본 통일공공외교가 전개되고 있지 않다. 또한 학계에서도 일본인 납치문제와 한반도 통일의 관련성에 대해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추진 주체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성향과 이념의 차이가 추진 주체들 간의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또한 자산과 자원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한국은 지식, 문화, 미디어 자산과 자원을 가지고 지적 교류와 인적 교류, 미디어를 통해 일본의 여론주도층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도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한일 관계가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과거사 및 독도 문제의 악화로 정부 간 교류가 위축되었을 때도 비정부차원에서 여론의 형성이 자유로운 민주 국가 일본의 국민들에게 한국의 공공외교의 자산과 자원이 용이하게 활용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매체와 대상의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는 최근 SNS 등 전통적인 매체와 함께 새로운 글로벌 스페이스 차원에서 일본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의 일본어판 뉴스와 일부 인터넷의 번역서비스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는 오히려 일본 내에서 ‘혐한(嫌韓)’ 감정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지적, 인적 자산 그리고 10여 년 전부터 확산되고 있는 한류로 상징되는 문화 자산, 민주화 경험 등이 정부, 15트랙, 민간 차원에서 對일본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자원/자산을 활용한 對일본 통일공공외교가 통일공공외교로 수렴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앞으로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가 일본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한반도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추진대상측면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들, 여론주도층과 같이 각 구체적인 콘텐츠에 맞는 구체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추진실태 평가

(가) 정부 차원의 추진실태

본 연구의 고찰 분석을 토대로 정부차원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의 추진 실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통일외교 차원에서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한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이며, 그 이전에는 주로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홍보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 시절의 對일본 통일공공외

교도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수준에서 수행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참여정부 시절에는 통일주재관을 활용한 공공외교, 통일캐러반 등 여론 주도층에 대한 홍보,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으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 집중되어 일반적인 일본 국민이 한국 정부가 수행하는 통일공공외교에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가 직접 일본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셋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시작된 본격적인 통일외교에서 한국은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한반도를 상정하여, 한반도와 주변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통일 이후의 한반도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일본 국민들의 통일한국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넷째, 對일본 문화외교는 문화교류 자체에만 중점을 두어 문화교류 속에 통일외교 관련 콘텐츠를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한일문화교류회의를 통한 사업은 단순히 양국의 문화를 서로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한마당’ 공연을 개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또한 이들 수단을 통해 통일 관련 메시지를 발신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세종학당 등을 통해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장(場)을 활용하여 공공외교를 전개하려는 체계적인 접근 노력도 그다지 가지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나) 1.5트랙 차원의 추진실태

1.5트랙 차원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및 통일 관련 공공외교의 추진실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그동안 이들 반민반관, 정부출연 기관

I

II

III

들이 한반도 통일 문제보다는 북한의 핵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의 연구교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북핵문제 증시현상은 한일 양국의 안보환경, 특히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공통 인식이 존재하고 있는데서 그 이유의 하나를 찾을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문제가 한일 양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 한일 양국이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데 더해, 상호 간 공조체제 구축이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5트랙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對일본 공공외교 추진실태를 지식외교, 문화외교, 북핵외교, 그리고 기타 한국학 및 스포츠 외교의 관점에서 간단히 평가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문화외교, 한국학 및 스포츠 외교 관점에서 볼 때 對일본 공공외교 추진 주체는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이 있다. 문제는 상기 對일본 공공외교의 추진주체가 추진하고 있는 對일본 공공외교의 콘텐츠에 한반도 통일 및 통일관련(북핵문제) 내용이 많지 않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예를 들면 국제교류재단이 對일본 공공외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학 진흥사업은 한국의 언어, 문학, 역사, 정치, 경제, 국제관계 등 한국에 관한 강좌를 화상강의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 프로그램은 엄밀히 말하자면 한반도 통일 및 북핵문제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이 추진하고 있는 對일본 공공외교의 내용 역시 한국의 전통문화를 비롯해 한국문학, 미술, 문학, 드라마, K-pop, 게임 등에 관한 對일본 홍보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 및 통일 관련(북핵) 공공외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콘텐츠는 많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식외교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국방연구원, 국제교류재단, 외교안

보연구원, 통일연구원은 對일본 한반도 통일 및 통일관련(북핵문제) 공공외교를 직간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들 4개 기관이 對일본 통일 및 통일관련(북핵문제) 공공외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실태를 간단히 개략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통일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학술회의 등 프로그램은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나아가 통일관련 공공외교 측면에서 볼 때 가장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의 관점에서 볼 때 통일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학술교류사업(국제학술회의, 포럼, 간담회, 워크숍 등)은 한반도의 통일비전, 바람직한 통일방안, 한반도 통일편의 등에 관한 이슈를 일본 정부의 외교관료, 연구자들과 직접 논의·토의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 일련의 학술교류사업이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관계자, 연구자들의 이해 제고 및 지지확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일포럼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지만, 한일 양국의 각종 현안(양국의 국내정치, 동아시아 안보상황, 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¹⁰¹ 또한 연구교류사업(한일포럼)이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 이에 더해 추진 대상이 타 연구기관에 비해 정계, 경제, 사회·문화계 등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점도 주목된다.

¹⁰¹ 2000년 이후 개최된 한일포럼에서 한일 양측이 다룬 주요의제는 역사문제, 중국의 부상, 북핵문제와 한미일 협력, 한일관계, 동아시아의 안보질서 등이며,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의제가 직접적으로 채택된 경우는 없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계가 있는 이슈, 예를 들면 제8차 회의에서 논의된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일 협력'문제와 제18차 회의의 주요논점 중 하나로 채택된 '북한 후계자문제 및 급변사태 시 한중일 협력'문제는 간접적이긴 하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차원에서 전개된 것으로 평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한일포럼의 성격, 즉 동 포럼 참가자가 한일 양국의 국회의원, 전현직 외교부 고위관료에 더해 학계, 경제계, 문화계 등을 총망라하고 있는 점은, 추진대상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많은 경우 상대국(일본) 정부의 고위관료, 정치가,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일연구교류회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동 연구원이 발송하고 있는 PCRМ-Japan 역시 주로 일본의 안보국방 관련 정부관료, 의원보좌관,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다.

셋째, 한국국방연구원이 일본 방위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일연구교류회의는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PCRМ-Japan 역시, 공공외교 차원에서 최종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내걸고는 있으나 ‘한반도 통일’문제보다는 한국의 안보국방, 한미동맹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국방연구원이 주로 안보국방문제에 관한 특화된 연구기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한국국방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학술사업이 적극적인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다고는 평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의 학술사업이 직간접적으로 한반도 통일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동 연구원의 ‘한일연구교류회의’는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이 깊은 사안, 예를 들면 ‘북한의 체제위기,’ ‘북한 김정은 지도체제’문제에 관한 논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일연구교류회의에서 논의되는 주요 이슈가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 평가와 한일협력이라는 점은 사실이나, 회의 진행과정에서 한반도 통일문제가 논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2013년도 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통일 비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국 신정

부의 남북 간 신뢰프로세스, 나아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관한 한일 연구자 간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한반도 통일문제가 한일연구교류회의 직접적인 핵심의제로 채택된 사례는 적지만 핵심논점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⁰²

넷째, 외교안보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한일학술회의, 한미일 3자 안보협력회의, 그리고 일본 관서경제동우회와의 연구교류협력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한일학술회의’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한일양국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양국 정부의 외교정책 입안과 추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¹⁰³ 실제로 동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된 사안, 예를 들면 ‘북한의 내부정세 및 대외정책문제’와,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중국, 북한문제’는 간접적이긴 하나 한반도 통일문제를 다룬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일학술회의는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차원에서 볼 때, 한일 양국의 연구자가 한반도 통일문제를 회의의 주요의제로 선정하여 토의, 논의하는 성격의 프로그램이 아니며, 동 회의에서 한반도 통일문제(한반도 평화체제, 급변사태 등)에 관한 직접적인 논의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상정해 볼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한반도 통일 문제를 일본 측과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더해 일본 측과 통일문제를 논의해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도출해 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¹⁰² 한국국방연구원/일본방위연구소 제14차 한일연구교류회의, 2013.7.17.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논의는 지정토론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¹⁰³ 국립외교원, “일본국제문제연구소와 제21차 학술회의 개최,” <www.knd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ifanskorread.jsp?typeID=2> (검색일: 2013.11.11).

다음으로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의 연구교류협력 사업은 한반도 통일문제를 ‘한일학술회의’보다는 ‘한미일 3자 안보협력회의’에서 주로 논의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실제로 2008년 11월에 개최된 ‘제2차 한미일 3자 안보협력회의’는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논의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측과 한반도 통일문제를 다루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한미 양측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회의’ 종료 후, 별도로 한미 간에 ‘한반도 평화체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동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논의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은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¹⁰⁴

(다) 민간 차원의 추진실태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의 추진실태를 민간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한반도 통일문제를 ‘평화’라는 개념과 연계시키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같은 과거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 사회 내에서 지속되고 있는 조총련과 민단의 대립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반도의 냉전 구조는 재일동포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는 시민

¹⁰⁴ ‘한반도 평화체제회의’에는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자 외에 정치가, 한국 정부의 평화체제 고위실무자 등이 참석하고 있으며, 미국 측에서는 외교정책연구소(Institute for Foreign Policy Analysis: IFPA)의 관계자 외에, 미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자, 미 국방부 고위인사, 미 국무부의 한국/동북아 담당 관료, 주한미군 고위 장성 등이 참가하고 있다. 한편, 동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제1세션에서 “Korea Peace Regime: Past and Present,” 제2세션에서 “The Big Picture: Major Priorities and Concerns,” 그리고 제3세션에서는 “Conception of Scope, Timing and Responsibility”에 관해서 상호 논의하였다.

단체 및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평화’에서 찾고 있으며,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실현을 위해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한일 시민사회 포럼,’ ‘한일 NGOs 평화포럼’ 등이 대표적인 추진주체이다.

둘째, ‘청소년’ 중심의 한류 문화외교가 전개되고 있는 점이다. 2000년대 이후 일본 내에서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에 관심을 갖는 일본인, 그 중에서도 일본 청소년들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간에는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대중문화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외교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일 연극 페스티벌,’ ‘한일 콘서트’와 같이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고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문화외교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셋째, 종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주목된다. 우선 종교단체 중에서는 기독교와 통일교가 중심이 되어 앞서 언급한 ‘평화’를 주제로,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공공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일 URM(도시농어촌선교)협의회’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생이라는 목표 하에 남북 간 대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일 양국의 종교단체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역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시는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해 일본의 후쿠오카시와 협력하고 있는데 한반도 종단의 최종단계인 한일 터널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북핵문제와 탈원전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위협과 함께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체로’와 같은 ‘탈핵운동’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의 민간단체는 북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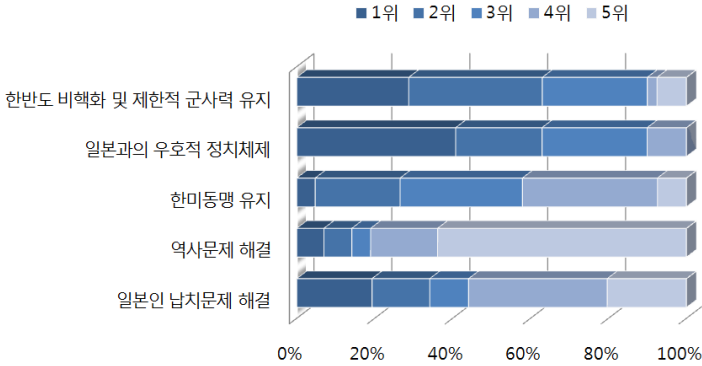
문제의 위험성을 단순히 일본에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핵무기 혹은 원전의 위험성을 일본에 알리는 역할을 일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 하에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일 시민사회반핵포럼’은 동아시아의 비핵화라는 단순한 북한의 핵확산뿐만 아니라 한반도, 일본의 비핵화, 미국의 핵전략에 대한 비판 등의 내용에 대해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다. 전문가 인식조사의 특징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의 통일 조건과 관련하여 통일한국이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정치체제가 될 것과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중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전문가 인식조사는 한일 양국 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및 제한적 군사력 유지,’ ‘일본과의 우호적 정치체제,’ ‘한미동맹 유지,’ ‘역사문제 해결,’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선택지로 제시한 후,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이 중 어떤 조건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택지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한 결과, ‘일본과의 우호적 정치체제’가 1위를 기록하였으며, 2위는 ‘한반도 비핵화 및 제한적 군사력 유지,’ 3위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4위는 ‘한미동맹 유지,’ 5위는 ‘역사문제 해결’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학술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온 일본의 한반도 통일 지지 조건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며, 많은 일본인들이 통일한국의 정치체제의 성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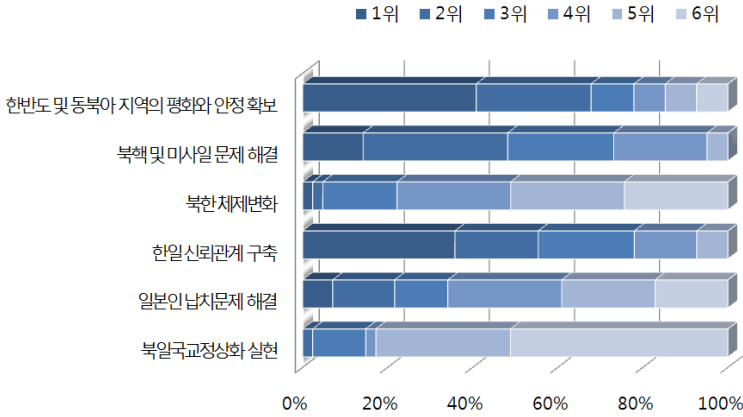
〈그림 Ⅲ-1〉 일본의 한반도 통일 지지 조건



한편, 동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나 있는 또 하나의 특이 사항은 많은 일본인들이 ‘역사문제 해결’을 한반도 통일문제와 상호 연계시켜 생각하고 있지 않는 점이다. 한국 정부가 과거사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상호간 신뢰관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는, 이와 같은 일본인의 역사인식을 충분히 고려하는 형태로 정책방향, 전략이 수립되고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한일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전문가 인식조사에서 확인되었다. 향후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가 중점을 뒀야 할 분야를 질문해 본 결과, 한일 신뢰관계 구축이 2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통일외교 및 통일공공외교가 한일간의 신뢰구축이 전제되지 않으면, 對일본 통일외교 및 통일공공외교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I-2〉 향후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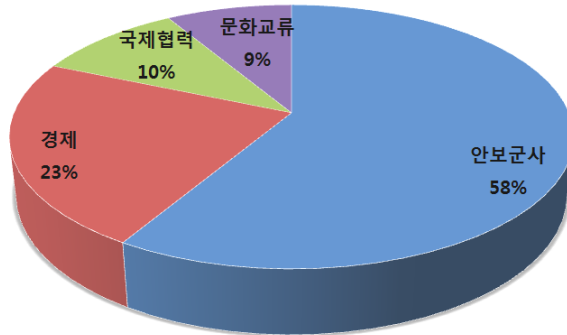


이 설문조사 결과와 일본의 한반도 통일 지지 조건에 관한 설문조사를 같이 생각해 보면 한일 신뢰관계 형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일본의 한반도 통일 지지 조건의 두 번째로 ‘일본과의 우호적인 정치체제’가 선택되고 있다. 우호적인 정치체제는 민주주의 체제, 가치관의 공유 등도 의미할 수 있으나, 통일된 한국이 일본과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면 일본 국민들은 한국의 통일을 지지하기 힘들다는 점이 부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많은 일본 전문가들이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는 분야를 ‘안보군사 분야’라고 답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안보군사 분야’라는 응답이 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경제 분야’가 23%, ‘국제협력 분야’가 10%를 기록하였다. 이 결과는 한반도 통일문제가 정치, 외교, 안보 등의 특성이 강한 이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일본인들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 분야를 안보군사 분야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실은, 앞으로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가 안보군사 분야의 콘텐츠를 강화하는 형태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Ⅲ-3〉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고 있는 분야



넷째,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 및 통일공공외교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일본 국민에게 주지시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고 있는 분야에서 안보·군사적 측면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일본 국민이 북한을 군사적 위협으로 느끼는 비율 및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I
II
III

〈표 Ⅲ-1〉 한국, 일본 국민이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국가

	한국	일본
미국	19%	30%
중국	55%	76%
러시아	21%	54%
북한	77%	77%
한국	-	20%
일본	39%	-
없음	3%	3%
무응답	1%	1%

출처: “日中韓 共同世論調査 信頼感 中韓と温度差,” 『読売新聞』, 2011年 11月 12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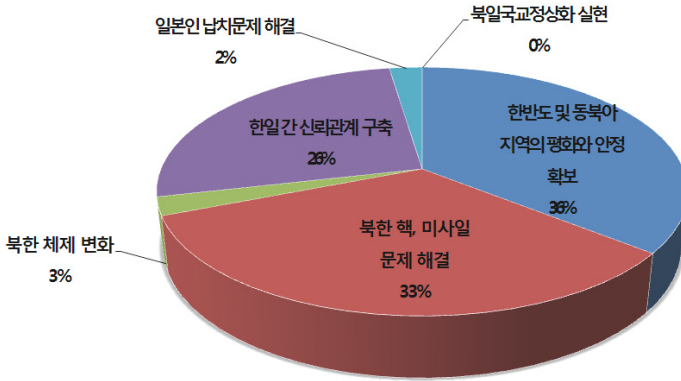
〈표 Ⅲ-2〉 한국, 일본 국민의 양국 간 군사협력에 대한 입장

	한국	일본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함	61%	55%
군사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없음	33%	33%
무응답	6%	11%

출처: “日中韓 共同世論調査 信頼感 中韓と温度差,” 『読売新聞』, 2011年 11月 12日.

다섯째,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를 전개할 필요성을 중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전문가 인식조사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의 현행 對일본 공공외교가 주로 어떠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라는 응답이 36%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이라는 응답이 33%, 세 번째는 ‘한일 간 신뢰관계 구축’이라는 응답이 26%를 차지하였다. 이 외 ‘북한 체제 변화’가 3%,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이 2%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림 Ⅲ-4〉 현행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 중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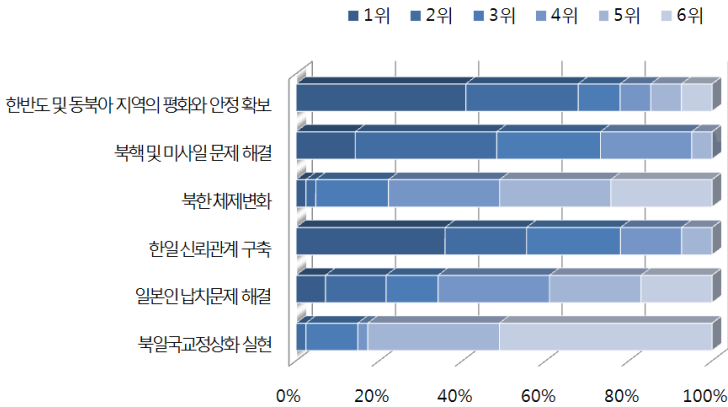
또한 인식조사 응답자에 대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 ‘북한의 체제 변화,’ ‘한일 간 신뢰관계 구축,’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북일국교정상화 실현’이라는 여섯 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이 중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향후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가 1위를 기록하였고, 2위는 ‘한일 신뢰관계 구축,’ 3위는 ‘북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 4위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로 나타났다. 한편 5위는 ‘북한 체제 변화,’ 6위는 ‘북일 국교정상화 실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현행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 중점 분야’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향후 한국의 통일 전략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수립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동시에, 이러한 전제 하에 북한 문제의 해결, 남북·북일·한일 관계와 같은 양국 간 관계의 안정 및 신뢰구축이 한반도 통일을

I
II
III

위한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III-5〉 향후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2. 對일본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의 시사점 및 과제

가.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 입장과 정책 시사점 및 과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있다. 단, 통일한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을 것,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유지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제시한 이들 조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또한 설득해 나가면서, 일본을 남북통일에 대한 확고한 지지 세력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일본의 긍정적인 역할 수행은 경시되어서는 안 될 안보자산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는 다음과 같은 정책 기조 하에 전개되어야 한다.

첫째, 통일문제에 대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통일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는 남북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자주성의 문제와 주변국들과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국제성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으며, 이들 문제는 상호 선후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북한의 핵문제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파악하고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 관계국과 협력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나아가 남북통일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한국이 주도하여 통일문제를 당사자 중심으로 유도해 나갈 때, 일본의 남북통일에 대한 반대 또는 이의 제기는 그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¹⁰⁵

둘째, 對일본 통일외교에서 중요한 점은 한일 간의 신뢰관계라고 평가되었다. 그렇다면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통일외교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한일 간의 신뢰관계는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통일외교가 성공하기 위한 대일외교는 일본 사회, 일본인의 감성,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12년 8월 일본의 천황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죄해야 한다는 언급으로 한일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것은, 천황에 대한 일본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일본에 대한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특히 일본 국민의 한국의 호감도를 양호하게 유지해 나가는 대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셋째, 대북정책에 대해 한일 간에 정책 공조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한일 간에 괴리가 생기면 한국의 통일외교의 설득력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후반기 2006년 5월의 북핵실험 이후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일본과 온도차를 보인 것이 대표적

¹⁰⁵ 박영호, “한국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전략,” pp. 117~118.

인 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위협, 특히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대응방향에 있어서 한일 간의 정세 공유와 정책 공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넷째, 통일한국이 지역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란 점에 대해, 보다 특화된 통일공공외교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일본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강조된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한반도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노력을 하여 통일한국이 역내의 불안정 요인이 아니라라는 점을 통일외교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 통일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자간 틀을 적극 활용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남북통일이 국제적인 협력의 틀 속에서 실현될 것이며, 또한 그것이 자국에게도 가장 바람직한 통일의 형태라고 보고 있다. 일본이 이러한 다자주의적인 접근법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각종 다자안보협력 기구, 예를 들면 ARF, 아세안+3, 6자회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한중일 협력사무국 등과 같은 협력기구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이들 협력기구 등의 장(場)을 통해 한국의 통일정책 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주변국의 협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한일 간 '과거'문제 극복을 통해 일본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 세력으로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일본의 역할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미일 양국은 북한과 수교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 그들의 국력에 걸맞은 정치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일본은 남북통일을 전후한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보통국가화' 목표를 실현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대일정책은 역사, 영토문제 등 '과거'에만 집착하는 형태로 전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과거문제'에 관한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철학에 입각하여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적극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일본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세력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¹⁰⁶

나.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시사점 및 과제

(1)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체계 시사점 및 과제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의 특징 중 하나는 정부 중심의 추진체제 하에서 對일본 통일공공외교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 양국 정부 간 대화에서 한반도 통일문제가 직접 거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양국 정부 간 대화에서는 주로 대북정책에 관한 정책 공조와 인식 공유에 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한반도 통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점은 한국 정부의 대일정책이 일정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성과가 한국 정부 차원, 1.5트랙 차원, 나아가 민간 차원의 상호 연계 하에 달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 정부 차원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의 체계를 보면, 정부의 관련 부처 간 정책을 조율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부 및 그 산하기관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대일 통일공공외교 관련 부서의 정책적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문화외교 부문과 지적 교류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기관들의 상호 협조체제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관련 부서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과제

¹⁰⁶ 이영일, “한반도 통일과 일본의 역할,” 『동북아 연구』, Vol. 11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1993), pp. 71~73.

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반민반관, 정부 출연기관이 전개하고 있는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추진 체계 역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한일포럼’의 경우,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한반도 통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제를 다루는 경우는 부정기적이다. 또한 한국국방연구원과 외교안보연구원의 경우도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차원에서 볼 때는 통일문제를 핵심의제로 다루는 경우는 많지 않다. 즉 1.5트랙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는 추진체계 면에서는 상당히 정립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반도 통일문제를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취급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통일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외교관료, 민간학자, 연구자들과 국제학술회의, 포럼, 간담회, 워크숍 등 각종 연구교류사업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비전, 바람직한 통일방안, 한반도 통일편의 등에 관해 직접적으로 의견교환 및 논의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문제에 초점을 맞춘 對일본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국제학술회의 등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통일연구원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는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할 과제로 판단된다. 통일연구원이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식적이고 정례화 된 학술교류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민간, 비정부 차원에서는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네트워킹 구축이 중요하다. 비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대규모적이고 국가적인 통일공공외교를 수행하는데 있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를 추진함에 있어 소규모지만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역사

인식을 둘러싼 뒤틀린 갈등 구조가 존재한다. 정부 차원에서 갈등이 계속되더라도 시민사회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구조 속에 함몰되지 않고, 일본의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중심이 되는 이슈는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 등이 될 것이다.

(2)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추진실태 시사점 및 과제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추진실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통일전략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를 초월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라는 시점에 입각해 새로운 통일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한국의 對일본 한반도 통일공공외교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인식조사에서 보듯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대해 ‘동아시아 평화 안정’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가 소위 말하는 한반도 통일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는 한반도 통일에 더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對일본 통일공공외교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 나아가 양자 간 상호 연계성 등의 논리를 개발하여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한국은 한반도 통일 전략에 대한 명확한 정책 기초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일본 정부를 비롯해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한국 정부의 통일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 거의 인지하고 있지 않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나아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중장기 통일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정권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통일전략 기초를 정립하고 일본을 비롯한 관계국에 대해 전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의 목표(시기, 대상 등)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추진체계 관점에서 볼 때 정부 차원에서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를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교부, 문화관광부 등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통일공공외교는 각 부처의 주요 업무와 연관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즉 외교부, 그리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문화예술분야와 학술교류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는 스포츠, K-pop 등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외교가 정부 부처 간 연계 없이 각기 독자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정부 부처 간 공공외교를 총괄하여 전개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여 발생하는 것이나, 그 결과 공공외교가 효율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각 부처의 공공외교 콘텐츠가 중복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무체계적인 공공외교의 전개 양상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물론 민간단체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학술회의 등 프로그램은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나아가 통일관련 공공외교 측면에서 볼 때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것이 곧 체계적으로 정립된 추진체계 하에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및 통일관련(북핵문제) 공공외교가 정부, 준정부기관, 민간단체 내부의 제도적 기반 하에 추진될 필요성에 더해, 이들 모든 수행조직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통일공공외교가 일관성 있고 체계적

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추진 목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는 한반도 통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를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설문조사에서 보듯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의 추진 목표에 대해, ‘한반도 통일’보다는 ‘한반도 비핵화’를 더욱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중시해야함은 물론이지만, 이에 더해 ‘한반도 통일’이라는 목표 하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의 주요목표를 ‘한반도 비핵화’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일본인들의 인식 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낮다’ 51%, ‘보통이다’ 31.7%)되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의 추진 노력과 북핵 관련 일관성 부족을 들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한국의 對일본 북핵 공공외교는 우선 정권 변화에 관계 없는 일관성 있는 북핵문제에 관한 정책 기초를 정립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 이해시키고 지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참고로 설문 조사는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와의 공조체제의 유지가 중요하다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점 역시 對일본 북핵 관련 공공외교 추진 시 고려해야할 사안이다.

넷째, 추진 대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는 그 추진대상을 기존의 일본 정부의 관료, 정치인 등에서 일본 국민, 언론 등으로 확대하여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전문가 인식조사는 한국의 對일본

I

II

III

통일공공외교의 주요 추진 대상이 일본의 정치인, 학자/연구자 보다는 일본 국민, 언론이 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는 일본 정부 관료나 정치가보다는 일본 국민에게 초점을 맞추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의 관료나 정치가가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일본 정부의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공공외교의 추진 필요성이 중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국의 한반도 통일정책 기조에 관한 이해 제고와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지속하되, 對일본 공공외교의 추진대상을 확대하여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일본인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필요성은 전문가 인식조사에서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자국 정부가 특정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본의 국내여론을 중시하며, 또한 여론을 수렴하는 형태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국민들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본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보통이다’ 36.6%, ‘높다’ 34.1%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추진 자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는 문화예술 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한국의 對일본 공공외교는 주로 문화예술 자원을 주요 자산과 수단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외교의 콘텐츠에 한반도 통일 및 통일관련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통일 지지 입장을 이끌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가 ‘효과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인 평가’(54.8%)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외교가 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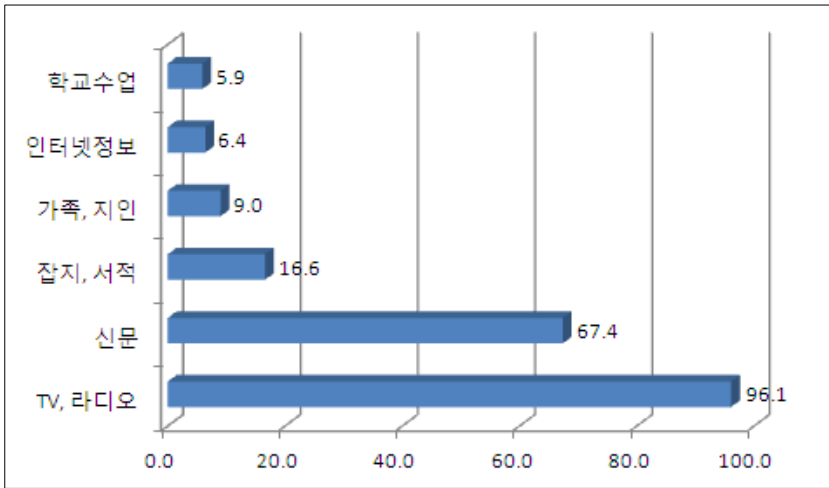
국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인을 상대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일본인들의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그들이 주로 접하는 문화예술 분야에 한반도 통일 관련 콘텐츠를 포함시켜 일본인들이 한반도 통일문제에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일본인들의 인식조사 결과에서 보듯, 일본인들은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해 주로 언론매체(43%), 인터넷(33%) 등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를 통해 한반도 통일문제를 접하게 된 일본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통일공공외교가 일본인들의 한반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54.8%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對일본 통일공공외교가 일본 국민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파급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일본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에 한반도 통일에 관한 콘텐츠를 포함시켜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추진 전략 관점에서 볼 때, 우선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메시지는 일본의 대중매체에 소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對일본 통일공공외교의 추진실태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아직까지 통일공공외교는 홍보 및 전문가에 대한 메시지 전달 수준에 머물러 있다. 對일본 통일공공외교가 일본 국민에게 직접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달 매체가 활용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일본 국민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어떤 매체를 통해 많이 얻고 있는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인식조사에서는 통일공공외교를 접한 경로가 언론매체 43%, 인터넷이 33%로 나타나 있지만, 일반적인 일본 국민은 TV, 라디오,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그림 III-6>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III-6> 일본 국민의 독도에 대한 인식 경로



출처: 일본 내각부 정보공보실 특별여론조사 (2013.8.1.), <<http://www8.cao.go.jp/survey/tokubetu/h25/h25-takeshima.pdf>>.

따라서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는 어떠한 개념에 입각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대중매체에 그 콘텐츠가 소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통일공공외교가 전문가 및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전개 되더라도 그 결과가 대중매체에 소개된다면 일본 국민에 대한 전달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통일공공외교의 내용은 특정 정부의 통일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이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 콘텐츠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공공외교는 그 내용과 실행에 있어서도 일관성과 지속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나가이(中居良文)는 중국의 공공외교를 검토하면서 ① 공공외교의 계속성이 없다 ② 공공외교를 선전공작으로 보고 단기적

인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 ③ 공공외교의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¹⁰⁷ 중국의 공공외교를 일본의 관점에서 비판한 것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의 통일공공외교가 일관성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가장 큰 특징은 각 정부의 대북정책을 홍보하는 것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공공외교가 해당 국가의 국민의 마음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관성과 계속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중심이 되어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추진하되, 그 실행 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설문조사 결과(‘한국의 어떤 분야가 對일본 공공외교에 있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에서 보듯이,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예술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한반도 통일 전략에 대한 일본인들의 이해도가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을 상정할 수 있으나,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가 정부 주도하에서 전개되어 왔다는 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인들은 한반도 통일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입수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정보가 일본인들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인식 및 이해 제고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는 일반 일본인들이 한국의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 차원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하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¹⁰⁷ 中居良文, “中国の公共外交(Public Diplomacy): 批判的検討,” 『中国外交の問題領域別分析研究会 報告書』(일본국제문제연구소, 2011년 3월), pp. 25~26, <www2.jiia.or.jp/pdf/resarch/h22_Chugoku_kenkyukai/all.pdf> (검색일: 2013.11.11).

인들이 특히 한국의 문화예술에 대해 깊은 관심과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예술분야의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정부 또는 준정부 기관에서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방향을 정립하고, 또한 구체적인 콘텐츠를 개발 제시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하에 문화예술분야의 민간단체가 구체적인 공연, 행사 등을 개최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기정·최종건 외. 『한국 공공외교 수행체계 연구』. 외교통상부 연구용역과제 보고서, 2012.12.

이진원 외.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12-05. 서울: 통일연구원, 2012.

통일부. 『1998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1998.

_____. 『2002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2.

_____.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3.

_____. 『2004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4.

_____. 『2006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6.

_____. 『2007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7.

_____. 『2008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8.

_____. 『200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9.

_____. 『2010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0.

_____. 『201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3.

한국국방연구원/일본방위연구소. 『제14차 한일연구교류회의 자료집』. 2013년 7월 17일.

한국국제교류재단. 『2012 연차보고서』. 2013.3.

_____. 『2011 연차보고서』. 2012.3.

金斗昇. 『池田政權의 對外政策と日韓交渉：内政外交における政治經濟 一体路線』. 東京: 明石書店, 2008.

鄭大均. 『韓國의 이미지』. 東京: 中公親書, 2010.

2. 논문

기미야 다다시. “기로에 선 한일관계: 마찰을 넘어 진화를 향해.” 『일본공간』.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2012.12.

- 김태환. “한국 공공외교 수행체계의 ‘통일공공외교’의 분석틀.” 황병덕 외.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Ⅱ):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총괄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박영준. “한반도 통일과 주한미군에 대한 일본의 입장.” 한국국방연구원 정책 토론회 발표 자료. 『한반도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 2012.6.7.
- 박영호. “한국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전략.” 배정호 편.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신중호. “한국의 문화외교 강화를 위한 추진 전략 및 지역별 차별화 방안.” 외교통상부 연구용역보고서, 2009.12.
- 야치 쇼타로. “새로운 세력 균형 형성과 한반도 통일문제.” 최진욱 편저.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연구원, 2011).
- 이영일. “한반도 통일과 일본의 역할.” 『동북아 연구』. Vol. 11. 조선대 동북아 연구소, 1993.
- 이노구치 다카시.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일본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편.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Klinger, Bruce. “Japanese Conservative Victory: A Welcome Development For the U.S.” The Heritage Foundation. December 18, 2012. <<http://blog.heritage.org/2012/12/18/japanese-conservative-victory-a-welcome-development-for-the-u-s/>>.
- Kimiya, Tadashi. “Japanese and South Korean Leaders should Strengthen Public Diplomacy.” AJISS-Commentary. March 21, 2013. <http://www2.jiia.or.jp/en_commentary/201303/21-1.html>.
- 伊豆見元. 『近くて遠い隣人』. 渡辺昭夫編. 『戦後日本の対外政策』. 東京: 斐閣選書, 1985.
- 植田華織. 『韓流と日本人の韓国観: プームがもたらした変化とは』. <http://www.kyotogakuen.ac.jp/~o_human/pdf/association/c2008_02.pdf>.

落合浩太郎. 『北朝鮮の急変事態予測と各国の対応』. 第8回RIPS公開セミナー. 『変化する東アジアの戦略環境への対応』. 東京: 財団法人平和安全保障研究所, 2010.

武貞秀士. 『朝鮮半島情勢と日本の防衛』. 『韓日軍事文化研究』. 第7輯.

中居良文. “中國の公共外交(Public Diplomacy): 批判的検討.” 中國外交の問題領域別分析研究會. 『報告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2011.3.
<http://www2.jia.or.jp/pdf/resarch/h22_Chugoku_kenkyukai/all.pdf>.

章光一(国防部政策室長). 『韓米間戦作権の返還延期の背景とその成功のための韓国側の役割』. 『ROK Angle』. 第1号, 2010年7月19日.
<<http://www.kida.re.kr/eng/pcrm/data/PCRM-Japan%20201007.pdf>>.

3. 기타자료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nda.go.kr/>>.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jpn-tokyo.mofa.go.kr/>>.

주일한국문화원 홈페이지. <<http://www.koreanculture.jp/>>.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kto.visitkorea.or.kr/>>.

한국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 <<http://www.kf.or.kr/>>.

한국국방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da.re.kr/>>.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occa.kr/>>.

해외문화홍보원 홈페이지. <<http://www.kocis.go.kr/>>.

한일문화교류회의 홈페이지. <<http://www.kjcec.or.kr/>>.

한일축제한마당 홈페이지. <<http://www.omatsuri.kr/>>.

『국방일보』.

『노컷뉴스』.

『동아일보』.

『매일경제』.

『세계일보』.

『연합뉴스』.

『한국일보』.

『讀賣新聞』.

일본국 내각부 홈페이지. <<http://www8.cao.go.jp/>>.

일본국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

요미우리 신문사 한일공동여론조사. <<http://www.yomiuri.co.jp/>>.

日韓交流おまつり2013 in Tokyo. <<http://www.nikkan-omatsuri.jp/>>.

연구총서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 (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 (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 (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C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협동연구총서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Ⅰ)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근 외	7,500원
2013-26-01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Ⅱ)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전병근 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외	6,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2 (2013)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기타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약: 지역 및 주변국 차원(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희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11,500원
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외	9,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곤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외교 콘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02)	조한범 외	17,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201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2~2013	7,000원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2013-0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전성훈 외
2013-02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전성훈 외
2013-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전병곤, 이기현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박형중, 박영호, 김동수
2013-05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외
2013-07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이기현
2013-08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박영자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박형중 외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출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장호 외
2012-04(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2012-05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이기현 외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2호	이금순 외

Studies Series

비매품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자료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4,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1.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총괄보고서)
2.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3.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4.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실태